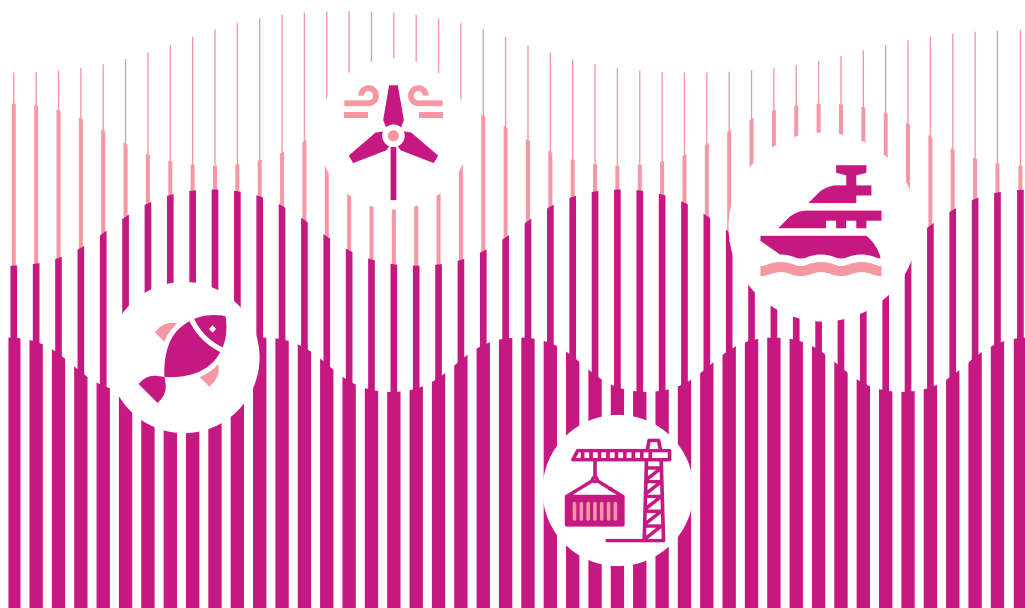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Coastal Cities
Utilizing Marine Cultural Resources

이슬기 · 최일선 · 김예림 · 황태건 · 이상혁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Coastal Cities
Utilizing Marine Cultural Resources

이슬기 · 최일선 · 김예림 · 황태건 · 이상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이슬기, 최일선, 김예림, 황태건, 이상혁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슬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최일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부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예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연구원 공동연구원 황태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이상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진	연구보조원 이상원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Hu Xinghui Lishui University 조교수

연구기간 2024. 4. 8. ~ 2024. 10. 7.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이슬기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1절, 제2장 3절, 제3장 2절 일부, 제3장 3절, 제4장, 제5장 1절
내부연구진	최일선 제5장 2절 김예림 제3장 1절 및 2절 일부 황태건 제2장 2절 이상혁 제3장 2절 일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박성현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 원향미 (재)부산문화재단 선임연구원 박상은 목포문화도시센터 팀장 류선희 해양수산부 사무관
-------------------	---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해양문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정신적·물질적 삶을 형성해 온 귀중한 자산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해양문화가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해양문화자원은 단순히 보존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으며, 현대적 맥락에서의 가치 재발견과 활용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문화자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양문화를 단순한 유산의 보존을 넘어 국민이 향유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살아있는 자원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양문화자원의 실태파악이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이 미비하여,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안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해양문화를 단순한 역사적 유산이 아닌, 전통과 혁신을 잇는 플랫폼이자 지역성과 세계성을 융합하는 매개체로 재해석했다는 점이다.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의 해양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해양문화자산지도를 도출한 것은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해양문화도시의 비전을 "Sea-novation City: 해양성이 스며드는 혁신과 문화의 융합도시"로 제시하며, 문화적 창의성과 경제적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을 구상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해양문화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연안도시의 혁신적 발전과 해양문화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자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값진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목차

정책제안 _ i

요약 _ iii

Executive Summary _ xiii

01	서론 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1.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5
	2. 연구의 방법	8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9
02	연안도시 해양문화자원 유형 진단·평가 _15	
	제1절 해양문화자원의 유형	15
	1. 해양문화의 개념	15
	2. 해양문화자원의 분류와 유형	22
	제2절 국내 주요 연안도시별 해양문화자원 분포 현황	28
	1. 분석개요	28
	2. 분석결과	30
	제3절 종합분석	68

03 문화 연계형 도시활력사업의 동향 및 사례 분석_69

제1절 문화 연계형 도시활력사업의 국내외 정책동향	69
1. 국내 정책동향 분석	69
2. 국외 정책동향 분석	83
3. 소결	93
제2절 지역단위 해양문화도시 사업 사례 분석	97
1. 국내 지역사업 분석	97
2. 국외 지역사업 분석	108
3. 소결	124
제3절 종합분석	126

04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활력 증진 방안_129

제1절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활력사업의 개념 및 특성	129
1. 해양문화도시의 개념과 핵심가치	129
2.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유형과 특성	132
제2절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139
1.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기본방향	139
2.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추진과제	141

05 결론 및 정책제언_149

제1절 결론 및 요약	149
제2절 정책제언	150
1. 법·제도 개선	150
2. 거버넌스 구축	154
3. 비즈니스 수익모델의 지속 개발과 확장	157
4. 전문인력 양성	160

표 목차

〈표 1-1〉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6
〈표 1-2〉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6
〈표 1-3〉 선행연구 현황	11
〈표 2-1〉 해양문화 개념에 대한 접근	21
〈표 2-2〉 유·무형을 구분한 해양문화자원의 분류 체계	22
〈표 2-3〉 주제별로 구분한 해양문화자원의 분류 체계	24
〈표 2-4〉 현대적 자원을 포함한 해양문화자원의 분류 체계	24
〈표 2-5〉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양문화자원의 분류 체계	26
〈표 2-6〉 우리나라 해양문화자원 유형별 자산 현황	34
〈표 3-1〉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별 추진방식	70
〈표 3-2〉 대한민국 문화도시 필수 사업	76
〈표 3-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사업 종합	77
〈표 3-4〉 부처 협업 지역활력타운사업 종합	82
〈표 3-5〉 유럽문화수도 개요	83
〈표 3-6〉 유럽문화수도 선정 기준 및 평가 항목	84
〈표 3-7〉 중국 해양문화산업 중점 분야	86
〈표 3-8〉 중국 해양문화권의 발전 계획	88
〈표 3-9〉 국내 정책동향 종합	95
〈표 3-10〉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목록 및 내용	105
〈표 3-11〉 산동성 고품질 해양관광 촉진 계획	110
〈표 4-1〉 해양문화자원 분류 체계의 요인분석 결과	135
〈표 4-2〉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137
〈표 5-1〉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법안 비교·분석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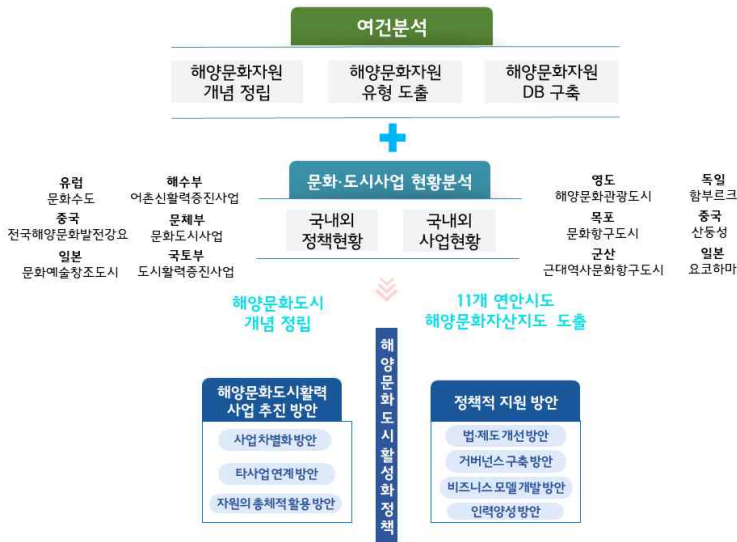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1〉 제1차~제4차 법정 문화도시 중 연안도시 현황	2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7
〈그림 1-3〉 연구 추진 체계	9
〈그림 2-1〉 해양문화 기존연구의 키워드 및 범주	18
〈그림 2-2〉 전국 해양문화자산 지도	31
〈그림 2-3〉 전국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33
〈그림 2-4〉 부산 해양문화자산 지도	36
〈그림 2-5〉 부산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38
〈그림 2-6〉 인천 해양문화자산 지도	39
〈그림 2-7〉 인천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40
〈그림 2-8〉 울산 해양문화자산 지도	42
〈그림 2-9〉 울산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43
〈그림 2-10〉 경기 해양문화자산 지도	44
〈그림 2-11〉 경기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46
〈그림 2-12〉 강원 해양문화자산 지도	47
〈그림 2-13〉 강원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49
〈그림 2-14〉 경북 해양문화자산 지도	50
〈그림 2-15〉 경북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52
〈그림 2-16〉 경남 해양문화자산 지도	53
〈그림 2-17〉 경남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55
〈그림 2-18〉 전북 해양문화자산 지도	56
〈그림 2-19〉 전북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58
〈그림 2-20〉 전남 해양문화자산 지도	59
〈그림 2-21〉 전남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61
〈그림 2-22〉 충남 해양문화자산 지도	62
〈그림 2-23〉 충남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64
〈그림 2-24〉 제주 해양문화자산 지도	65
〈그림 2-25〉 제주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67
〈그림 3-1〉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개소	78
〈그림 3-2〉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지방이양 현황(2005년~2024년)	79

〈그림 3-3〉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80
〈그림 3-4〉 지역활력타운 사업유형 예시 및 주거유형 및 연계지원 가능사업 메뉴판 81	
〈그림 3-5〉 중국의 5대 해양 문화권 위치도	87
〈그림 3-6〉 영도의 주요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강강이예술마을 추진체계	98
〈그림 3-7〉 강강이생활문화센터(마을다방과 마을박물관) 및 강강이안내센터 (선박체험관)	99
〈그림 3-8〉 목포시 문화항구도시 브랜딩 전략	102
〈그림 3-9〉 목포시 문화항구도시 브랜딩을 위한 콘텐츠 제작 현황	104
〈그림 3-10〉 OH·FUN PARK 전경	113
〈그림 3-11〉 중국·룽청 해양 민속 문화의 달 및 어민 축제	114
〈그림 3-12〉 산둥성 칭다오 서해안 신규 금도지안마천료편구	115
〈그림 3-13〉 하펜시티 토지이용 분포현황	121
〈그림 3-14〉 하펜시티 및 엘필하모니 전경	124
〈그림 3-15〉 국내외 문화 연계형 사업 종합분석	128
〈그림 4-1〉 해양문화도시의 핵심 가치	132
〈그림 4-2〉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개념도	133
〈그림 4-3〉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기본방향	140
〈그림 4-4〉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차별화 방안	143
〈그림 4-5〉 문화도시와 도시재생뉴딜의 사업 연계 구조 주요 내용	144
〈그림 4-6〉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에서의 정책사업 간 연계 방안 모델	146
〈그림 5-1〉 「해양교육문화법」 개정방향(안)	154
〈그림 5-2〉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거버넌스 체계(안)	155
〈그림 5-3〉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전담기관 역할(안)	156
〈그림 5-4〉 해양문화 전문인력과 연안도시의 관계	160

정책제안

■ 분석 내용 및 방법



■ 정책제안

1.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해양교육문화법」 개정
2.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3. 비즈니스 수익모델의 지속 개발과 확장
4.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전문인력 양성

요 약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이슬기 · 최일선 · 김예림 · 황태건 · 이상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해양문화 자산에 대한 국민의 향유권을 명확히 함에 따라 과거 관리의 대상이었던 해양문화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그러나 해양문화자원의 산업화 및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 미흡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한계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육성을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전체 문화도시(24개) 중 연안도시가 7개소(약 30%)를 차지하지만 대다수 연안도시가 해양문화자원의 전략적 활용 미흡
 - 이는 해양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 인식 부족, 그리고 이를 현대적 맥락에

서 재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도시의 해양문화 정체성 확립과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통합적 발전 방안 모색
- 기존 인프라, 공간, 정책, 추진체계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해양문화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 이를 위해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개념 정립 및 체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자원 및 연계사업과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2) 국정과제 연계성

-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초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며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추진 중
- 특히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문화도시 육성 강화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사회·경제 활성화 도모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항만재개발 등 연안·어촌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 추진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국정과제인 지역특화형 문화도시 지원 및 해양신산업 육성 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가능
- 지역주도의 해양문화도시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를 통한 통합적 지원방안 마련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연안도시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기능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문헌조사, 현장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양적·질적 방법의 병행
- 전국 연안지역의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 실태분석과 공간분포 특성 파악을 위해 통계DB 구축 및 GIS 기반 분석 수행
- 문화도시 정책동향과 해양문화자원 활용사례 조사를 통해 경제적·문화적·공공성 측면의 시사점 도출 및 현장답사·심층면담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2) 정책화 방법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 정립을 위해 정책협의회 개최
- 해양문화도시의 정책적 개념 정립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 및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거버넌스·민간협력·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 실행방안 구축

3.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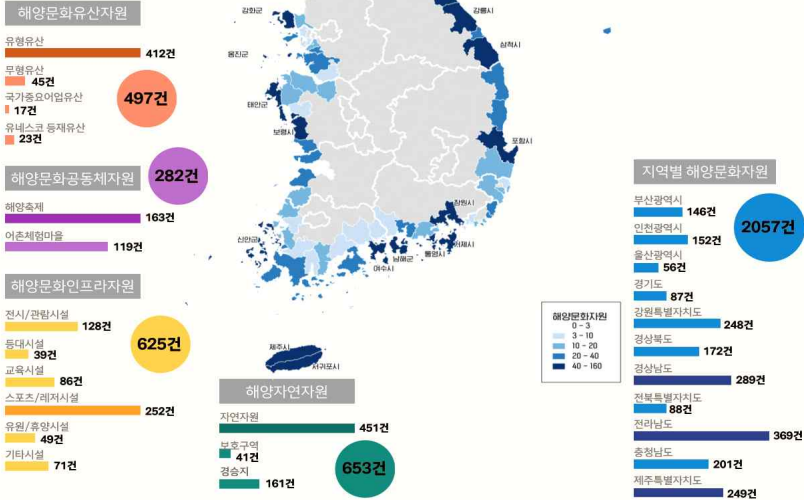
1) 연구 결과 요약

- 해양문화 개념 정립에 있어 바다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 강조

-
- 해양문화는 공동체의 합의와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구성물이자,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시간적 연속성 보유
 - 전통과 혁신(시간), 토착성과 세계성(공간), 보존과 활용(가치)을 중재하고 융합하는 플랫폼으로 기능
 - 인류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문화적 실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적 장(場)으로서의 의미 내포
 - **자원의 활용성 측면에서 해양문화자원의 개념과 유형 설정**
 - 해양문화자원의 개념을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산물을 총칭하며, 보존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이용되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동적이고 실용적인 자원”으로 접근
 - 해양문화자원의 분류체계를 유산자원, 공동체 자원, 인프라 자원, 자연자원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 연안지역이 보유한 해양문화자산 현황 데이터 구축
 -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 기준으로 각각의 시군구 당 평균 27.8건의 해양문화자원이 분포**
 - 우리나라 해양문화자원은 총 2,057건으로 해양문화유산자원이 497건,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이 282건,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625건, 해양자연자원이 653건으로 도출
 -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가장 풍부한 해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울산과 전북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해양문화자산 지도

전국 해양문화자산지도



자료: 저자 작성

- 국내외 문화/도시 재생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
- 국내 정책 동향을 살펴본 결과, 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식 ② 지역 자생력 강화와 민간 참여 확대 ③ 유연한 사업 구조에 따른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의 특징이 두드러짐
- 해외의 해양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도시 활성화를 통해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동시에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조적 공간의 조성을 강조
- 해양문화자원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의 균형,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

■ 해양문화도시의 개념과 핵심가치

- 하나의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해양문화도시에 내재된 다양하고 창조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적 창작과 생산, 소비,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내적 성장 추진 필요
- 해양문화도시에서 바다는 단순한 배경이 아닌, 시민의 사색과 즐거움, 일상적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도시는 인류의 문화적, 사회적 활력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기능
- 해양문화도시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도시 정체성 및 브랜드 가치제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적 증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가치 창출, 도시 회복력 강화가 요구
- 특히 해양문화도시만의 차별화된 가치로서 바다가 지닌 시간성과 공간성을 활용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 지역성과 세계성의 융합, 해양자원의 보존과 활용의 균형 강조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유형과 특성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해양문화도시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사업을 의미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유형은 해양문화자원의 활용으로 창출되는 가치와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어 해양문화 공동체 활력형(Ocean Culture Community Vitalization), 해양문화 랜드마크 재생형(Ocean Culture Landmark Regeneration), 해양문화 혁신 성장형(Ocean Culture Innovation Growth)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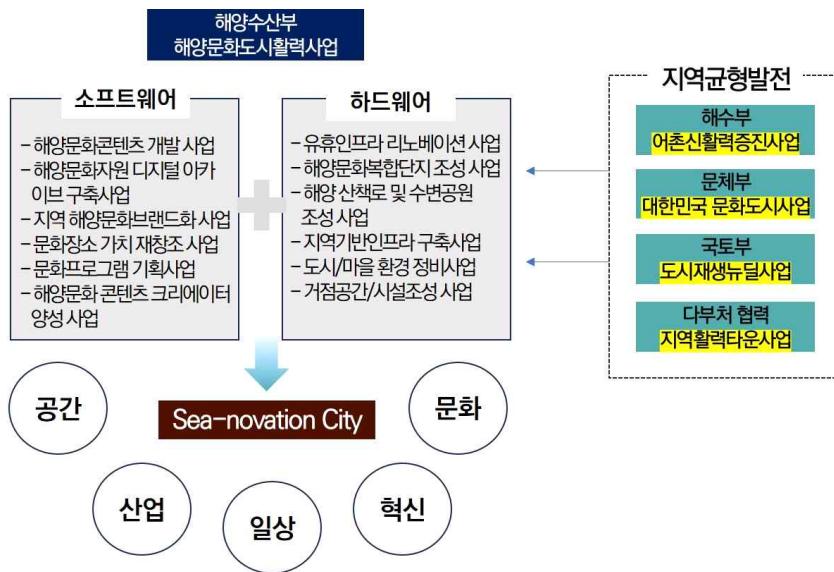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 본 사업의 비전을 “Sea-novation City: 해양성이 스며드는 혁신과 문화의 융합도시”로 설정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각 연안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발굴하

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원 및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의 총체적인 문화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이는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해양문화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도시의 경제적 구조를 혁신하고 해양도시만의 고유한 특색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기본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정책화 방안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은 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제안

-
- 해양문화활력도시 지정 제도 도입 조문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해양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 지역별 해양문화 특성을 반영한 도시발전을 지원하도록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으며,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해양문화도시사업의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중장기적 성과 평가를 통하여 사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적 재정 지원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비즈니스 수익모델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장 필요성 강조

4. 기대 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에 활용
- 특히 11개 연안시도별 해양문화자산지도를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유한 해양문화자원 현황 파악에 활용
- 정부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해양문화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연안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에 기여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해양문화자원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도시재생과 문화산업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 연안도시의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
- 해양문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Coastal Cities Utilizing Marine Cultural Resources

Seulgi Lee · Il-Sun Choi · Ye-Lim Kim · Taekeon Hwang
· Sang-hyeok Lee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and Purpose

-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lega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marine cultural industry by enacting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arine Education and Marine Culture.
- This Act establishes the public's right to access marine cultural assets, creating an avenue to actively leverage these resources, which were previously preserved solely as conservation targets.
- However, the absence of actionable plans for industrializing and utilizing marine cultural resources has hindered the achievement of substantial results.

-
- Meanwhil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omote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designation and cultivation of legal cultural cities.
 - Among all designated cultural cities (24), 7 are coastal cities (about 30%). Despite this, most coastal cities lack strategic utilization of marine cultural resources.
 - This can be attributed to a lack of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the value of marine culture, as well as insufficient ability to reinterpret and utilize it in a modern context.
 -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development plan to establish a marine cultural identity and boost the vitality of coastal cities.
 - The aim is to create synergy through organic links between existing infrastructure, spaces,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ystems, thereby enhancing urban competitiveness through the strategic use of marine cultural resources.
 - To achieve this, the study proposes defining the concept of the Marine Cultural City Vitalization Project and presents a systematic approach for its implementation. This includes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cultural added value through the integrated operation of existing resources and related projects.

2)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first-ever Comprehensive Regional Development Plan (2023-2027)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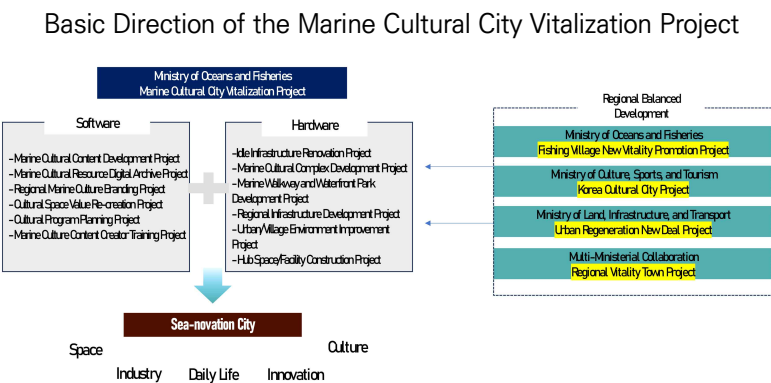
promote self-sustaining growth led by local regions.

- The plan emphasizes strengthening cultural city development by leveraging each region's distinctive cultural resources, aiming to boost social and economic revitalization rooted in unique cultural assets.
- This includes efforts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cultural city projec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astal and fishing village revitalization initiatives, such as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and port redevelopment projects, to drive regional growth.
- The Marine Cultural City Vitalization Project has the potential to create synergy with national policy goals, such as supporting region-specific cultural citie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new marine industries.
- This project seeks to establish a region-led development model for marine cultural cities and develop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through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 By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objectiv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Marine Cultural City Vitalization Project will serve as a new development model for coastal cities.

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ology

- A combina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was employed for this study, including literature review, field research, statistical analysis, and expert consultations.
-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marine cultural resources in coastal areas nationwide, a statistical database was built, and GIS-based analysis was conducted.
- Economic, cultural, and public value insights were derived through trend analysis of cultural city policies and case studies in marine cultural resource utilization, while improvement measures were explored through on-sit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s

2) Policy-making methods

- A policy council was held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direction of the Marine Cultural City Vitalization Project.
- Expert opinions were gather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marine cultural cities and design an implementation framework, with development of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measures and legal/institutional support strategies.
-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a differentiation strategy was established in comparison with similar projects, along with specific execution plans in govern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specialized workforce development.

3. Result

1) Summary

- Emphasis on the Role of the Ocean as a Platform in Defining the Concept of Marine Culture
- Marine culture is a socially constructed concept based on community consensus and participation, possessing temporal continuity that connects past, present, and future.
- It functions as a platform that bridges and merges tradition and innovation (time), locality and globalism (space), and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value).
- Marine culture embodies a dynamic space for the creation of

new human values and ongoing cultural experi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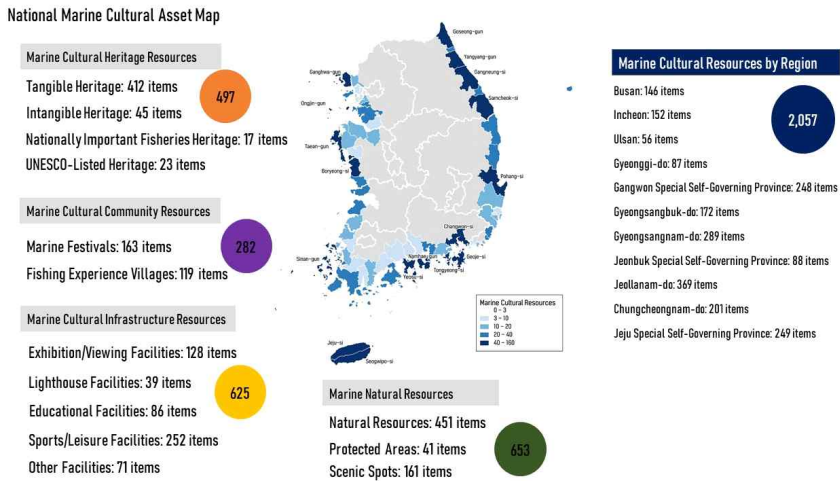
- Establishing the Concept and Types of Marine Cultural Resources from a Utilization Perspective

- The concept of marine cultural resources is approached as "tangible and intangible products form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ocean and humans, serving not only as preservation targets but also as dynamic and practical resources that, when sustainably developed and utilized, can contribute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 Marine cultural resources are classified into heritage, community, infrastructure, and natural resources, and data on the current state of marine cultural assets in South Korea's coastal areas was established.

- Distribution of Marine Cultural Resources across 74 Coastal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 South Korea has a total of 2,057 marine cultural resources, averaging 27.8 per coastal city, county, or district.. Specifically, there are 497 marine cultural heritage resources, 282 marine cultural community resources, 625 marine cultural infrastructure resources, and 653 marine natural resources.
- Jeju, Jeollanam-do, and Gyeongsangnam-do possess the richest marine cultural resources, whereas Ulsan and Jeollabuk-do have relatively fewer resources.

National Marine Cultural Asset Map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s

- Domestic and International Cultural/Urban Regeneration Projects Emphasize Tailored Development Strategie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Needs
- A review of domestic policy trends highlights three main features: ① an integrated approach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② strengthening regional autonomy and expanding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③ establishing a region-specific support system through flexible project structures.
- International marine cultural city projects emphasize the creation of creative spaces that revitalize cities through culture, art, and urban activities, directly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 These projec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balancing the

preservation and modern utilization of marine cultural resources, long-term and comprehensive planning, and strategic approaches that strengthen regional identity while creating economic value.

▪ **Concept and Core Values of a Marine Cultural City**

- Marine cultural cities need to foster internal growth by utilizing their diverse and creative resources for cultural creation, production, consumption, and enjoyment.
- In a marine cultural city, the sea serves not only as a backdrop but a central element that enriches residents' contemplation, enjoyment, and daily life, thereby serving as an essential platform that supports humanity's cultural and social vitality.
- Core values that a marine cultural city should include strengthening urban identity and brand value, foster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supporting cultural diversity and creativity, enhancing quality of life, generating economic value, and building urban resilience.
- Unique to marine cultural cities, these values emphasize the harmony of tradition and innovation, the fusion of locality and globalism, and the balance betwee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arine resources, as reflected in the sea's tempo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Cultural City Vitalization Project**

- The Marine Cultural City Vitalization Project is a comprehensive policy initiative aimed at realizing the core values of marine

cultural cities and enhancing urban vitality.

- Project typ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value and outcomes generated by utilizing marine cultural resources, divided into Ocean Culture Community Vitalization, Ocean Culture Landmark Regeneration, and Ocean Culture Innovation Growth.
- **Basic Direction and Key Tasks for the Marine Cultural City Vitalization Project**
 - The vision of the project is set as “Sea-novation City: An Innovative and Culturally Integrated City with Marine Essence.”
 - The Marine Cultural City Vitalization Project aims to maximize the holistic cultural value of each coastal city by discovering and reinforcing its unique cultural identity, integrating existing resources, and aligning policies.
 - Moving beyond physical development, the project targets the strategic use of marine cultural resources to transform the economic structure of cities and highligh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arine cities.

2) Policy recommendations

-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the Marine Cultural City Vitalization Project include proposal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governance establishment, sustainable business model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workforce training.
- To systematically implement the Marine Cultural City Vitalization

Project,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arine Education and Marine Culture are proposed.

- This includes introducing a new clause to establish a Marine Cultural City Vitalization designation system, which would enable the systematic discovery of marine cultural resources and support urban development that reflects the unique marin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 A governance platform for the Marine Cultural City Vitalization Project, involving diverse stakeholders, is recommended to prevent project overlap and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long-term performance evaluations.
- To ensure sustainable growth,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a self-sustaining business revenue model is prioritized, enabling the project to continue independently after initi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4. Expected Outcomes

1) Policy effects

- By systematically conceptualizing the goals and directions of the Marine Cultural City Vitalization Project, new initiatives utilizing marine cultural resources can be identified.
- Particularly, the development of marine cultural asset maps for 11 coastal provinces and cities will provide insights into the current state of South Korea's marine cultural resources.

-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across government ministries will facilitate an integrated approach to marine cultural policy, while creating tailored support plan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oastal cities, thereby enhancing policy effectiveness.

2)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Marine cultural resourc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community revitalization, economic value creation,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by broadening access to cultural experiences.
- By organically integrating urban regeneration and cultural industries, a new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for coastal cities can be established.
- The industrialization of marine cultural resources will help boost the local economy and create jobs.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나 경제적 기능을 넘어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생활양식, 예술, 그리고 주민들의 집단적 경험이 축적되어 형성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다. 창조도시 이론의 선구자인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문화자원은 도시와 그 가치기반의 원자재이며, 석탄과 철강, 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했으며, 데이비드 스로스비(David Throsby)는 ‘문화를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효과 창출의 중요 요소’로 설명했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문화를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평가해 왔다. 이를 방증하듯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사업들은 전 세계로 확대되며 도시재생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화중심의 지역발전 논리는 전 세계적인 다수의 성공사례를 양산하며 지역 활성화, 지역균형의 핵심요소로 기능해 왔고, 우리나라도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

이 이어졌다. 지역 특화형 문화도시 재생 노력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사업이다. 제1차부터 4차까지 선정된 문화도시 24곳¹⁾ 중 연안에 위치한 도시는 포항, 제주, 부산 영도, 강릉, 목포, 울산 등 총 7곳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법정 문화도시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지만, 목포와 영도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사업은 부재²⁾하였다. 연안도시의 해양문화는 그 도시의 역사적 맥락, 지리적 특성,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귀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화도시 사업에서 이를 핵심 요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해양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 인식의 부족, 그리고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1〉 제1차~제4차 법정 문화도시 중 연안도시 현황



자료: 저자 작성

1)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추진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5차 문화도시 본지정이 폐기됨
2) 24개 문화도시 사업명 중 '해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지역은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가 유일함

한편 정부는 국민의 해양인식 확대 및 해양문화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 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제1차 법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에 대한 국민의 향유권을 명확히 함에 따라 과거 관리의 대상이었던 해양문화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향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해양문화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문화 자산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법과 제도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해양문화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었지만 동 법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해양교육에 비해 해양문화는 뚜렷한 사업성과가 없어 국민체감도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³⁾ 본 기본계획에서 해양문화산업 육성으로 연안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해양문화자원의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부재한 실정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화사업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문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해양수산부도 연안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레저거점사업, 바다생활권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바다생활권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도시라는 공간을 ‘우리들의 생활 공간’, 즉 삶터로 강조한다는 점이다. 관광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지인 유입 확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유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21~’24년 간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사업 입찰공고 목록을 살펴본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해양 문화 대장정, 기념식 행사, 국립해양문화시설 관리 외 신규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됨. 반면 해양교육 사업은 고등학교 해양교과서 개발, 해양교육센터 건립사업,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양성 아카데미 등 신규 사업 발굴이 활발함(해양수산부 입찰공고 사이트 참고)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문화적 소프트파워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이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도시의 경제적 발전 및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들은 주로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해양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에는 한계를 보인다. 해양문화자원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지역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도시문화 정책의 발굴이 시급하다. 또한 해양문화자원 하나만으로 도시의 활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화도시 정책은 부처내 사업 및 타부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복합적인 추진을 통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기반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 활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사업,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연안과 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사업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본 과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연안지역 성장 동력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연안도시의 해양문화적 정체성을 발견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는 해양문화자원과 연안도시활력이다. 연안도시의 고유한 해양문화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기존 인프라, 공간, 정책, 조직 간의 균형 및 조화를 추구하여 도시의 활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연안도시가 가진 문화적 가치 자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해양문화 가치자산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의적 관점에서 해양문화자원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현재 활용 상태와 잠재적 가치를 평가한다. 둘째, 해양수산부만의 정책적 가치와 고유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가 연안과 어촌에서 추진하는 기존의 정책 및 사업 속에 문화 소프트파워를 매개로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지역 균형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체부 및 국토부의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본 연구는 연안도시의 해양문화자원이 단순한 관광 상품이나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연안도시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의 활력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기본적인 범위로 설정한다. 구체적인 범위로는 문화도시 및 도시활력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분석, 11개 연안도시의 해양문화자원 현황 분석, 해양수산부가 지향해야 하는 해양문화도시 정책의 비전 및 추진방향 제시, 마지막으로 해양문화도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사업추진 방안 구성 등이다.

〈표 1-1〉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내용적 범위	세부 연구내용
11개 연안 시도의 해양문화 자산 현황 분석	• 해양문화와 해양문화자원 개념 정립 • 해양문화자원 유형 분류 • 11개 연안시도별 해양문화자산 지도 도출
국내외 문화 연계형 도시 사업 동향·사례 조사분석	• 문화연계형 도시재생, 문화도시사업 관련 정책 조사·분석 •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사업 사례 조사·분석
해양문화도시 개념 정립	• 해양문화도시에 대한 정의 • 해양문화도시 정책 개념
해양문화도시 활성화 정책 방향	• 해양문화도시 정책 사업의 비전/목표/방향 설정 • 사업추진전략 제시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유형 및 활성화 방안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주요 유형 도출 및 근거 제시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계 및 구상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정책 지원 방안	• 문체부 및 국토부 사업과 연계·복합화 방안 • 사업추진을 위한 법개정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11개 연안 시·도와 7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사례조사를 위해 국내외 대표적 문화도시 및 도시 재생사업지를 공간적 대상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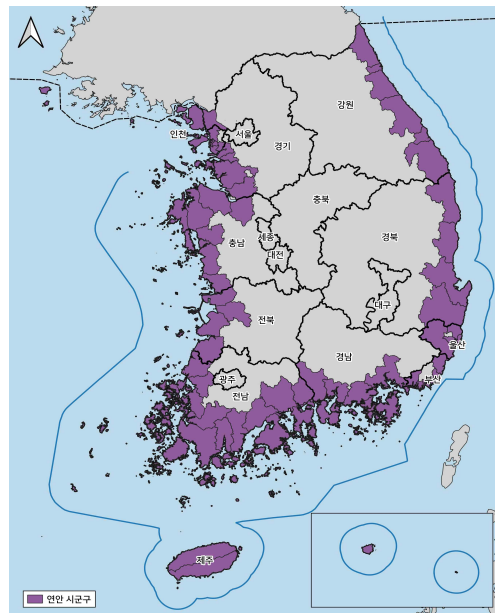
〈표 1-2〉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구분	해당 시·군·구	
부산연안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10개
인천연안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8개
울산연안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4개
경기연안	평택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5개
강원연안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6개
충남연안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7개
전북연안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4개
전남연안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6개

구분	해당 시군구	
경북연안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개
경남연안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7개
제주연안	제주시, 서귀포시	2개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은 해양문화도시사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이에 따라 문헌조사, 현장조사, 통계분석·처리,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양적·질적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한다(〈그림 1-3〉 참조). 먼저 11개 우리나라 연안 시도를 대상으로 해양문화도시사업이 추진 가능한 자원여건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여건분석을 위한 통계 DB 구축과정에는 공공·민간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해양문화자원별·지역별 분석결과는 GI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간화한다.

다음으로 문화 연계형 도시사업의 국내외 정책동향과 특히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국내외 대표 도시조성 사례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해외 대표 사례는 해양문화도시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 문화와 예술 생산, 지역 공공성의 관점에서 선정하였다. 문헌조사와 함께 국내 사업 담당자 면담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국내 문화도시 사업의 한계와 해양문화도시사업과의 연계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의 핵심인 해양문화도시사업 추진 방안 도출에는 문헌분석,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양문화도시의 정책적 개념을 도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기존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사업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상호 연결될 수 있는 해양문화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모델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림 1-3〉 연구 추진 체계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분석 결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지역 문화기반 시설 및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김면·노수경·정수희(2022), 장훈·노영순(2022), 노수경·김수경(2022)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연구는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 방안, 지역문화통계 체계 구축, 지역단위 문화정책 분석 등을 다루고 있다. 주로 지역단위의 문화정책과 추진 사업의 흐름을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성을 제언

하였다. 둘째,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홍장원 외(2017), 최미애(2019), 조광호·박만식·이선영(2016), 이순자·유희연·김민지(2023) 등의 연구가 속한다. 이들 연구는 해양문화 자원의 콘텐츠화, 지역문화예술자원 활용, 문화도시 조성,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문화자원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고려하였다. 셋째, 문화와 도시재생, 국가 균형발전 등을 연계한 연구이다. 안소현 외(2023), 민현식·오지연 외(2019), Steiner, Frey, & Simone(2013), Evans(2005), Gomes & Librero-Cano(2018) 등의 연구가 해당된다. 이들 연구는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유럽문화수도 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연구 대상의 특수성이다. 본 연구는 ‘해양문화자원’과 ‘연안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일반적인 문화자원 활용이나 도시재생 연구와는 다르게 해양 및 연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육지와 바다의 접점이라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 해양생태계와의 밀접한 관계,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의 역사적 축적 등을 고려한다. 특히 연안도시가 가지는 해양성(海洋性), 즉 바다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독특한 문화적·경제적·환경적 특성을 연구의 중심에 두었다. 둘째, 본 연구는 문화자원의 활용, 도시재생, 지역활성화 등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고자 한다.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연안도시의 해양문화자원을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증진시키는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 이 개념은 해양문화의 고유성, 연안도시의 지리적 특수성, 도시재생의 방법론, 그리고 지역활성화의 목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안도시가 보유한 해양문화자원을 유형별로 진단·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유형을 도

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단순한 개념정립이나 현황 분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세부 이행 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표 1-3〉 선행연구 현황

No.	선행연구 현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김면·노수경·정수희(2022) • 연구목적: 지역문화기반시설 특성에 따라 공간, 콘텐츠,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 제시	• 문헌연구 • 현장조사 • 실무담당자 인터뷰 • 전문가 자문 • 연구협의회 등	• 문화기반시설 현황 분석 • 문화기반시설 관련 인식 조사 •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의견 조사 •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2	• 과제명: 지역 문화통계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장훈·노영순(2022) • 연구목적: 지역 문화통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제언	• 지역 문화통계 현황분석 • 자문 및 설문조사 • 사례조사	• 지역 문화통계의 개념 및 필요성 • 지역 문화통계 현황 • 지역 문화통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종합진단 및 정책과제
3	• 과제명: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 연구자(연도): 노수경·김수경(2022) • 연구목적: 지역단위 문화정책과 추진 사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추진 방향성 제언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관계자 인터뷰 • 전문가 자문회의	• 지역단위 문화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 지역단위 문화정책 관련 설문조사 • 지역단위 문화정책 개념 재구성 • 지역단위 문화정책 추진 방향성
4	• 과제명: 지속가능한 문화매력국가를 위한 국가문화지수 개발 연구 • 연구자(연도): 양혜원·김면·김소연(2023)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델파이 조사 • AHP 분석	• 문화매력국가를 위한 국가문화지수 선행 연구 검토 • 지속가능한 문화매력국가를 위한 국가문화지수 개발

No.	선행연구 현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연구목적: 주요 국가들의 문화적 잠재력을 진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국가문화지수(Global Culture Index) 개발	요인분석	- 국가문화지수 개발안의 적용을 통한 시범분석 결과 - 시사점 및 국가문화지수 개선과 활용을 위한 제언
5	- 과제명: 해양문화자원의 콘텐츠화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홍장원 외(2017)^b - 연구목적: 해양문화자원의 콘텐츠화를 통해 친해양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대중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관광 상품화 방안 마련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전문가 자문 - 설문조사	- 문화콘텐츠 개념 및 동향 - 해양문화자원 콘텐츠화 여건 분석 - 해양문화콘텐츠 육성 방안 마련
6	- 과제명: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자원 활용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최미애(2019) - 연구목적: 독일과 한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쇠퇴현상이 문화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예술과 관광 연계 방안 도출	- 문헌연구 - 비교연구 - 전문가 자문 - 관계자 인터뷰 - 현장조사	-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사회 - 독일의 문화, 관광, 지역활성화사례 - 독일의 문화관광 진흥 정책 - 결론 및 제언
7	- 과제명: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조광호·박만식·이선영(2016) - 연구목적: 문화도시 조성정책의 추진방향 및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	- 문헌연구 - 현장조사 -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 문화도시 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문화도시 개념정립 - 문화도시 정책 구성 - 문화도시 지정절차 - 문화도시 사업·활성화 - 문화도시 정책 지원
8	- 과제명: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이순자·유희연·김민지(2023) - 연구목적: 지역 간 연계·협력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유형을 구분 및 유형별 사업 예시 제안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전문가 자문 - 관계자 인터뷰 - 현장조사	- 역사문화권 정비제도 도입과 추진현황 - 역사문화유산 기반의 유사사업과 시사점 - 연계·협력형 정비사업의 구상 및 개선과제

No.	선행연구 현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9	• 과제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발전 전략 연구 • 연구자(연도): 안소현 외(2023) • 연구목적: 로컬리즘이 균형발전의 대안적 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및 지역사례연구를 통해 정책방안 제시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전문가 자문 • 관계자 인터뷰 • 현장조사	• 로컬리즘의 의의와 이론적 고찰 • 국내외 로컬리즘 관련 정책 비교와 시사점 • 로컬리즘 기반 지역활성화 사례 연구 • 로컬리즘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10	• 과제명: 서울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개선방향 • 연구자(연도): 민현석 외(2023) • 연구목적: 9개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계획·추진현황 진단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설문조사 • 통계분석(카노모형 분석, 고객만족지수 측정)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현주소 • 역사문화자원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양상과 관리방안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11	• 과제명: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and Life Satisfaction • 연구자(연도): Steiner, Frey, & Simone(2013) • 연구목적: 유럽문화수도 제도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 검증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통계분석 등	• 메가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 유럽문화수도에 대한 개념고찰 • 유럽문화수도의 경제적 효과 • 유럽문화수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12	• 과제명: The UNESCO 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Methodology Manual • 연구자(연도): UNESCO(2014) • 연구목적: 국가 차원에서 정책의 영향으로 문화가 다차원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지표 개발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통계분석	• GDP에 대한 문화활동의 기여 • 문화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틀 • 문화인프라의 분포 • 문화지표 개발
13	• 과제명: Culture 2030 Indicators • 연구자(연도): UNESCO(2019) • 연구목적: SDGs 세부 목표를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이행하는 데 문화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측정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통계분석	• 문화와 지속발전 • 2030 지표개발 과정 및 진행 상황 • SDGs와 문화지표 프레임워크

No.	선행연구 현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4	• 과제명: Measure for Measure: Evaluating the Evidence of Culture's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 연구자(연도): Evans(2005) • 연구목적: 지역재생사업의 문화적 요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 측정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통계분석 등	• 문화활동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도시재생에 개입되는가를 기준으로 '문화주도형 도시재생, 문화적 재생, 문화와 재생으로 구분'
15	• 과제명: Evaluating three decades of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programme: 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 연구자(연도): Gomes & Librero-Cano(2018) • 연구목적: 유럽문화수도 제도에 대한 선택도시와 비선택도시의 지역적 영향차이 검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등	• 유럽문화수도에 대한 고찰 • 선정된 도시와 비선정된 도시간 개최 시간별(선정 3년 전부터 선정 5년까지) 영향 차이분석
편 인 구	• 과제명: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이슬기 외(2024) • 연구목적: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의 활력 증진 차원에서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의 체계적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전문가 자문 • 연구협의회 • 정책협의회 등	• 문화 연계형 도시활력사업의 동향 및 사례 분석 • 연안도시 해양문화자원 유형 진단·평가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개념 및 유형 도출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과제 •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자료: 저자 작성

02

연안도시 해양문화자원 유형 진단·평가

제1절 해양문화자원의 유형

1. 해양문화의 개념

본 절에서는 해양문화도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에 앞서 선행연구 및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양문화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양문화의 체계적인 개념 정립을 위해 사전적 정의, 법적 정의, 국내외 학계 정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해양문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해양수산부와 해양문화재단 설립과 궤를 같이한다.⁴⁾ 1970년~1980년대만 하더라도 해양문화란 명칭이 쓰여진 공식 문서나 논문은 거의 없었으며 대신 막연하게 바다문화 등으로 간간이 불려지는 정도였다.⁵⁾ 해양문화는 해양과 문화의 합성어로 사전적으로는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말한다. 즉, 해양과 관련된 인간활동에서 비롯된 지식, 신념, 행동, 관습, 예술, 제도 등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4) 주강현(2015). p. 3.

5) 위 자료. p.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는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이라 정의’⁶⁾되어 있다. 해양문화의 사전적, 법적 개념 모두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산물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양문화란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바다와 섬, 연안, 항만은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경제활동의 장소로,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삶과 일, 놀이와 상상의 공간으로 해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변모해 왔으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다양성을 포괄하는 문화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해양문화는 도서문화, 바다문화, 도서해양문화, 섬 문화, 해안문화 등과 구별되어 사용하기도 한다.⁷⁾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서문화와 해양문화는 주목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 도서문화가 섬의 공간성 및 도서적 제 조건과 문화 전승의 상관성에 대해 주목한다면, 해양문화는 바다라는 공간성 및 해양성과 관련된 문화 전승의 특징을 주목한다.⁸⁾ 앞에서 언급한 도서문화, 연안문화, 섬 문화 등의 용어가 각기 다른 부분을 지목하는 것은 맞지만 용어에 대한 선호도나 논의의 성격, 상황에 따라 방점을 달리하면서 적용할 뿐, 이들 모두 ‘해양문화’라는 범주 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⁹⁾

다음으로 해양문화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동근 외(2003)는 해양문화를 “바다를 통해 나타나는 관습이나 제도 또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의 체계”로서 “바다를 주된 활동무대로 해서 살아가는 바다 사람들이 남겨 온 모든 삶의 흔적”이라고 보았다.¹⁰⁾ 민말순

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7) 권기영 외(2021), p. 83.

8) 이경엽(2008), p. 4.

9) 권기영 외(2021), p. 83.

(2007)은 해양문화란 “일상생활의 양식으로서 관습·규범·물질적 재화·기술 등으로 확대되는 생존의 장치”라고 보았다.¹¹⁾ 주강현 외(2015)는 해양문화가 “해양을 둘러싼 자연과 인간 간의 문화현상을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¹²⁾ 홍석준(2007)은 도서와 해양을 엮은 ‘도서·해양문화’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섬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에의 적응이라는 가치와 규범”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¹³⁾ 한편 해양문화를 해양생태적 관점에서 접근한 학자도 있었다. 나승만 외(2007)는 해양문화를 “주민들이 바다를 매개로 합의·전승해 온 생활양식”이자 “도서적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적 환경 속에서 배태된 생활과 문화”로 보았다.¹⁴⁾ 김성귀(2013)는 관광자원으로서 해양문화를 접근하였다. 해양문화의 정의를 “해양에서의 편리성을 위해 개발된 모든 생활 및 산업관련 도구나 요소”로 보았으며, “해양과 관련하여 개발된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적 체계, 세련되고 우아한 해양 문화재, 전통요소”도 해당된다고 언급하였다.¹⁵⁾ “또한 인구가 해양과 관련하여 발전시킨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종교·예술·과학 등”도 해양인문학 측면에서 해양문화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¹⁶⁾ 김홍섭(2010)은 해양문화가 “바다와 해안, 섬, 항만이라는 공간적 현장에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축적되고 삶 속에 배어 있는 가치관과 삶과 일과 놀이의 양태”라고 보았다.¹⁷⁾

10) 이동근 외(2003), p. 32.

11) 민말순(2007), pp. 39-51.

12) 주강현 외(2015), p. 3.

13) 홍석준(2007), pp. 403-439.

14) 나승만 외(2007), p.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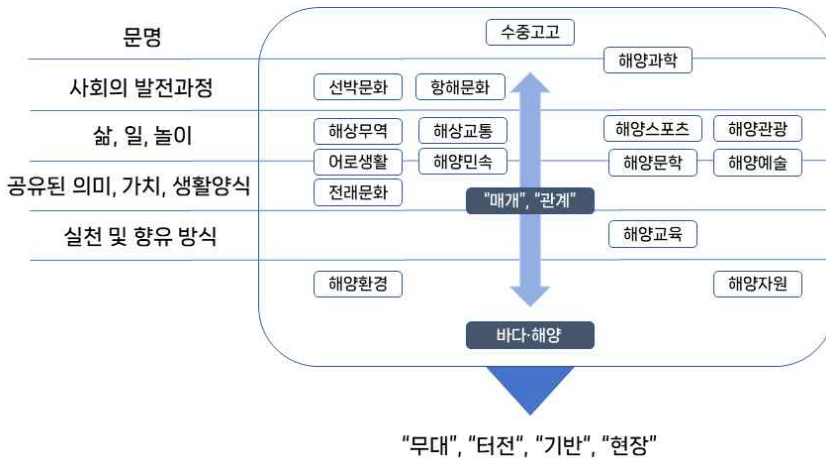
15) 김성귀(2013), pp. 165-197.

16) 김성귀(2013), pp. 165-197.

17) 김홍섭(2010), pp. 269-288.

이상에서 살펴본 해양문화 개념정립 연구들의 주요 키워드와 범주를 도식화해 보면 <그림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해양문화의 가장 포괄적 범주로서 해양환경적 측면과 자원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범주 모두 기본적으로 해양을 인간이 살아온 삶의 무대, 터전, 기반,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다시 인간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세분화하여 범주화된다. 실천 및 향유와 관련해서는 해양문화를 자원으로 삼아 교육이나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생활양식이나 의미, 가치와 관련해서는 해양으로부터 비롯된 어로생활, 민속, 전래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삶과 일, 놀이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해양예술, 문학, 레포츠, 관광 그리고 무역이나 해상교통과 관련된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사회발전과정과 관련해서는 항해문화, 선박문화 등의 키워드가 언급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명과 관련해서 수중고고학과 해양과학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¹⁸⁾

〈그림 2-1〉 해양문화 기존연구의 키워드 및 범주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 p. 20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18) 권기영 외(2021), p. 102.

한편 중국과 일본에서는 해양문화를 어떻게 정의할까? <전국해양문화발전강요>(2016)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문화는 해양을 인식하고 활용하고 개발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실천 과정에서 인간이 생성하거나 창출한 정신적, 물질적 결과의 총합을 말한다. 중국의 선조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하무도 문화(河姆渡文化),¹⁹⁾ 용산 문화(龙山文化),²⁰⁾ 백월 문화(百越文化),²¹⁾ 마조 문화(妈祖文化)²²⁾ 등 해양 관련 문화유산을 남겼고, 다양한 해양 신화, 시, 그림 및 민속 등을 만들어냈으며 해신 문화, 해양 어업 문화, 항해 문화, 소금 문화를 포함한 전형적인 해양문화를 형성했다.²³⁾ 중국의 학자 취진량(曲金良)은 중국 해양문화를 중화민족이 해양과 관련하여 창조·전승한 물질적·정신적·제도적·사회적 문명 생활방식 및 그 표현 형태라고 정의하고 하위범주로 해양정신문화, 해양물질문화, 해양제도문화, 해양사회문화, 해양심미문화 등으로 구분하였다.²⁴⁾ 중국의 해양문화는 오랜 역사, 유구한 기원, 풍부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문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 해양문화의 개념을 “수중(水中)문화”의 개념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해양문화라는 개념보다는 해양문화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19) 하무도 문화는 지금으로부터 7000~5700년 전으로 중국 최초의 신석기문화의 하나로서 저장성(浙江省) 위야오(余姚)의 하무도유적지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浙江省文物管理委员会, 1978>

20) 용산 문화는 1928년 산둥성(山东省) 장추현(章丘县) 룡산진(龙山镇) 청쯔야(城子崖) 유적지에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초기 중국 문명은 용산 시대에 형성되어 발전했다. 황하 하류, 산둥 반도에 위치한 용산 문화는 중화 문명의 기원과 초기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夏鼐, 1985>

21) 백월 문화는 상고시대 중국 장강 이남 연해의 일대 고월인들의 독특한 문화이다. 백월은 전국국의 呂氏春秋·恃君에서 시작되었는데, “백”은 당시 중국의 많은 남방 소수민족의 총칭이었다. 춘추전국시대에 남방은 “월”족의 세력이 가장 강대하여 남방의 많은 소수민족을 정복하였다. <郭后熹, 2020>

22) 마조 문화는 마조민족신앙을 위주로 하고 마조공묘, 제사, 신화전설, 문학예술 등을 주요담체로 하여 각종 문화요소를 파생 및 융합시키고 발전시켜 형성한 특색문화로서 해양문화의 대표 중 하나이다. <张国栋·柯力, 2016>

23) 全国海洋文化发展纲要(2016) 참조

24) 曲金良(2014) 참조

의 수중문화유산의 정의를 활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문화유산이란 ‘문화적, 역사적, 고고학적인 성격을 가지는 인류 존재의 모든 흔적이며, 그 일부 내지는 전부가 정기적 또는 항상적(恒常的)으로, 적어도 100년간 수중에 있었던 다음 세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는 유적, 구축적, 건조적, 인공적 및 인간의 유골이며, 고고학적 및 자연적인 배경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선박, 항공기, 그 외 탈것 또는 그 일부, 그 화물 또는 그 외의 적재물로, 고고학적 및 자연적인 배경을 가지는 것, 세 번째는 선사학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²⁵⁾ 여기서 ‘100년간’이라는 문구는 중요하다. 100여 년 전 러일전쟁 중 침몰한 발틱함대의 유구는 이미 수중유산이 되었지만, 태평양전쟁 중 침몰한 함선은 2045년이 될 때까지 수중유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된다.²⁶⁾

해양문화는 물질적, 정신적 산물을 포괄하며 시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국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해양문화에 대한 접근 방식과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은 해양문화를 국가 정체성과 문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반면, 일본은 보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유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해양문화가 가진 공통적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정적인 개념이 아닌 동적이고 진화하는 개념, 보존과 활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 가치, 공동체의 합의와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구성물,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시간적 연속성을 가진 문화현상은 해양문화가 가진 공통적 특징이다.

본 연구는 해양문화를 해석하는 기존 연구자들의 관점을 포용하면서도 바다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플랫폼은

25) UNESCO, 수중문화유산보호조약 제1조 정의

26) 岩淵聡文(2016)(검색일: 2024.6.24)

시간적으로는 전통과 혁신을, 공간적으로는 토착성과 세계성을, 가치적으로는 보존과 활용을 끊임없이 중재하고 융합하는 역할을 해왔다. 여기서 ‘플랫폼’이란 단순한 물리적 기반이 아닌 인류가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적 실험을 수행하는 역동적 장(場)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표 2-1〉 해양문화 개념에 대한 접근

연구자	구분	내용
해양수산부	법적정의	•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
이동근 외	학술적 정의	• 바다를 통해 나타나는 관습이나 제도 또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의 체계
유네스코	해외정의 (일본)	• 문화적, 역사적, 고고학적인 성격을 가지는 인류 존재의 모든 흔적이며, 그 일부 내지는 전부가 정기적 또는 항상적(恒常的)으로, 적어도 100년간 수중에 있었던 유산
중국 정부 〈전국해양문화 발전강요〉	해외정의 (중국)	• 해양을 인식하고, 활용하고, 개발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실천 과정에서 인간이 생성하거나 창출한 정신적, 물질적 결과의 총합
이슬기 외	현대적 정의	•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인류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동태적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이 안에서 생산되는 해양문화는 시간적(전통과 혁신의 융합)·공간적(토착성과 세계성의 조화)·가치적(보존과 활용의 중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창조의 총체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문화자원의 분류와 유형

문화자원(culture resources)이란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활용이 가능한 대상을 말한다.²⁷⁾ 즉, 사람,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 등과 관련된 유적, 유물, 건축물 및 역사적인 자료, 그리고 이것들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헌과 구전 자료를 포함한다.²⁸⁾ 문화자원은 그 형태에 따라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으로 구분된다. 유형문화자원은 고고유물·유적, 불교유물·유적, 유교유물·유적, 생활유물·유적 등, 전통민가, 자연 및 경관자원, 여가 공간 등이 속한다.²⁹⁾ 무형문화자원은 인지체계, 생애사, 생활사가 반영된 것으로서 신앙·정신, 언어·기술, 풍속·의례, 예술·놀이 등을 말한다.³⁰⁾ 이러한 물리적 실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 <표 2-2>와 같이 해양문화자원을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으로 분류한 바 있다.

<표 2-2> 유·무형을 구분한 해양문화자원의 분류 체계

구분	분류	내용
유형문화유산	해양사유산	해양사는 선사시대를 비롯한 과거의 역사문화 상징물 및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장소를 포함함 (역사문화상징물, 역사적 인물 등)
	관방유산	방어성곽을 비롯한 봉수, 연대 등을 포함함 (해전, 방어성곽, 보루, 연대 등)
	건축유산	읍성과 민가를 비롯하여 근·현대 유산인 유인등대 등이 해당됨 (해안읍성, 해안민가 등)
	도자유산	도자유산은 청자 및 백자 도요지 등이 해당됨 (도요지, 도자 운송로 등)

27) 문화재청(2006), pp. 29-30.

28) 권기영 외(2021), p. 85.

29) 권기영 외(2021), p. 85.

30) 홍순일(2009), p. 283.

구분	분류	내용
무형문화유산	어로기술유산	독살, 죽방렴, 후리
	항해유산	전통등대, 테우 및 떼배, 자연방파제
	음식유산	전통 바다음식
	해녀유산	노천불턱, 태왁 등
	소금유산	자염, 소금창고
	바다축제	해양민속축제, 전통바다축제
	해양신화 및 설화유산	별산굿, 당제, 바다신화, 바다전설
	공예기술	나전칠기, 조선기술

자료: 주강현(2015), pp. 26-27.

하지만 인간의 해양 관련 활동과 생활에서 무형문화와 유형문화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무형적 요소가 유형적 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해양문화자원을 단순히 무형문화와 유형문화로 이분화하는 것은 해양문화자원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성과 상호연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많은 학자들과 기관들은 해양문화자원을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방식은 해양사와 생활사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해양수산업부가 발간한 「한국의 해양문화」(2002)의 분류방식에 따른다. 즉, 해양사는 선사시대 해양사, 해전과 해양사, 도시와 해양사, 해운과 해양사로 나뉘고 생활사는 주민과 해양생활사, 어업과 해양생활사, 정신과 해양생활사 등으로 나뉠 수 있다.³¹⁾

31) 홍장원 외(2017)a, p. 43.

〈표 2-3〉 주제별로 구분한 해양문화자원의 분류 체계

구분	내용
해양사	해양자연사자원(지질, 물때, 해안선)
	해양전쟁사자원(해양방어체제, 해전)
	해양도시사자원(포구 등 해양도시)
생활사	어촌문화자원(어촌사회, 어촌문화)
	어로문화자원(어로환경, 어로기술, 항해기술)
	해양인문자원(해양의례, 해양민요, 해양설화, 해양문학, 주민생애사)

자료: 홍장원 외(2017)a, p. 45.

한편 위와 같은 주제별 분류체계에서도 아직 담아내지 못하는 유형이 존재한다. 바로 축제, 이벤트, 문화콘텐츠 등 기존의 자원을 재가공해서 만든 현대적 의미의 문화자원이다. 이에 홍장원 외(2017)는 해양문화자원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현 자산으로 크게 분류하고, 유산은 다시 자연유산과 기존 해양생활사 등을 포함한 문화유산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현 자산은 ‘기술·건축’, ‘시설·공간’, ‘축제·이벤트’, ‘콘텐츠산업’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표 2-4〉 현대적 자원을 포함한 해양문화자원의 분류 체계

구분	유형	내용	예시
유산	자연유산	해양자연사	지질, 물때, 해안선
	문화유산	해양전쟁사	해양방어체제, 해전
		해양도시사	포구 등 해양도시
		해양생활사	어촌, 어로, 정신, 신화·설화
현 자산	해양기술·건축	등대, 선박, 해양구조물	광안대교
	해양시설·공간	박물관, 전시관, 문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축제·이벤트	수산물 축제, 바닷가 이벤트	기장멸치축제, 보령머드축제
	해양콘텐츠산업	해양관련 문학·방송·영화·음악, 게임·캐릭터·디자인	방송 ‘도시어부’, 영화 ‘명량’, 게임 ‘청풍명월’

자료: 홍장원 외(2017)b, p. 45.

한편 본 연구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해양문화자원’의 개념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설정하였다. 해양문화자원은 해양문화와 자원의 합성어이다. 해양문화의 정의³²⁾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의미한다. 해양자원의 개념은 해양수산물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 광물, 에너지, 관광, 공간자원이 포함되며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두 개의 법에서는 해양문화자원을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을 넘어 상업적 활용이나 문화적 향유의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양문화자원의 개념을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산물을 총칭하며, 보존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이용되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동적이고 실용적인 자원”으로 접근하였다. 즉, 자원 그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가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자원들을 분류한 뒤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였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보존가치를 인정한 등재유산 자원이다. 유산자원에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해양관련 자산으로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유네스코 등재유산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공동체 자원에는 해양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전통, 관습, 생활양식을 포함한다. 해양축제, 의례, 어촌체험프로그램이 해당된다. 인프라 자원은 해양과 관련한 시설이 포함되며 전시/관람시설, 교육시설, 스포츠/레저시설, 유람/휴양시설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 자원 보호구역, 해양경관이 뛰어난 경관지 등을 포함하는 자연자원으로 분류하였다.

32)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표 2-5〉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양문화자원의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용
해양문화 유산자원 (Ocean Culture Heritage Resources)	해양유산	유형유산	산업유산, 교통·통신유산, 관방유산, 건축유산, 도자유산, 기록유산, 해양사 유산, 자연유산 등
		무형유산	민간신앙의례, 공예기술, 공연예술, 건축기술, 생활관습, 전통지식 등
	국가중요어업유산		국가에서 지정한 유·무형 어업활동
	유네스코 등재유산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 기록유산
해양문화 공동체 자원 (Ocean Culture Community Resources)	해양축제		해양 관련 축제
	어촌체험마을		‘바다여행’에 등록되어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
해양문화 인프라 자원 (Ocean Culture Infrastructure Resources)	전시/관람시설	전시, 회의, 공연, 체험시설	문화기반시설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	해양관련 미디어 촬영장소
	등대시설	등대문화유산, 등대시설	등대자산
	교육시설	해양레포츠택험교실	교육 및 연구 기반시설
		해양교육시설	
		해양연구기관	
	스포츠/레저시설	수상면허 및 안전교육장	교육 및 교통 기반시설
		마리나, 여객터미널	
		해양레저거점시설 (선정지)	
	유원/휴양시설	국립공원·도립공원	관광·오락·휴양시설
		유원지, 어촌관광휴양지	
		해양치유센터 (대상지 포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용
해양문화 자연자원 (Ocean Culture Natural Resources)	기타시설	어시장/수산물시장	해양특화 시설
		해양특화거리	
	자연자원	해수욕장	지질·지형자원
		갯벌	
		해안둘레길/ 해안자전거길	
	보호구역	해상·해안국립공원	국가 지정 보호구역
	경승지	전망대 및 조망시설	자연경관
		경관도로	
		철새도래지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해양문화자원 분류체계를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집하고 그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지역이 보유한 귀중한 해양문화자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권역별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수집 방법론과 분석 결과는 제2절에서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제2절 국내 주요 연안도시별 해양문화자원 분포 현황 —

1. 분석개요

1) 자료수집 방법

제1절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해양문화자원 유형 분류에 따라 74개 시군구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자산을 수집하였다. 유산자원 부문의 자료는 국가유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15,413개의 국가유산리스트(2023년 기준)와 유네스코 지정유산지도(1995년~2019년 기준) 자료를 중심으로 해양과 관련이 있으면서 74개 연안 시군구에 위치한 자원만 추려내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자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³³⁾의 바다여행 사이트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공동체자원 부문의 자료 중 해양축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해양관광자원 현황조사(2018)³⁴⁾ 데이터 목록을 참고하여 2023년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 하였고, 어촌체험마을 현황은 어촌어항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을 기준³⁵⁾으로 정리하였다.

가장 많은 소분류를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자원은 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국가해양지도집(2023)³⁶⁾, 해양관광 자원 현황조사(2018), 해양교육포털³⁷⁾, 해양레저과 및 해양정책과 업무계획, 공공데이터포털³⁸⁾ 등을 참고하여 2024년 기준으로 인프라 자원 DB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자

33) 한국어촌어항공단(검색일: 2024.4.1)

34) 해양수산부(2018.7.). p.4.

35)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체험휴양마을 현황(검색일: 2024.4.1)

36) 국립해양조사원(2024). pp. 260-337.

37) 해양교육포털(검색일: 2024.4.1)

38) 공공데이터포털(검색일: 2024.4.1.)

원 부문의 자료는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³⁹⁾, 공공데이터포털, 연안포털⁴⁰⁾, 해안누리길 DB, 해수욕장 DB 자료 등을 참고하여 구축하였다.

위의 자료 조사원에서 수집된 데이터 수는 총 2,057개이며, 이를 유형 별·11개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자산현황을 파악하였다.

2) 자료 전처리 방법

지역별 문화자산 분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를 공간데이터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원활한 지역별 분포의 비교를 위해서는 모든 자료의 공간적 스케일을 통일해야 한다. 그러나 각각의 자료 수집과정에서 자료의 출처, 유형, 특징 등에 내포하고 있는 공간의 스케일이 다르기에 이를 동일한 공간 스케일로 통일시켜 주는 작업을 진행했다.

수집한 자료의 대부분은 공간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문서형 데이터이며, 이를 공간데이터로 변환하고자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해양문화자원의 주소정보를 사용하였다. 지오코딩(Geocoding) 기법을 통해 자료의 주소정보를 공간정보로 변환하였으나 일부 자료의 경우 완전한 상세주소정보가 아닌 읍면동, 시군구 단위의 주소정보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의 공간 스케일로 모든 해양문화자원 자료를 통일하여 지역별 비교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공간정보를 구성하였다.

시군구 단위의 공간정보로 변환한 해양문화자원 자료를 지도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지도와 해양문화자원 자료를 결합하였다. 스페이셜 조인(Spatial Join) 방법을 사용하여 74개 연안 시군구 단위의 분류기준으로 해양문화자원 통합자료를 결합하였다. 이후 이를 단계구분도와 파이차트 지도로 나타

39) 해양수산통계시스템(검색일: 2024.4.1)

40) 연안포털(검색일: 2024.4.1.)

내어 연안 도시별 해양문화자원을 비교하였다.

2. 분석결과

1) 해양문화자원

우리나라 해양문화자원은 총 2,057건으로 해양문화유산자원이 497건,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이 282건,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625건, 해양자연자원이 653건으로 도출되었다. 전라남도가 369건으로 해양문화자원의 수가 가장 많으며, 경상남도(289건), 제주특별자치도(249건), 강원특별자치도(248건)가 뒤를 잇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160건)와 서귀포시(89건)에 가장 많은 해양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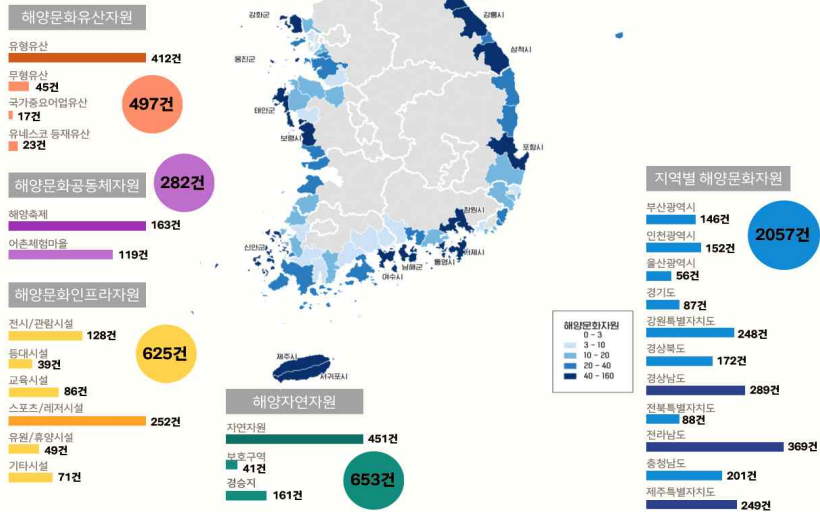
전라남도의 경우 신안군(83건)과 여수시(50건)에 해양문화자원이 밀집해 있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45건), 양양군(46건), 강릉시(53건), 삼척시(42건) 등 대다수의 연안 시군구에 해양문화자원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 창원시(49건), 거제시(82건), 통영시(59건), 남해군(46건), 경상북도 포항시(59건), 충청남도 보령시(54건), 태안군(66건), 인천광역시 강화군(56건)과 옹진군(46건)에서 해양문화자원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울산광역시(56건), 경기도(87건), 전북특별자치도(88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해양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 기준으로 각각의 시군구 당 평균 27.8건의 해양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해양문화자원의 빈도가 높은 연안 시도는 제주특별자치도(124.5건), 강원특별자치도(41.3건), 경상남도(41.3건), 경상북도(34.4건), 충청남도(28.7건)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가장 많은 해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균 해양문화자원의 빈도가 전국

평균보다 적은 23.1건이므로 연안 시군구 사이의 편차가 매우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전국 해양문화자산 지도

전국 해양문화자산지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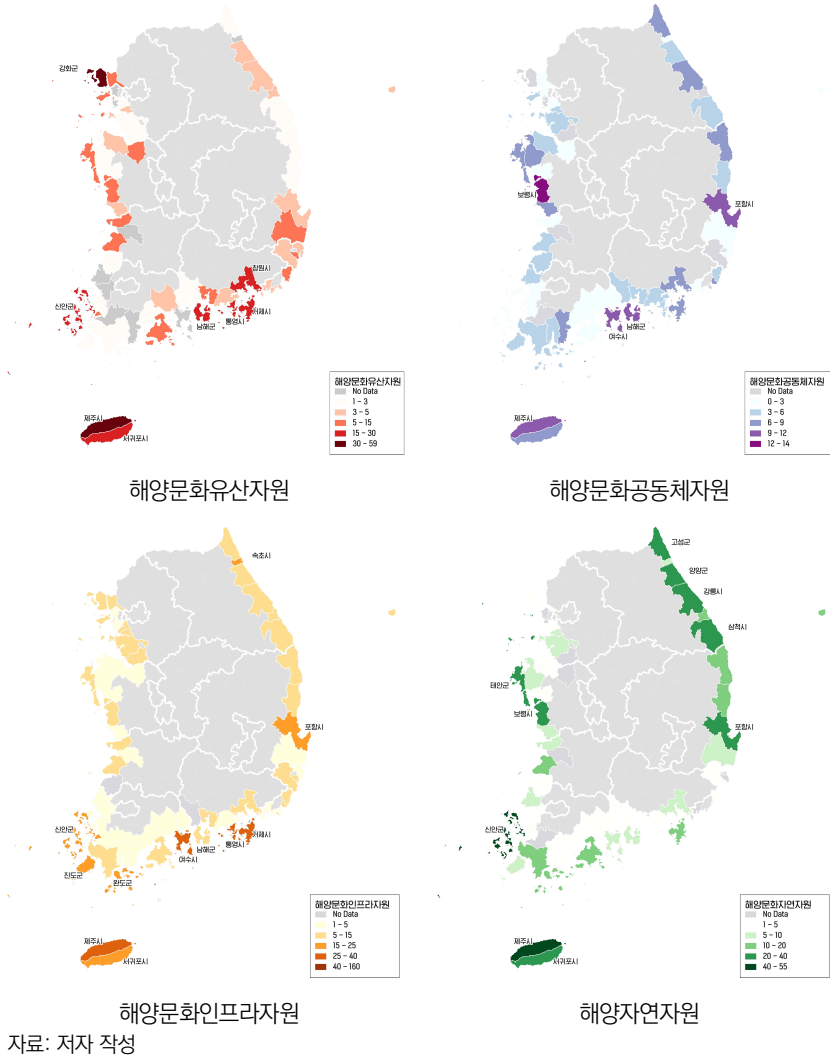
유형별 해양문화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유산자원의 경우 전체 497건 중 유형유산이 412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98건으로 유산자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89건), 인천광역시(68건)가 뒤를 잇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59건), 서귀포시(30건), 인천광역시의 강화군(45건), 경상남도의 거제시(27건), 통영시(22건), 창원시(19건), 남해군(16건), 전라남도 신안군(21건)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상남도 한려수도권과 제주도, 신안군 등의 남해안 일부 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의 경우 전체 282건 중에서 해양축제 유형의 자원이 163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전라남도(52건)와 경상남도(51건), 충청남도(44건)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 보령시(14건), 경상남도 남해군(12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11건), 경상북도 포항시(10건), 전라남도 여수시(10건)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서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인 남해군과 여수시에 해양문화공동체 자원이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경우 전체 625건 중에서 스포츠/레저시설의 빈도가 252건으로 가장 높다. 지역적으로는 전라남도가 132건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경상남도(98건)와 강원특별자치도(73건)가 뒤를 잇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5건), 서귀포시(31건), 전라남도 여수시(30건), 목포시(18건), 신안군(18건), 진도군(17건), 완도군(16건), 경상남도 거제시(31건), 통영시(26건), 경상북도 포항시(19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19건) 등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한려수도와 다도해 지역의 남해안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충청남도(42건), 경기도(43건), 인천광역시(38), 전라북도(24건)를 위시한 서해안에서 낮은 빈도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해양자연자원의 경우 전체 653건 중에서 자연자원이 451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강원특별자치도(132건)와 전라남도(126건)가 가장 빈도가 높으며, 제주특별자치도(86건), 충청남도(79건), 경상북도(76건)가 뒤를 잇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55건), 서귀포시(31건), 전라남도 신안군(43건), 충청남도 태안군(37건), 보령시(21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8건), 고성군(28건), 양양군(27건), 삼척시(23건), 경상북도 포항시(26건), 인천광역시 옹진군(22건) 등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다. 제주도와 신안군 옹진군 등의 섬 지역과 동해안 일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전국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표 2-6〉 우리나라 해양문화자원 유형별 자산 현황

대분류	수량	중분류	소분류	수량	대표항목
총계	2,057개				
유산 자원	497	해양유산	유형유산	412	인천해관문서, 대한민국수준원점, 강화산성, 신안증도태평염전, 신안 해저유물매장해역 등
			무형유산	45	동해안 별신굿, 하단돛배 조선장, 삼화사 수륙제 등
		국가중요어업유산		17	보성 뽕배어업, 신안 갯벌 천일염 업, 완도 지주식 김 양식업 등
		유네스코 등재유산		23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고인돌 유적 등
공동체 자원	282	해양축제		163	부산자갈치축제, 소래포구축제, 울산고래축제 등
		어촌체험마을		119	오호어촌체험휴양마을, 후진 어촌 체험휴양마을, 개도어촌체험휴양 마을 등
인프라 자원	625	전시/관람 시설	전시, 회의, 공연, 체험시설	128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강화갯벌센터 등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		해운대, 실미도, 주문진 등
		등대시설	등대문화유산, 등대시설	39	가덕도 등대, 팔미도 등대, 묵호 등대 등
		교육시설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86	해양스포츠교실, 해양환경교육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등
			해양교육시설		
			해양연구기관		
		스포츠/ 레저시설	수상면허 및 안전교육장	252	남천마리나, 전곡항마리나,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송정서평학교, 울포해양레저거점시설 등
			마리나, 여객터미널		
			해양레저거점시설(선정지)		
		유원/휴양 시설	국립공원·도립공원	49	옥계유원지, 천부 해양관광단지, 완도해양치유센터 등
			유원지, 어촌관		

대분류	수량	중분류	소분류	수량	대표항목	
			광휴양지			
			해양치유센터 (대상지 포함)			
		기타시설	어시장/수산물시장	71		부산공동어시장, 소래포구 종합어 시장, 자갈치 시장, 여남지구해양 문화공간 등
			해양특화거리			
자연 자원	653	자연자원	해수욕장	451	다대포 해수욕장, 물운대길, 시흥갯벌 습지보호구역 등	
			갯벌			
			해안둘레길/해안 자전거길			
		보호구역	해상·해안국립공 원	41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소항사구,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 호구역 등	
			경승지	전망대 및 조망시 설	161	용두암, 쇠머리오름, 종달리전망 대, 낙동강하구철새도래지, 금강하구 철새도래지 등
		경관도로				
		철새도래지				

자료: 저자 작성

2) 연안 시도별 해양문화자원

(1) 부산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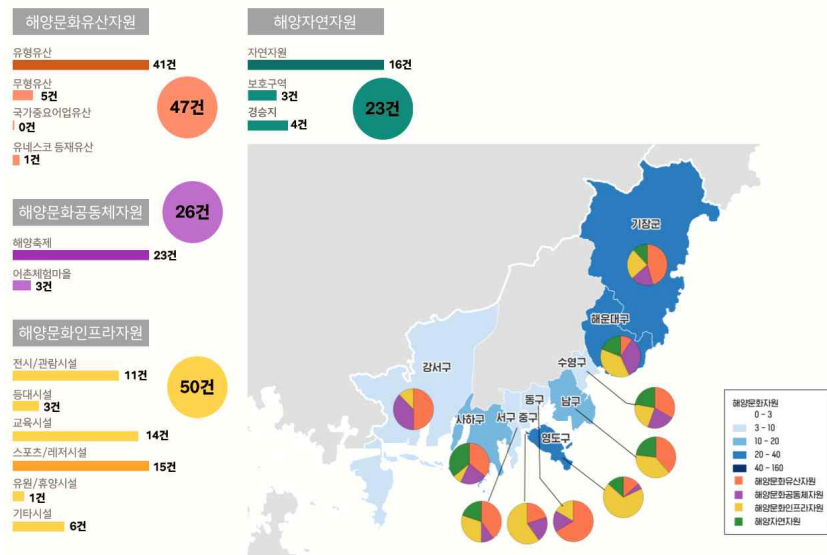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연안 시군구 10곳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문화자원의 수는 총 146건으로 해양문화유산자원이 47건,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이 26건,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50건, 해양자연자원이 23건 분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33건으로 해양문화자원의 수가 가장 많으며, 영도구(22건), 해운대구(21건)가 뒤를 잇는다.

기장군에서는 해양문화유산자원의 비중이 가장 크다. 영도구에서는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비중이 크며, 해운대구에서는 해양문화공동체자원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광역시는 네 가지 유형의 해양문화자원의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연안 시군구의 해양문화자원 평균 건수는 14.6건으로 전국 평균(27.8)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양문화자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2-4〉 부산 해양문화자산 지도

부산광역시 해양문화자산지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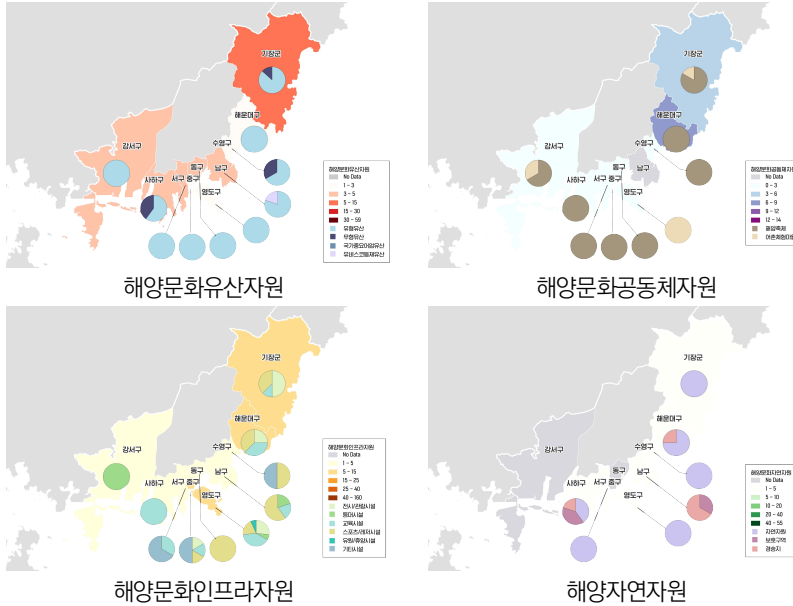
유형별 해양문화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47건의 해양문화유산자원에서 유형유산이 4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장군의 해양문화유산 자원이 총 15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으며, 13건의 유형유산과 2건의 무형 유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무형유산은 수영구(2건)와 사하구(1건)에 소수 분포하고 있으며, 남구에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과 유네스코 등재유산 1건이 존재하고 있다.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의 경우 26건 중에서 해양축제 유형의 자원이 23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해운대구가 7건, 기장군이 6건으로 ‘부산바다축제’, ‘해운대모래축제’, ‘기장갯마을축제’와 같은 해양축제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 기장군과 영도구, 강서구에는 어촌체험마을이 각 1건씩 위치하고 있다.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경우 전체 50건 중에서 스포츠/레저시설의 빈도가 15건, 교육시설의 빈도가 14건으로 가장 높다. 영도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해양인프라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운대구(8건), 기장군(8건), 중구(6건)가 뒤를 잇는다. 특히 영도구는 전시/관람시설, 등대시설, 교육시설, 스포츠/레저시설, 유원/휴양시설이 모두 분포하고 있어 해양인프라자원의 다양성과 접근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해양자연자원의 경우 전체 23건 중에서 자연자원이 16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해수욕장과 같은 자연자원이 대다수이나 남구와 사하구의 경우 ‘오륙도 및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나무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과 ‘신선대’, ‘낙동강하구철새도래지’와 같은 경승지가 분포하고 있다.

〈그림 2-5〉 부산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자료: 저자 작성

(2) 인천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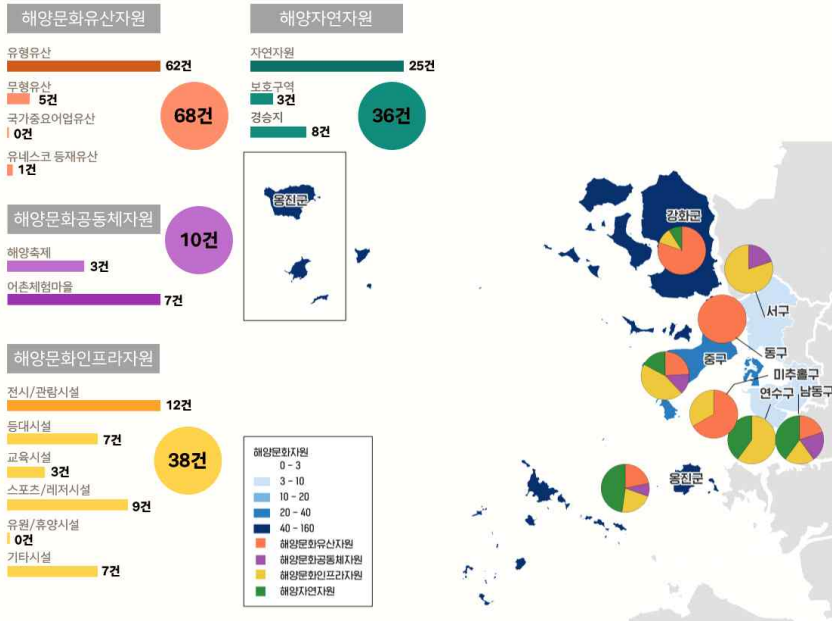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연안 시군구 8곳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문화자원의 수는 총 152건으로 해양문화유산자원이 68건,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이 10건,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38건, 해양자연자원이 36건 분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56건으로 해양문화자원의 수가 가장 많으며, 용진군(46건), 중구(29건)가 뒤를 잇는다. 반면 연수구(5건), 남동구(5건), 서구(5건), 미추홀구(3건), 동구(3건)는 해양문화자원의 수가 매우 적어 연안 시군구별 편차가 큰 편이다.

강화군에서는 해양문화유산자원, 중구에서는 해양문화인프라자원, 용진군에서는 해양자연자원의 비중이 가장 크기에 인천광역시 전체에서는 다양한 해양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안 시군구의 해양

문화자원 평균 건수는 19.0건으로 전국 평균(27.8)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양문화자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2-6〉 인천 해양문화자산 지도

인천광역시 해양문화자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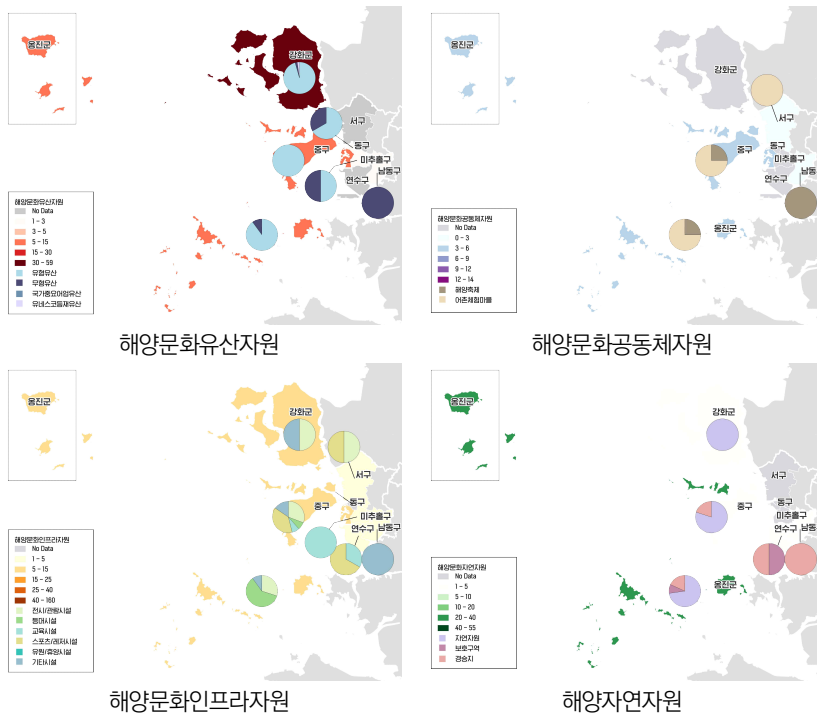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유형별 해양문화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68건의 해양문화유산자원에 서 유형유산이 6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강화군의 해양문화유산 자원이 총 45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으며, 43건의 유형유산과 1건의 무형유산, 1건의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옹진군(10건), 중구(7건)에 해양문화유산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나 서구와 연수구에는 위치하지 않는다.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의 경우 10건 중에서 어촌체험마을 유형의 자원이 7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옹진군(4건), 중구(4건)에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이 소수 분포하고 있으며, 남동구에 ‘소래포구축제’가 1건 위치한다.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경우 전체 38건 중에서 전시/관람시설의 빈도가 12건으로 가장 높다. 중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은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옹진군(10건), 강화군(6건)이 뒤를 잇는다. 특히 옹진군의 경우 등대시설(6건)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강화군의 경우 어시장과 같은 기타시설(3건)의 비중이 높다. 인천광역시의 전시/관람시설은 대다수가 ‘실미도’, ‘섬마을선생’, ‘취화선’과 같은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이다.

〈그림 2-7〉 인천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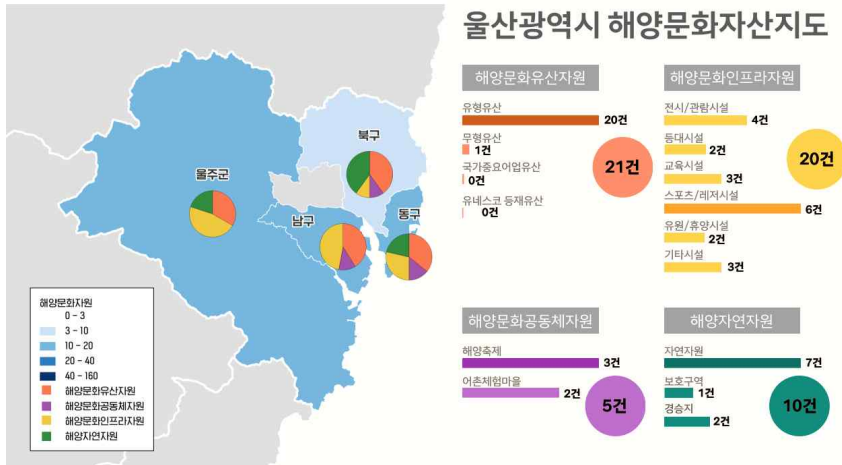
해양자연자원의 경우 전체 36건 중에서 자연자원이 25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그러나 웅진군(22건)을 제외하면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는 전국에 비해 해양자연자원의 빈도가 부족한 편으로 나타난다. 해수욕장과 갯벌 같은 자연자원과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소야도 신비의 바닷길’ 등의 보호구역 및 경승지가 웅진군에 대다수 분포하고 있다.

(3) 울산연안

울산광역시 연안 시군구 4곳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문화자원의 수는 총 56건으로 해양문화유산자원이 21건,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이 5건,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20건, 해양자연자원이 10건 분포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가 17건으로 해양문화자원의 수가 가장 많으나, 울주군(15건), 동구(14건), 북구(10건)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울산광역시의 남구와 울주군에서는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비중이 크고, 동구와 북구에서는 해양문화유산자원의 비중이 큰 편이다. 특히 동구와 북구의 경우 네 가지 유형의 해양문화자원이 모두 분포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연안 시군구의 해양문화자원 평균 건수는 14.0건으로 전국 평균(27.8)에 비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양문화자원으로의 접근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8〉 울산 해양문화자산 지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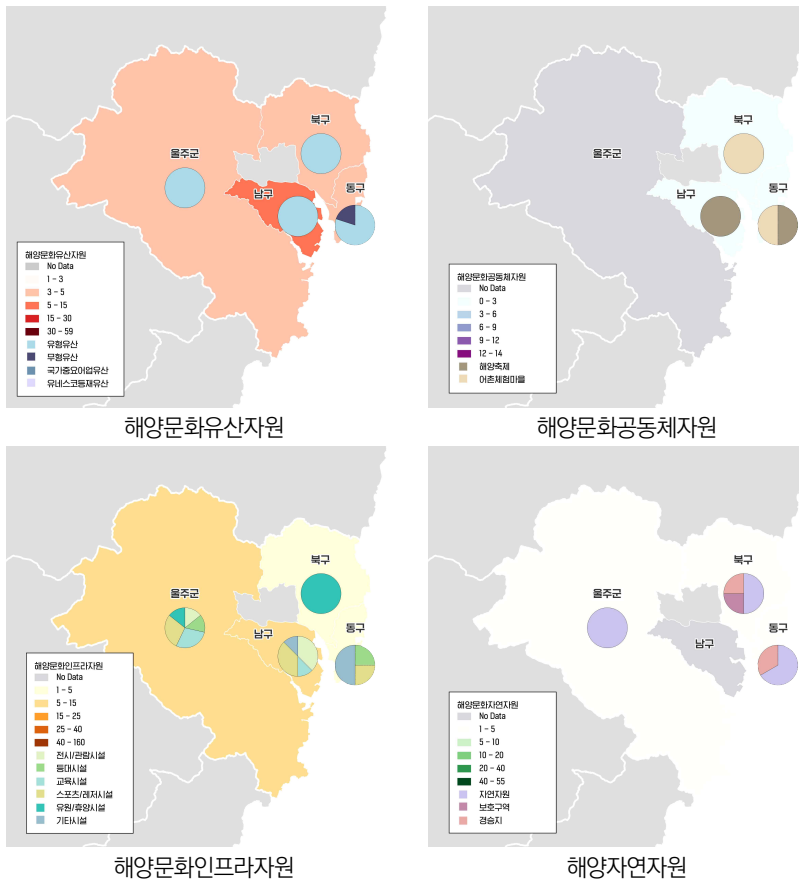
유형별 해양문화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21건의 해양문화유산자원에서 유형유산이 2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남구의 해양문화유산자원이 총 7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으며, 무형유산 ‘일산동당제(별신굿)’은 동구에만 위치한다.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의 경우 5건 중에서 해양축제 유형의 자원이 3건, 어촌체험마을 유형이 2건 분포하고 있다. 동구에만 해양축제와 어촌체험마을이 각각 1건씩 분포하며, 남구의 ‘울산고래축제’와 같은 해양축제가 2건, 북구에는 어촌체험마을 유형의 자원이 1건 분포한다.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경우 전체 20건 중에서 스포츠/레저시설의 빈도가 6건으로 가장 높다. 남구(8건)와 울주군(7건)에 가장 많은 해양인프라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북구의 경우 특히 울주군의 경우 기타시설을 제외한 다섯 가지 유형의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모두 분포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해양자연자원의 경우 전체 10건 중에서 자연자원이 7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북구가 총 4건으로 자연자원의 ‘강동몽돌해변’, 보호구역의 ‘태화강’, 경승지의 ‘강동 화암 주상절리’가 분포하여 다양한 종류의 해양자연자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 울산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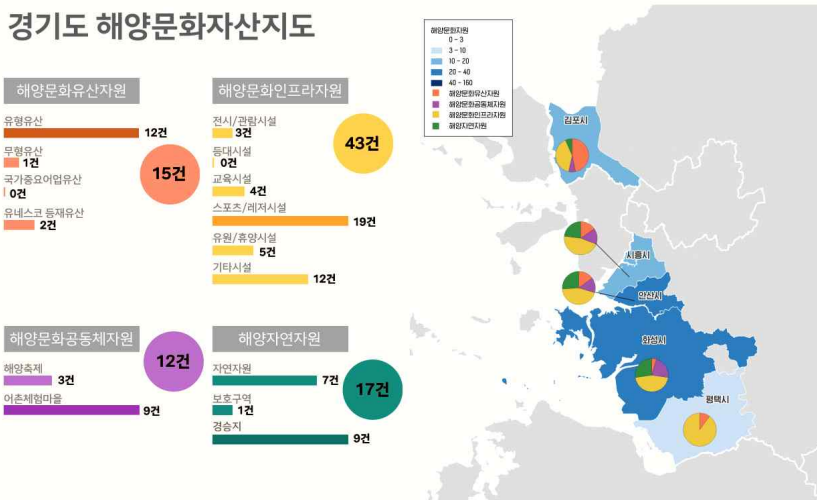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4) 경기연안

경기도 연안 시군구 5곳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문화자원의 수는 총 87건으로 해양문화유산자원이 15건,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이 12건,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43건, 해양자연자원이 17건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가 27건으로 해양문화자원의 수가 가장 많고 화성시(22건)가 뒤를 잇는다.

경기도 남부의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평택시 모두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비중이 가장 크며 김포시 또한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비중이 큰 편이다. 특히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와 김포시는 네 가지 유형의 해양문화자원이 모두 분포하고 있어 자원의 다양성이 높다. 따라서 경기도 연안 시군구의 해양문화자원 평균 건수는 17.4건으로 전국 평균(27.8)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양문화자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2-10〉 경기 해양문화자산 지도



자료: 저자 작성

유형별 해양문화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15건의 해양문화유산자원에서 유형유산이 12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포시의 해양문화유산자원이 총 7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으며, 6건의 유형유산과 1건의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무형유산은 안산시에 ‘젓머리성황제’가 1건 존재하며, 유네스코 등재유산 ‘조선왕릉-용릉&건릉’이 화성시에 위치한다.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의 경우 12건 중에서 어촌체험마을 유형의 자원이 9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경기도 남부의 안산시, 화성시에 주로 어촌체험마을이 분포하고 있으며, ‘시흥거북섬(SSUM)축제’, ‘화성벚꽃놀이축제’와 같은 해양축제도 경기도 남부에 분포하고 있다.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경우 전체 43건 중에서 스포츠/레저시설의 빈도가 19건으로 가장 높고, 기타시설의 빈도가 13건으로 뒤를 잇는다. 안산시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해양인프라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화성시(10건)와 평택시(9건)가 뒤를 잇는다. 특히 안산시와 평택시에서 스포츠/레저시설이 각 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해양인프라자원으로 접근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해양자연자원의 경우 전체 17건 중에서 경승지 9건, 자연자원이 7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경승지는 대다수가 ‘시화달전망대’, ‘누에섬등대전망대’와 같은 전망대 및 조망시설에 해당하며, 자연자원의 경우 해수욕장과 해안둘레길이 다수 존재한다.

The figure consists of four maps of the Yellow Sea region, each showing the distribution of a different type of marine cultural heritage resource. Each map includes a legend for resource types and a color-coded scale for the number of resources.

- 해상문화유산자원 (Marine Cultural Heritage Resources):** The legend includes categories like '해양문화유산자원' (Marine Cultural Heritage Resources) and 'No Data'. The scale ranges from 1-3 (light blue) to 30-50 (dark red). The map shows a high concentration of resource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Yellow Sea, particularly around the Korean Peninsula.
- 해상문화공동체자원 (Marine Cultural Community Resources):** The legend includes categories like '해양문화공동체자원' (Marine Cultural Community Resources) and 'No Data'. The scale ranges from 1-3 (light blue) to 10-14 (dark purple). The map shows a high concentration of resource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Yellow Sea, particularly around the Korean Peninsula.
- 해상문화인프라자원 (Marine Cultural Infrastructure Resources):** The legend includes categories like '해양문화인프라자원' (Marine Cultural Infrastructure Resources) and 'No Data'. The scale ranges from 1-5 (light blue) to 40-100 (dark red). The map shows a high concentration of resource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Yellow Sea, particularly around the Korean Peninsula.
- 해상자연자원 (Marine Natural Resources):** The legend includes categories like '해양자연자원' (Marine Natural Resources) and 'No Data'. The scale ranges from 1-5 (light blue) to 40-55 (dark green). The map shows a high concentration of resource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Yellow Sea, particularly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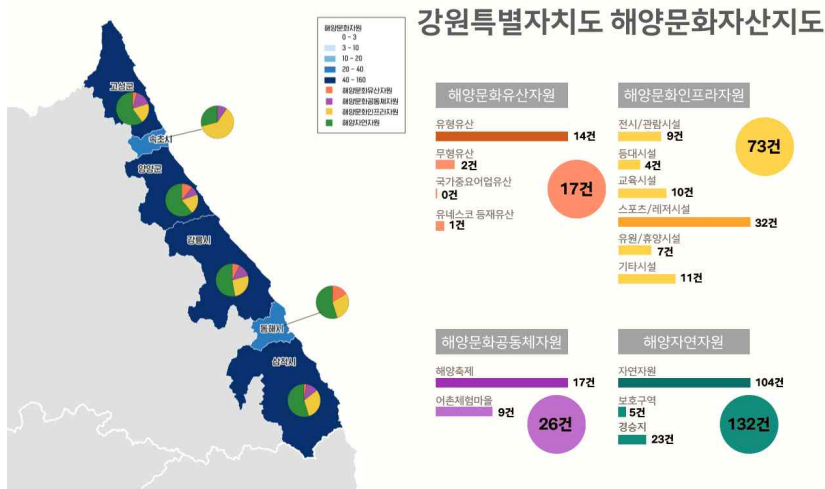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5) 강원연안

강원특별자치도 연안 시군구 6곳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문화자원의 수는 총 248건으로 해양문화유산자원이 17건,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이 26건,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73건, 해양자연자원이 132건 분포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53건으로 해양문화자원의 수가 가장 많고 양양군(46건), 고성군(45건), 삼척시(42건)가 뒤를 잇는다.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비중이 높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제외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연안 시군구 모두 해양자연자원의 비중이 크다. 네 가지 유형의 해양문화자원을 보유한 연안 시군구는 다수 있으나 해양문화유산자원의 비중은 적은 편이며 해양자연자원이 과반 이상이다. 또한 연안 시군구의 해양문화자원 평균 건수는 41.3건으로 전국 평균(27.8)에 비해 매우 높기에 다수의 해양자연자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2-12〉 강원 해양문화자산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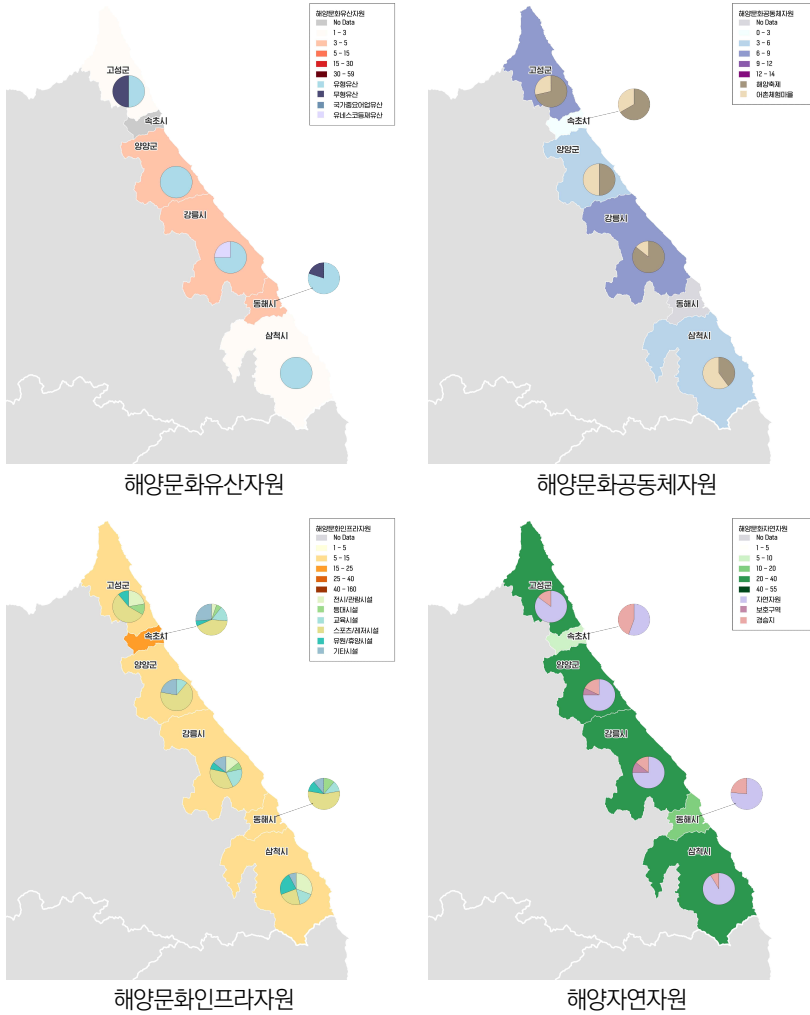
유형별 해양문화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17건의 해양문화유산자원에서 유형유산이 14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동해시(5건)와 양양군(5건), 강릉시(4건)의 해양문화유산자원이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문화유산의 빈도는 전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난다.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의 경우 26건 중에서 해양축제 유형의 자원이 17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강릉시(7건)와 고성군(7건)에 주로 해양문화공동체 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경포섬머페스티벌’, ‘삼포해변 서핑축제’와 같은 해양축제유형 자원의 수도 가장 높다.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경우 전체 73건 중에서 스포츠/레저시설의 빈도가 32건으로 가장 높다. 속초시가 19건으로 가장 많은 해양인프라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강릉시(14건)와 삼척시(13건)가 뒤를 잇는다. 모든 연안 시군구에서 스포츠/레저시설의 빈도가 높지만, 특히 양양시의 경우 총 9건의 해양문화인프라자원 중 스포츠/레저시설이 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자연자원의 경우 전체 132건 중에서 자연자원이 104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전국에 비해 해양자연자원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모든 연안 시군구에서 자연자원의 비중이 가장 크며, ‘주문진해변’, ‘강릉경포해수욕장’ 등과 같은 대다수 해수욕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2-13〉 강원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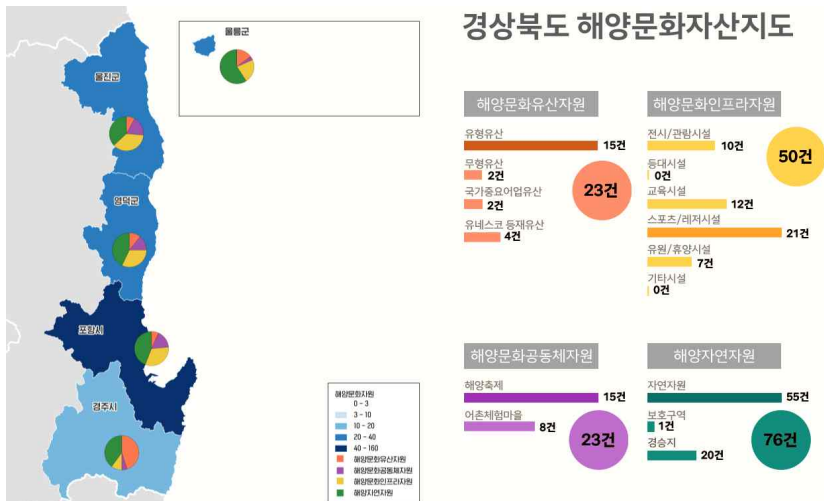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6) 경북연안

경상북도 연안 시군구 5곳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문화자원의 수는 총 172건으로 해양문화유산자원이 23건,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이 23건,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50건, 해양자연자원이 76건 분포하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가 59건으로 해양문화자원의 수가 가장 많고, 울진군(38건)이 뒤를 잇는다.

경상북도는 전반적으로 해양자연자원과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경주시만 유일하게 해양문화유산자원의 비중이 높다. 또한 경상북도의 연안 시군구는 네 가지 유형의 해양문화자원이 모두 분포하고 있다. 경상북도 연안 시군구의 해양문화자원 평균 건수는 34.4건으로 전국 평균(27.8)에 비해 높은 편이며, 따라서 다양한 해양문화자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림 2-14〉 경북 해양문화자산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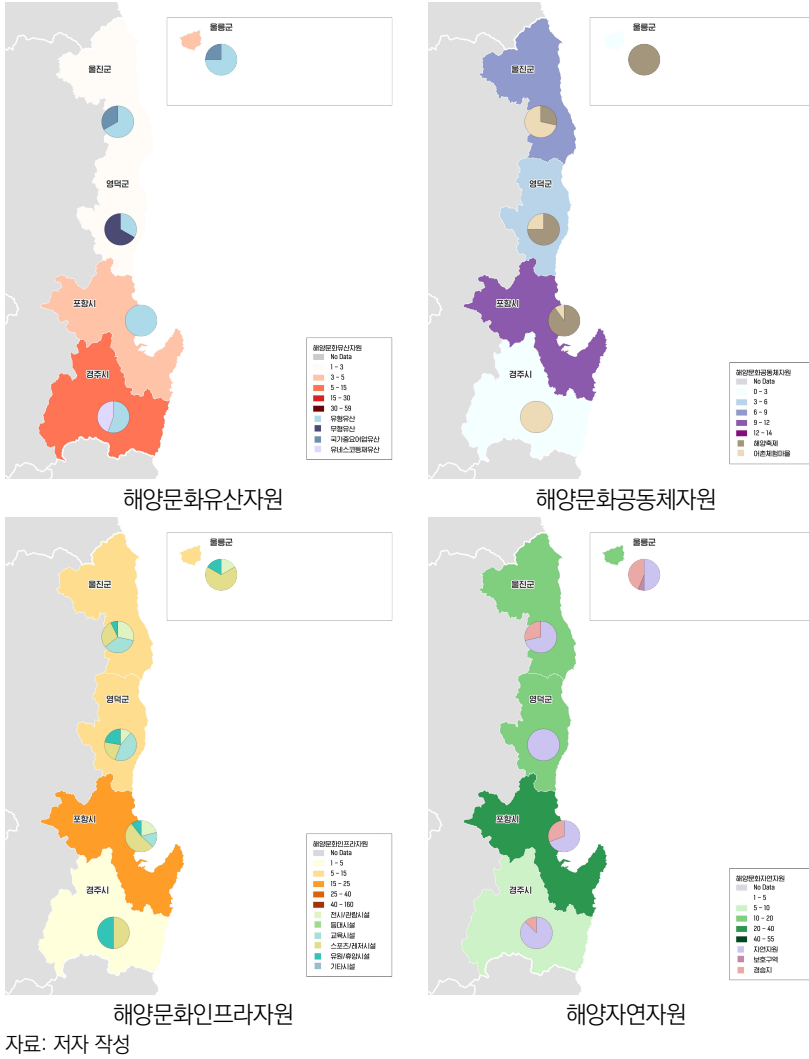
유형별 해양문화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23건의 해양문화유산자원에
서 유형유산이 15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주시의 해양문화유산자
원이 총 9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으며, 5건의 유형유산과 4건의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무형유산은 영덕시에 ‘영덕별신굿’과
‘영덕 토염’ 2건 존재하며, 국가중요어업유산 ‘울진·울릉 돌곽 떼배 채취어
업’이 존재한다.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의 경우 23건 중에서 해양축제 유형의 자원이 15건
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포항시(10건)와 울진군(7건)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
나, 포항시는 ‘포항국제불빛축제’와 같은 해양축제의 비중이 높은 반면, 울
진군은 어촌체험마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경우 전체 50건 중에서 스포츠/레저시설의 빈도
가 21건으로 가장 높다. 포항시(19건)와 울진군(14건)에 많은 해양인프라
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포항시와 울릉군의 경우 스포츠/레저시설의 비중이
크지만 울진군과 영덕군의 경우 교육시설의 비중이 큰 특징을 보인다.

해양자연자원의 경우 전체 76건 중에서 자연자원이 55건으로 가장 빈도
가 높다. 포항시의 해양자연자원의 빈도가 26건으로 가장 높고 울릉군(16
건), 울진군(14건), 영덕군(12건)이 뒤를 잇는다. 해수욕장과 해안둘레길이
포함된 자연자원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경승지는 대다수가 ‘영일대전망대’,
‘독도일출전망대’와 같은 전망대 및 조망시설에 해당한다.

〈그림 2-15〉 경북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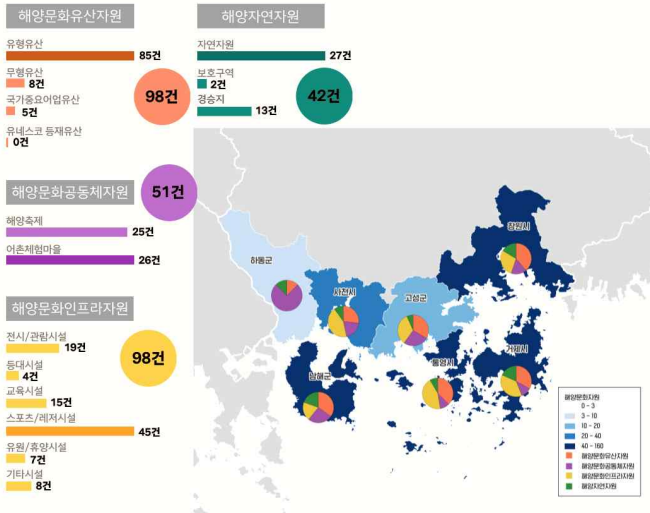
(7) 경남연안

경상남도 연안 시군구 7곳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문화자원의 수는 총 289건으로 해양문화유산자원이 98건,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이 51건,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98건, 해양자연자원이 42건 분포하고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가 82건으로 해양문화자원의 수가 가장 많고, 통영시(59건), 창원시(49건), 남해군(46건)이 뒤를 잇는다.

경상남도는 전반적으로 해양문화유산자원과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하동군만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의 비중이 높다. 또한 경상남도의 한려수도 권역 주변의 연안 시군구에서 해양문화자원의 빈도가 높으며 네 가지 유형의 해양문화자원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경상남도 연안 시군구의 해양문화자원 평균 건수는 41.3건으로 전국 평균(27.8)에 비해 높은 편이며, 따라서 다양한 해양문화자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림 2-16〉 경남 해양문화자산 지도

경상남도 해양문화자산지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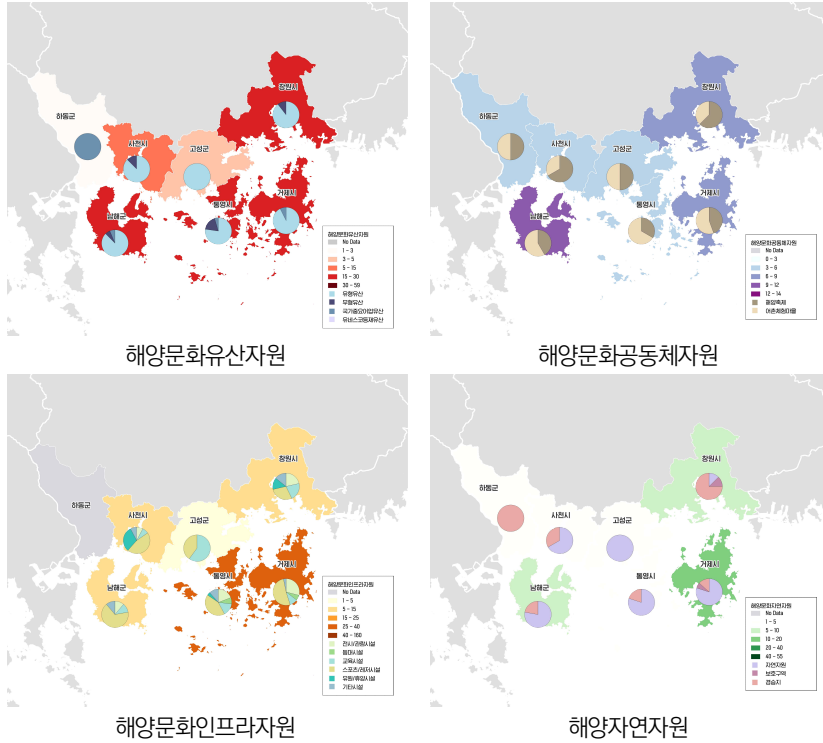
유형별 해양문화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98건의 해양문화유산자원에서 유형유산이 85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려수도 권역인 거제시의 해양문화유산자원이 총 27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으며, 통영시(22건), 창원시(19건), 남해군(16건)이 뒤를 잇는다. 거제시는 25건의 유형유산과 ‘통영·거제 건내량 돌미역 채취어업’, ‘경남 거제 송어 망쟁이 들망어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2건이 존재한다.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의 경우 51건 중에서 어촌체험마을이 26건, 해양축제 유형의 자원이 25건으로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남해군(12건)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거제시(9건)와 창원시(8건)가 뒤를 잇는다. 남해군과 거제시의 경우 어촌체험마을의 비중이 크나, 창원시의 경우 ‘진해군 항제’, ‘창원통합축제’와 같은 해양축제의 비중이 더 크다.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경우 전체 98건 중에서 스포츠/레저시설의 빈도가 45건으로 가장 높다. 거제시(31건)와 통영시(26건)에 많은 해양인프라 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스포츠/레저시설이 16건으로 과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천시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유원/휴양시설의 비중이 크고 4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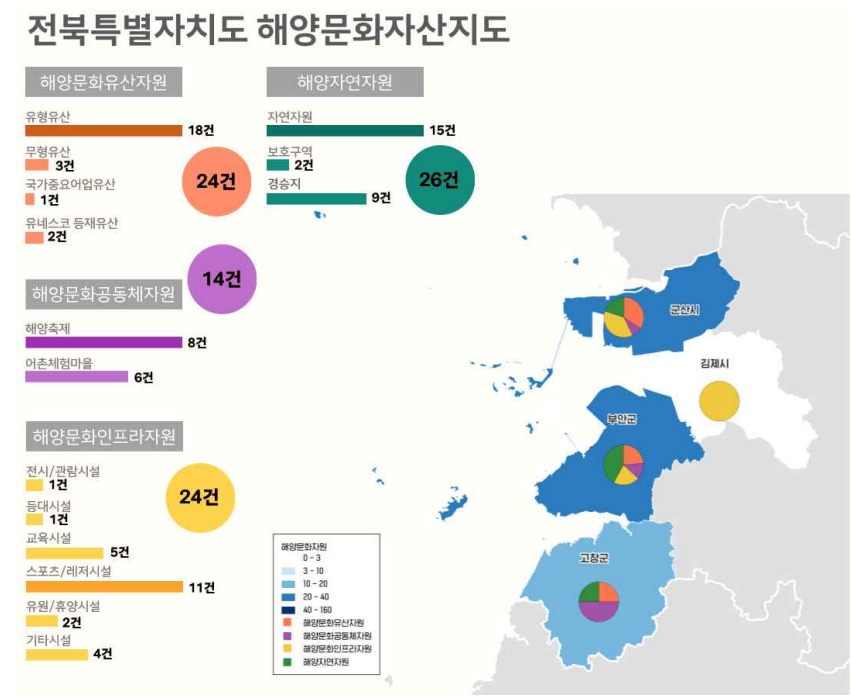
해양자연자원의 경우 전체 42건 중에서 자연자원이 27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거제시의 해양자연자원의 빈도가 15건으로 가장 높으나 거제시를 제외한 다른 연안 시군구의 해양자연자원의 빈도는 낮다. 다수의 자연자원은 해수욕장이나 ‘실안노을길’, ‘공룡화석지해변길’과 같은 유명한 해안둘레길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마산만 봉암곶별 습지보호지역’과 같은 보호지역과 ‘진해해양공원’, ‘소매물도 신비의 바닷길’과 같은 경승지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그림 2-17〉 경남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연안 시군구의 경우 서로의 해양문화자원을 연계해야 다양한 유형으로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만금 안쪽의 김제시의 경우 해양문화자원의 수가 3건으로 낮은 빈도를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연안 시군구의 해양문화자원 평균 건수는 22.0건으로 전국 평균(27.8)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다.

〈그림 2-18〉 전북 해양문화자산 지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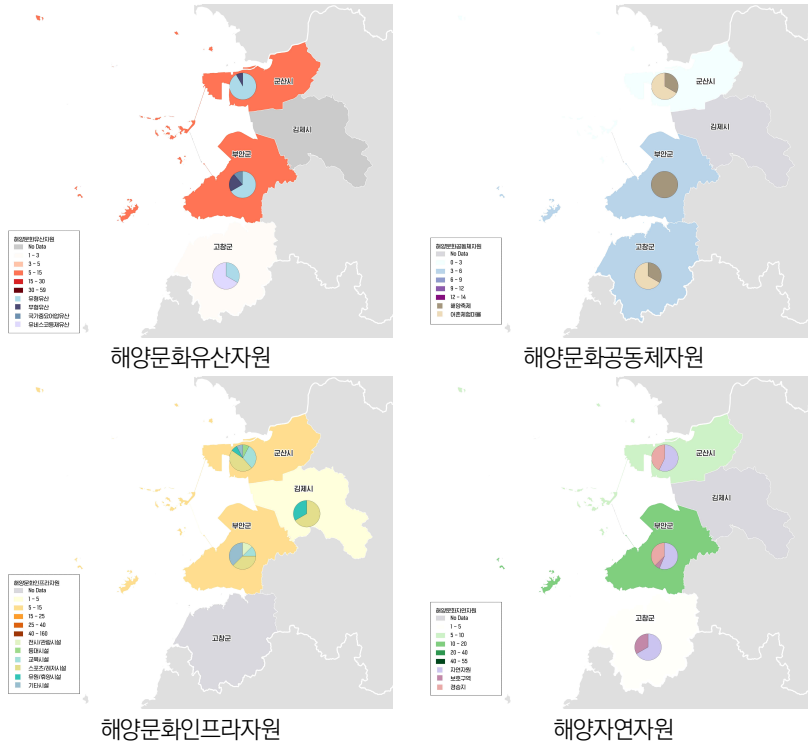
유형별 해양문화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24건의 해양문화유산자원에 서 유형유산이 18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군산시의 해양문화유산자원이 총 12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군산시에는 11건의 유형유산과 1건의 무형유산이 분포하고 있으며, 고창군의 경우 ‘판소리(서편제)’, ‘고인돌 유적’과 같은 유네스코 등재유산이 2건 위치한다.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의 경우 14건 중에서 해양축제 유형의 자원이 8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고창군(6건)과 부안군(5건)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부안군의 경우 ‘곰소젓갈발효축제’와 같은 해양축제만 5건 분포한다. 반면 고창군과 군산시의 경우 어촌체험마을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경우 전체 24건 중에서 스포츠/레저시설의 빈도가 11건으로 가장 높다. 군산시(13건)에 가장 많은 해양인프라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에는 해양문화인프라자원만 3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스포츠/레저시설이 가장 많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해양자연자원의 경우 전체 26건 중에서 자연자원이 15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부안군의 해양자연자원의 빈도가 16건으로 가장 높다. 다수의 자연자원은 해수욕장이며, 경승지는 대다수가 ‘비응도전망대’와 같은 전망대 및 조망시설에 해당한다.

〈그림 2-19〉 전북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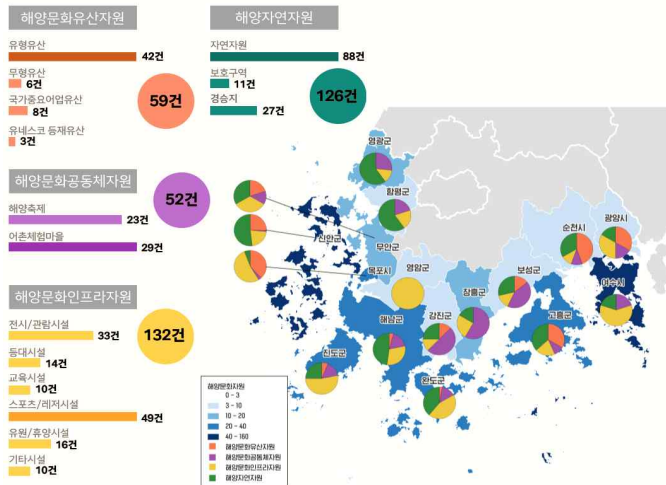
(9) 전남연안

전라남도 연안 시군구는 16곳으로 가장 많으며, 연안 시군구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문화자원의 수는 총 369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해양문화유산자원이 59건,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이 52건,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132건, 해양자연자원이 126건 분포하고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83건)에 해양문화자원의 수가 가장 많으며, 여수시(50건), 완도군(36건), 목포시(34건), 진도군(32건), 고흥군(30건), 해남군(23건)이 뒤를 잇는다.

전라남도는 연안 시군구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양문화자원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이 위치한 서해안과 인접한 연안 시군구의 경우 해양자연자원의 비중이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해안과 서해안의 중간지역에 해당하는 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완도군의 경우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섬이 적고 내륙과 가까운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의 경우 해양공동체자원의 비중이 크며, 전라남도 동쪽에 위치한 고흥군, 순천시, 광양군의 경우 해양문화유산자원의 비중이 높다. 지역의 특색과 위치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해양문화자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라남도 연안 시군구의 해양문화자원 평균 건수는 23.1건으로 전국 평균(27.8)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다. 특히 영암군(5건), 함평군(6건), 광양시(7건)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문화자원의 빈도를 보이고 있기에 전라남도 연안 시군구의 해양문화자원의 편차는 매우 큰 편이다.

〈그림 2-20〉 전남 해양문화자산 지도

전라남도 해양문화자산지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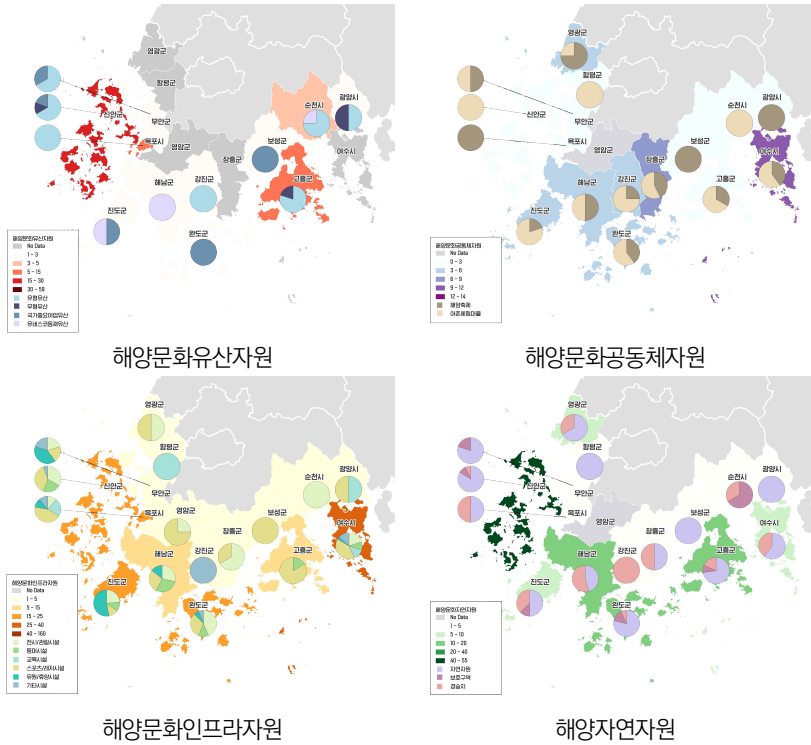
유형별 해양문화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59건의 해양문화유산자원에서 유형유산이 42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신안군의 해양문화유산자원이 총 21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으며, 목포시(13건)와 고흥군(10건)이 뒤를 잇는다. 반면 이외의 전라남도 연안 시군구에서 해양문화유산의 빈도는 4건 이하로 크지 않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의 경우 해양문화유산자원의 빈도는 적지만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 ‘완도 지주식 김 양식업’ 등의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고인돌 유적’ 등의 유네스코 등재유산이 위치한다.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의 경우 52건 중에서 어촌체험마을 유형의 자원이 29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나 해양축제의 빈도도 23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수시(10건)와 장흥군(7건)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어촌체험마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전라북도 근처의 영광군의 경우 ‘영광천일염젓갈갯벌축제’와 같은 해양축제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경우 전체 132건 중에서 스포츠/레저시설의 빈도가 49건으로 가장 높다. 여수시(30건)에 가장 많은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신안군(18건), 목포시(18건), 진도군(17건), 완도군(16건)이 뒤를 잇는다. 여수시의 경우 모든 유형의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성이 높다. 또한 남해안과 서해안의 중간지역에 해당하는 목포시, 영광군, 진도군, 완도군의 경우 유원/휴양시설이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해양자연자원의 경우 전체 126건 중에서 자연자원이 88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신안군의 해양자연자원의 빈도가 36건으로 가장 높다. 다수의 자연자원은 해수욕장과 해안둘레길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보호구역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림 2-21〉 전남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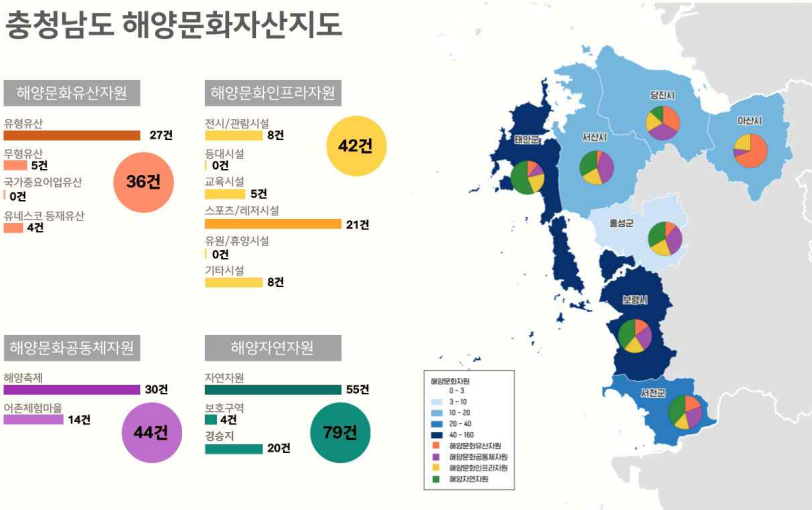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10) 충청연안

충청남도 연안 시군구 7곳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문화자원의 수는 총 201건으로 해양문화유산자원이 36건,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이 44건,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42건, 해양자연자원이 79건 분포하고 있다. 충청남도 태안군이 66건으로 해양문화자원의 수가 가장 많고, 보령시군(54건)이 뒤를 잇는다.

충청남도 또한 연안 시군구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양문화자원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서해안과 인접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에서는 해양자연자원의 비중이 큰편이다. 반면 아산만과 인접한 당진시와 아산시의 경우에는 해양문화유산자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아산시를 제외하면 충청남도의 연안 시군구는 네 가지 유형의 해양문화자원이 모두 분포하고 있다. 경상북도 연안 시군구의 해양문화자원 평균 건수는 28.7건으로 전국 평균(27.8)과 유사한 편이며,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해양문화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림 2-22〉 충남 해양문화자산 지도



자료: 저자 작성

유형별 해양문화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36건의 해양문화유산자원에 서 유형유산이 27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산시의 해양문화유산자원이 총 9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으며, 보령시(8건)와 태안군(7건)이 뒤를 잇는다. 전체적으로 유형유산이 다수 분포하나 상대적으로 내륙과 가까운 서산시와 홍성군의 경우 ‘앞은곳(내포 앞은곳)’과 ‘홍성수룡동당제’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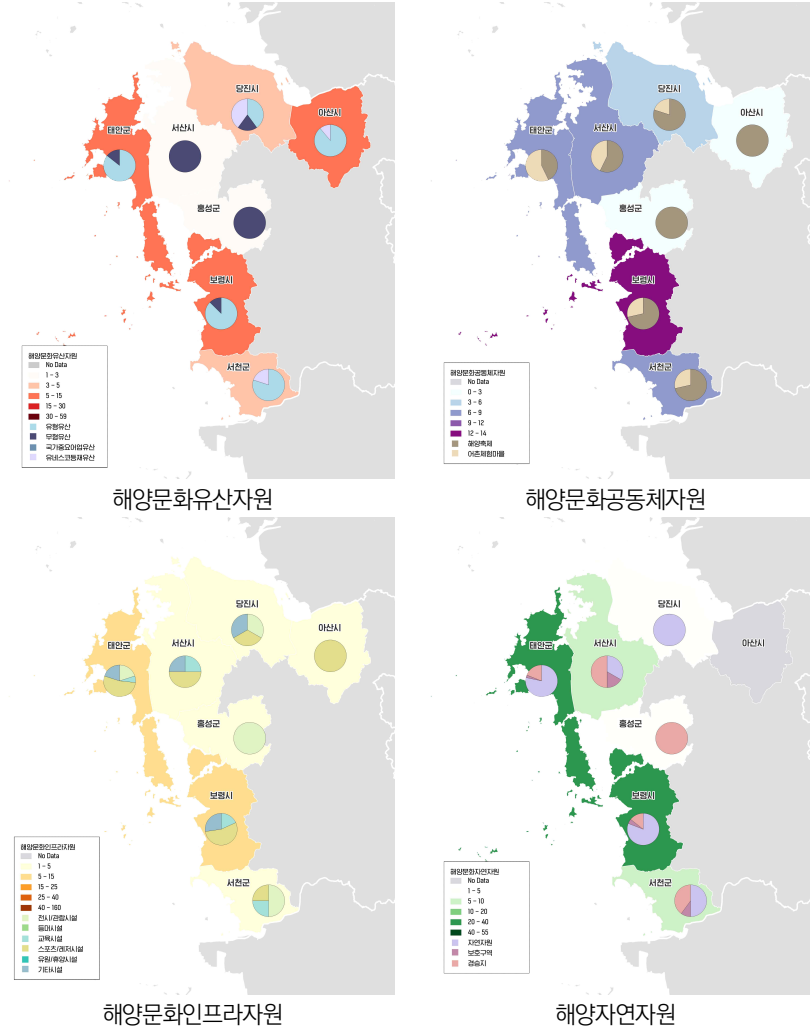
무형자원이 존재한다.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의 경우 44건 중에서 해양축제 유형의 자원이 30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보령시가 14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서산시(7건), 태안군(7건), 서천군(7건)이 뒤를 잇는다. 태안군만 어촌체험마을 자원의 비중이 크며, 나머지 충청남도 지역은 ‘보령머드축제’, ‘서산갯마을축제’ 등의 해양축제 자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경우 전체 42건 중에서 스포츠/레저시설의 빈도가 21건으로 가장 높다. 전국과 비교했을 때 충청남도의 해양인프라자원은 높은 편이 아니다. 태안군(15건)과 보령시(11건)에 가장 많은 해양인프라 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태안군과 보령시 모두 스포츠/레저시설의 비중이 높으며, ‘대천항 수산시장’, ‘안면도수산시장’ 등의 수산시장에 해당하는 기타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해양자연자원의 경우 전체 79건 중에서 자연자원이 55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태안군(37건)과 보령시(21건)에 가장 많은 해양자연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다수의 자연자원은 해수욕장이며,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과 같은 보호구역과, ‘서산버드랜드등지전망대’, ‘태배전망대’와 같은 전망대 및 조망시설에 해당하는 경승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2-23〉 충남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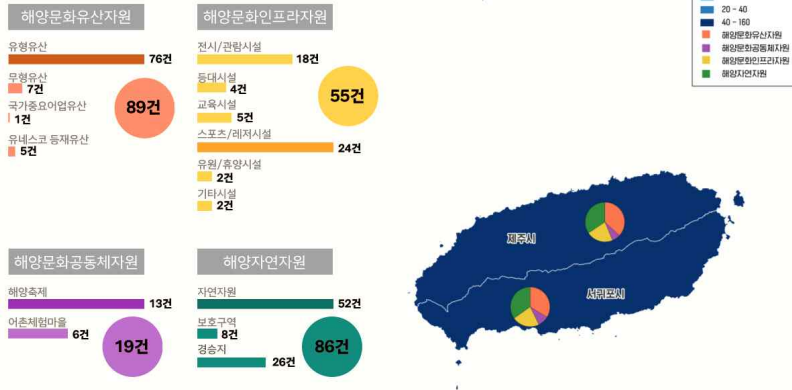
(11) 제주연안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시군구 2곳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문화자원의 수는 총 249건으로 연안시군구의 숫자 대비 가장 많은 해양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해양문화유산자원이 89건,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이 55건,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이 19건, 해양자연자원이 86건 분포하고 있다. 해양문화자원의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160건, 서귀포시가 89건 위치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해양문화유산자원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해양자연자원과 해양인프라자원의 비중도 적지 않아 네 가지 유형의 해양문화자원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해양문화자원의 빈도도 전국 평균(27.8)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해양문화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림 2-24〉 제주 해양문화자산 지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문화자산지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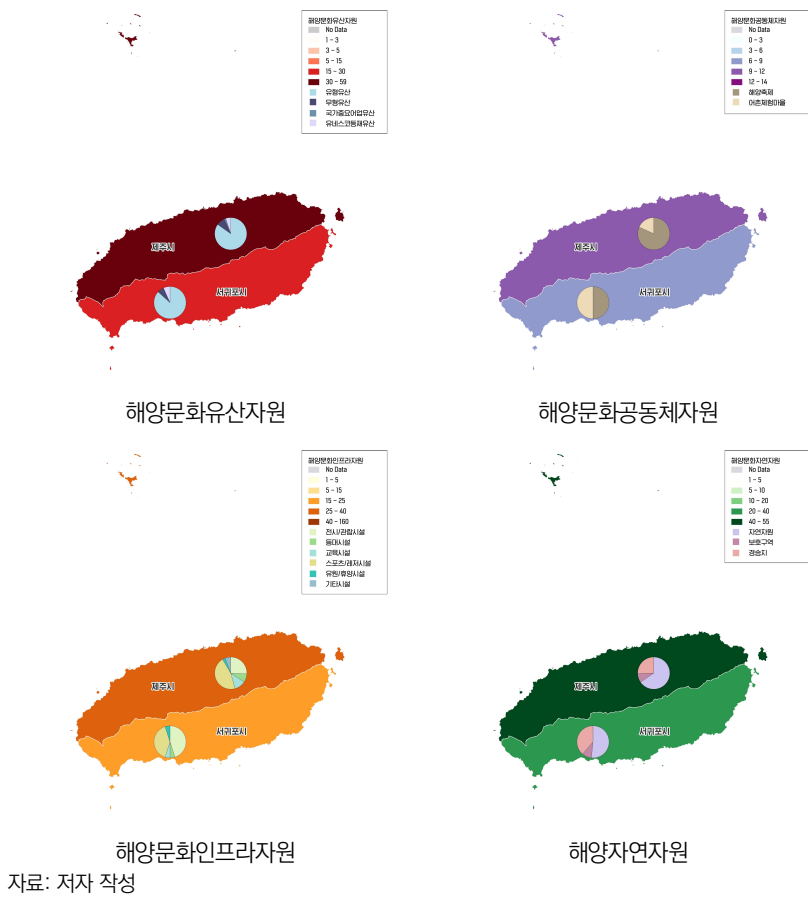
유형별 해양문화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89건의 해양문화유산자원에서 유형유산이 76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에 59건, 서귀포시에 30건 분포하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유형유산의 비중이 가장 크다. ‘제주테우문화’, ‘제주 해녀문화’ 등의 무형유산과 유네스코 등재유산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해양문화공동체자원의 경우 19건 중에서 해양축제 유형의 자원이 13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제주시에 11건, 서귀포시에 8건 분포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어촌체험마을 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해양축제와 비슷한 비중을 보인다.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경우 전체 55건 중에서 스포츠/레저시설의 빈도가 24건으로 가장 높다. 제주시에 35건, 서귀포시에 20건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을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보다 전시/관람시설의 비중이 조금 더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자연자원의 경우 전체 86건 중에서 자연자원이 52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제주시에 55건, 서귀포시에 31건 분포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보다 경승지의 비중이 더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5〉 제주 해양문화자원 분류지도



제3절 종합분석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11개 연안 시도의 해양문화자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해양문화자원의 분포는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가장 풍부한 해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울산과 전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양문화유산자원, 해양문화공동체자원, 인프라자원, 자연자원의 네 가지 유형이 분포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특정 유형의 자원이 우세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안 시도의 지리적 위치와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에 위치한 지역들은 해양자연자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남해안 지역은 유산자원과 인프라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 및 주요 항만도시에서는 해양문화인프라자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의 경제력과 행정역량이 해양문화자원의 개발 및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해양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문화공동체자원, 특히 해양축제와 어촌체험마을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양문화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며, 해양문화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지역에서 해양자연자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양문화자원 개발 시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 사이의 균형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03

문화 연계형 도시활력사업의 동향 및 사례 분석

제1절 문화 연계형 도시활력사업의 국내외 정책동향 ——

1. 국내 정책동향 분석

1)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어촌의 어가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2018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이 2018년~2022년까지 300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 완료함에 따라 2022년 9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이 300여 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위한 SOC사업이었다면,⁴¹⁾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경제·생활·안전 등 어촌 환경개선과 인력 정착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1) 관계부처합동(2018.6.)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어항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어촌·어항 재생사업’ 개념, 추진지원단 지정, 지역협의체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고,⁴²⁾ 후속 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역시 동일한 법에 근거하고 있다.

〈표 3-1〉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별 추진방식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사업 기간	• 2023년~2026년(4년)	• 2023년~2026년(4년)	• 2023년~2025년(3년)
사업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 총 사업비: 400억 원 이내 (민간 100억원 이상) • 재정지원: 300억 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자 담 별도)	• 총 사업비: 100억 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자담 별도)	• 총 사업비: 50억 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추진 방식	• 대상 거점어항 주변(5km, 5분 이내) 민간투자 사업을 기반으로 재정사업과 민자 사업을 연계하여 통합 추진 • 재정지원은 소득·복지 복합 시설 및 주거 등 생활인프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 어항을 중심으로 마을간 교류, 주요 이용시설을 고 려해 ‘어촌생활권’을 구분 하고, 생활권별 사업추진 • 어촌앵커조직(민간)이 현 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	• 지자체가 주민 의견수렴 을 통해 어업 필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

자료: 해양수산부(2022.9.), p. 4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생활권의 규모·유형별로 5년간 사업 대상 총 300개, 재정 3조 원을 맞추어 지원할 계획이다(국정과제 73). 사업 유형에는 총 세 가지가 있다: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유형별로 선정 개소와 예산지원 규모가 상이한데, ① 어촌 경제거점은 25개소에 총 7,500억 원,⁴³⁾ ② 자립형

4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0.2.28.)(검색일: 2024.7.24.)

43) 유형1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하길 제시하고 있다.

어촌은 175개소에 총 1조 7,500억 원, ③ 소규모 어촌은 100개소에 5,000억 원 등 5년간 개소당 300억 이내로 총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⁴⁴⁾ 2023년 기준,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은 5개소, 유형2 ‘어촌 생활 플랫폼’은 30개소,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는 30개소가 선정되었다.

문화 연계형 도시활력사업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업유형 중 두 번째 유형인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이다. 3개 사업유형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유형도 두 번째 유형이다. 유형2의 경우, 현장에서 어촌 앵커조직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① 어촌형 소득원 확대와 ② 어촌 생활편의 지원 등에 집중하는 유형이다. 먼저 ① 어촌형 소득원 확대는 수산물 상품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거나 어촌 소득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다음으로 ② 어촌 생활편의 지원의 경우, 청년 주거 기반을 확보하거나 어촌생활권 내 생활서비스 지원 공간 마련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빈집 리모델링이나 공공주택(10~20호)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어촌 유입을 위한 주거를 안정화하거나 주민 융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입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의 사업 목적은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어촌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봄,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거점시설⁴⁵⁾을 조성하고, 관계인구 유입 전략과 창업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체계는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형2의 추진체계는 해수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어촌앵커조직(민간, 중간지원조직)-지역 주민 등이 연계·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44)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홈페이지(검색일: 2024.7.24.)

45) 이 사업을 통해 어촌 돌봄 스테이션, 어촌 먹거리 스테이션, 어촌살기 스테이션 등 다양한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하려고 한다.(해양수산부, 2022.9.)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어촌에 새로운 일자리 3만 6천 개, 삶의 질 수준 향상, 생활인구 200만 명 증가 등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연안도시의 경제·생활·안전 인프라가 확충되길 기대하고 있다.⁴⁶⁾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법정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하였고, 2023년 12월부터는 후속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문화도시사업(2019년~2022년)

문화도시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도시브랜딩전략을 통해 사회·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를 지정하기에 법정 문화도시사업이라고도 부른다.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8780호)에서 정의하는 문화도시는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⁴⁷⁾ 유럽 문화수도 사업(‘85년~), 아메리카 문화수도(‘00년~),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04년~) 등의 해외의 문화도시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2019년부터 추진된 문화도시사업은 문화를 통해 지역 인구 유출·지역경제 문제 대응 및 지역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정부·지자체가

46)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12.19.)(검색일: 2024.7.24.)

47) 문화도시의 정책적 개념은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사회성장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도시”로 정의(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p. 87.)

그간 추진한 거점형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⁴⁸⁾ 등을 추진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추진 지역은 이전에 유사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한 대상지였다.⁴⁹⁾ 유사한 문화도시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이 추진 중인 다양한 문화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정방식은 지역이 신청하는 문화브랜드를 바탕으로 지정하며, 총 5개의 사업유형이 있다: ① 역사전통 중심형, ② 예술 중심형, ③ 문화산업 중심형, ④ 사회문화 중심형, ⑤ 지역자율형. 다만 실제 공모과정에서는 대부분 지역자율형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⁵⁰⁾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전,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 지정신청 분야 외 사업들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약 1년간의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지역문화진흥법」 상에 이러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문화도시의 지정/취소 등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사업수행 역량 및 지속 가능성,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등 세 가지 부문에서 평가된다. 최우수 도시는 1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는 반면, 미흡도시는 3억 원 내외 감액이나 3번 이상 미흡도시로 평가받을 시에는 지정취소를 검토하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⁵¹⁾ 문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한 그해의 성과를

4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5년간 각 도시에 7.5억 원을 지원한 문화도시형, 3년간 각 마을에 2억 원을 지원한 문화마을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49)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은 5곳이었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지역은 10곳이었으며(그중 공주시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복), 문화적 도시재생과 법정문화도시 사업 추진 도시는 2곳이다.(노수경·김수경, 2022, p. 34.)

50) 이순자·유희연·김민지(2023), p. 50.

평가하여 최우수 도시를 선정하고, 매해 최우수 도시 중 대표 문화도시 1곳을 선정하는 ‘올해의 문화도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공통적으로 도시 사업분야별 기본사업비에 차등적으로 규모 유형별 선별사업비 조합을 통해 구성된다. 예를 들어 역사전통, 문화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등 4개 사업분야 기본사업비가 각 도시당 75억 원에 도시 규모별로 도시일반형(인구 50만 미만)은 25~45억 원, 권역거점형(인구 50만~100만 미만)은 45~75억 원, 대도시형(인구 100만 이상)은 75~125억 원의 선별사업비가 더해져 사업예산이 편성된다.⁵²⁾ 이런 방식으로 도시 일반형은 100억 원~120억 원, 권역거점형은 120억 원~150억 원, 대도시형은 150억 원~200억 원 이내로 사업예산 규모가 결정된다. 2023년 기준, 문체부는 문화도시 24곳에 15억 원씩을 지원하여 문화공간 3,658곳을 발굴 및 활용하였고, 2024년에는 문화도시 24곳에 총 3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⁵³⁾

추진체계는 중앙-지역-부처협업 등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중앙은 문체부-문화도시심의위원회(민·관)-문화도시지원센터(민간)가, 지역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민·관)와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게 되는 구조이다.⁵⁴⁾ 부처협업의 경우,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도시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51) 문화체육관광부(n.d.), p. 1.

5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p. 183.

5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4.3.12.)(검색일: 2024.7.22.)

54) 문화체육관광부(2018.5.)

(2)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은 문화도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문화로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즉, 이 사업은 문화가 주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문제 대응 등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근거법은 문화도시사업과 동일하게 「지역문화진흥법」이며, 이 법에 의거해 문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법정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하게 된다.

2023년 12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 총 13곳을 선정하였다.⁵⁵⁾ 문화도시사업과 유사하게 2024년 말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한 뒤 3년간(‘25~’27년) 최대 2,600억 원(국비 50·지방비50)을 지원할 계획이다.⁵⁶⁾

후속 사업이다 보니 지정 절차나 후속 조치 등 많은 부분이 기존 문화도시사업과 유사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지정 절차는 기존 문화도시사업과 동일하게 ① 지정신청, ② 조성계획 승인, ③ 약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④ 추진실적 심사, ⑤ 최종 지정 및 공표 등 총 5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계획에서는 문화적·경제적·사회적 효과 창출 가능성을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지정 전 필수 고려 사항으로 보조금 의존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민관합작투자과 기금·펀드 등을 활용한 민관협력 재원 조달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과 국비 지원사업 이후(‘28년~) 사업의 지속가능성까지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⁵⁷⁾

55) 모두의나라살림(2024.3.20.)(검색일: 2024.6.18.)

56)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4.3.12.)(검색일: 2024.7.22.)

57) 문화체육관광부(2023.6.)

사업의 후속 조치는 문화도시사업과 유사하게 지자체가 각 연도의 사업 성과를 제출하면 문체부, 심의위원회, 성과평가단이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국비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거나 성과목표 이행이 낮은 곳에 대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사업유형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아래 표와 같이 필수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 사업을 살펴보면, 기존 문화도시사업에서 추진하던 문화공간 조성과 문화향유 프로그램 사업에 더해 민관협력을 통한 문화산업의 확산과 인력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3-2〉 대한민국 문화도시 필수 사업

필수 사업 영역	필수 사업	예산 편성 기준
1. 지역문화 참여·향유 기반 구축·운영	① 문화참여·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 인건비·경상비는 1 회계년도 기준 사업 예산의 10% 이내 • 기반시설 조성예산 (HW)은 총예산의 30% 이내
	② 문화공간 조성·활용·재생·발굴 등을 위한 사업	
2.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운영	③ 지역문화에 기반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문화콘텐츠, 브랜드 등)에 대한 생산·투자·후원·확산 사업	
	④ 창의적인 문화도시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창업) 사업	

자료: 저자 재작성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사업 종합

문화도시사업과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은 지원 대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두 사업은 근거법, 추진체계, 선정 방식, 후속조치 등은 매우 유사하게 추진된다. 추가로 두 사업 모두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문화도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초기에 광역지자체가 선정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5차 문화도시 이후부터 광역지자체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문화도시사업에는 기존에 유사 문화도시사업을 수행했던 지역들이 대다수 포함되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추가로 국비 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문체부의 지역 문화활력촉진지역 대상지(‘22~’23년)와 1~5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은 제외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의 조성계획을 승인했고, 2024년 1년간 예비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한 뒤, 3년간(‘25~’27년) 최대 2,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⁵⁸⁾

사업유형의 경우 문화도시사업은 역사,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에서는 사업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대신 필수 사업을 제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표 3-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사업 종합

구분	문화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지정)	
중점사항	•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문화사업	• 문화균형발전 선도모델 육성
근거법	• 「지역문화진흥법」	
추진체계	• 문체부-관계부처-문화도시심의위원회-지자체-문화도시추진체계 등 연계·협력	
사업유형	• ① 역사전통 중심형, ② 예술 중심형, ③ 문화산업 중심형, ④ 사회문화 중심형, ⑤ 지역자율형	-
사업대상	• 전국 기초지자체 (5차 이후 광역지자체 제외)	• 전국 기초지자체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문체부 지역 문화활력촉진사업 대상지, 1~5차 문화도시 제외)
선정 방식	• ① 공모 → ②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 ③ 예비사업 추진(1년) → ④ 심사 → ⑤ 최종 지정 후 본사업 추진(5년)	

58) 세계로컬타임즈(2024.1.2.)(검색일: 2024.7.25.)

구분	문화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개소	• 총 24곳(4년) (1차 7개, 2차 5개, 3차 6개, 4차 6개)	• 총 7곳(7개 권역별 1곳) 지정 예정
재정지원	• 최대 200억 원(5년간, 국50%:지50%)	• 최대 200억 원(3년간, 국50%:지50%)
후속조치	• 각 연도 성과평가 이후 다음 연도 예산 차등 지급 또는 미흡 시 지정취소 검토	
지원 사업	• 소프트웨어(하드웨어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자료: 노수경·김수경(2022); 문화체육관광부(2018.5.); 문화체육관광부(2023.6.); 모두의나라살림(2024.3.20.)(검색일: 2024.6.1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4.3.12.)(검색일: 2024.7.2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정 지역과 선정 개소이다. 문화도시사업의 경우, 1차 7곳, 2차 5곳, 3차 6곳, 4차 6곳 등 총 24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에서는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1개소 내외, 총 7곳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하였다.

〈그림 3-1〉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개소



주: 문화도시는 총 24곳을 지정했고,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권역별 1곳씩 지정 예정
 자료: 양혜원(2024.7.2.), p. 5.; 문화체육관광부(2023.6.), p. 2.

‘문화도시’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정책에 등장한 시점은 2004년 ‘지역거점 문화도시’부터였는데, 이 시점부터 문체부는 다양한 문화도시사업을 수행해 왔었다. 하지만 2005년 국고보조금이 개편되면서 점차 국가보조금으

로 운영하던 많은 정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국비보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지방이양되기 시작하여, 2020년~2023년 사이 문체부 8,814억 원 규모의 10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아래 그림 참고).

〈그림 3-2〉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지방이양 현황(2005년~2024년)

문체부 사업의 지방이양 현황(2005~2024)	
2005년 국고보조금 개편	20개 사업(약 303억원) 지방이양되어 분권교부세 대상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문화의집 조성 및 운영지원, 예술창작공간 조성 지원 등) 11개 사업(약 941억원) 균특회계로 이관 (공립문화시설 건립 지원, 비엔날레,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야외음악당 건립 등)
2020년 지방이양	- 문체부 5개 사업 4,033억원 규모 이양 - 문화도시조성사업 등 균특회계로 이관, 문진기금 예술의 관광지원(91억원) - 균특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10개 사업, 1,076억원, 문예회관, 미술관 등) 및 지역문화행사지원(168억원) 지방이양
2022년 지방이양	- 문체부 3개 사업 265억원 규모 이양 (일반) 문화예술교육활성화(107억원), (문진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61억원) 지방이양 - 공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등
2023년 지방이양	- 문체부 2개 사업 4,515억원 규모 이양 - 균특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사업'(2,614억원) 등 지방이양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2024년 지방이양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40억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33억원) 지방이양 - 지역문화진흥사업(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지특회계로 이관(255억원)



- ✓ 2020~2023년 문체부 10개 사업 8,814억원 지방이양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분야 사업 2023년 대폭 감소
 - (25 포괄보조사업) 폐산업시설 등 유류공간 문화재생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문화도시 조성 등
- ✓ 지역상생발전기금(전환사업보전계정)을 통해 2026년까지 한시적 보전

자료: 양혜원(2024.7.2.). p. 3.

3) 부처 협업 지역활력타운사업⁵⁹⁾

지역활력타운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혁신적인 도시재생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사업의 핵심은 은퇴자와 청년층의 지방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기반 조성으로, 주거, 문화, 복지, 고용 등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⁶⁰⁾ 여기서 지역활력타운이란 지방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⁶¹⁾

59) 관계부처합동(2023.1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2.10.)(검색일: 2024.7.24.)

61) 관계부처합동(2023.12.), p. 2.

이 사업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초지자체 제외한 7개 도의 기초지자체(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을 맞춘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2024년에는 8개 정부 부처가 통합공모를 통해 18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 후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단, 소규모 지역은 예외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림 3-3〉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12.), p. 2.

이 정책의 특징적인 면은 다부처 협력 모델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각 부처의 전문성을 결집, 생산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다각도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부처 협력 모델은 각 부처의 전문성

과 자원을 결집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특징은 민관협력을 통해 운영방식을 다각화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공급 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연계·협력한 사업자 구성을 통해 업무와 책임을 분담하길 권장하고 있다.

〈그림 3-4〉 지역활력타운 사업유형 예시 및 주거유형 및 연계지원 가능사업 메뉴판

지역활력타운 주거유형 및 연계지원 가능사업 메뉴판													
< 사업유형 예시(복합 형태 가능) > ○ (은퇴자 마을) 지방에서 노후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어우러진 복합타운 조성 -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급과 함께 일주민·지역주민이 융합할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서비스(체육·돌봄 등) 공동이용 ○ (학교실리기) 지역 내 초등학교로 전학을 유치하기 위해 주거 공급, 도서관·교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 지원 - 특화·맞춤형 교육 등 학생유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연계 ○ (청년창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공간, 문화·여가시설 및 주거 등 공급 ○ (일자리연계) 해당지역의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취업하고자 타 지역에서 이주하는 근로자를 위해 인근에 주거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공급	<table border="1"> <tr> <td> 주거 □ 단독주택 (지원) 토지·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공공주택(민간투자) 등 </td><td> 1) 특화주택 (지원) 공공주택(민간투자) 등 </td></tr> <tr> <td> 국비 지원 가능 사업 □ 지방소멸위기지역(행정안전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td><td> 2) 로컬푸드 생산·유통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로컬푸드 생산·유통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로컬푸드 생산·유통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로컬푸드 생산·유통 사업(농림축산식품부) </td></tr> <tr> <td> 3) 지역소멸위기지역(국토교통부) (지원) 지역소멸위기지역(국토교통부) (지원) 지역소멸위기지역(국토교통부) (지원) 지역소멸위기지역(국토교통부) </td><td> 4)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td></tr> <tr> <td> 5) 학교시설 조성 지원(교육부) (지원) 학교시설 조성 지원(교육부) (지원) 학교시설 조성 지원(교육부) (지원) 학교시설 조성 지원(교육부) </td><td> 6) 국민체육센터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민체육센터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민체육센터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민체육센터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td></tr> <tr> <td> 7) 공공안전관리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공공안전관리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공공안전관리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공공안전관리서비스(보건복지부) </td><td>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td></tr> <tr> <td>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td><td> 10)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td></tr> </table>	주거 □ 단독주택 (지원) 토지·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공공주택(민간투자) 등	1) 특화주택 (지원) 공공주택(민간투자) 등	국비 지원 가능 사업 □ 지방소멸위기지역(행정안전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2) 로컬푸드 생산·유통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로컬푸드 생산·유통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로컬푸드 생산·유통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로컬푸드 생산·유통 사업(농림축산식품부)	3) 지역소멸위기지역(국토교통부) (지원) 지역소멸위기지역(국토교통부) (지원) 지역소멸위기지역(국토교통부) (지원) 지역소멸위기지역(국토교통부)	4)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5) 학교시설 조성 지원(교육부) (지원) 학교시설 조성 지원(교육부) (지원) 학교시설 조성 지원(교육부) (지원) 학교시설 조성 지원(교육부)	6) 국민체육센터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민체육센터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민체육센터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민체육센터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7) 공공안전관리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공공안전관리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공공안전관리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공공안전관리서비스(보건복지부)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10)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주거 □ 단독주택 (지원) 토지·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공공주택(민간투자) 등	1) 특화주택 (지원) 공공주택(민간투자) 등												
국비 지원 가능 사업 □ 지방소멸위기지역(행정안전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2) 로컬푸드 생산·유통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로컬푸드 생산·유통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로컬푸드 생산·유통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로컬푸드 생산·유통 사업(농림축산식품부)												
3) 지역소멸위기지역(국토교통부) (지원) 지역소멸위기지역(국토교통부) (지원) 지역소멸위기지역(국토교통부) (지원) 지역소멸위기지역(국토교통부)	4)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5) 학교시설 조성 지원(교육부) (지원) 학교시설 조성 지원(교육부) (지원) 학교시설 조성 지원(교육부) (지원) 학교시설 조성 지원(교육부)	6) 국민체육센터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민체육센터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민체육센터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민체육센터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7) 공공안전관리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공공안전관리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공공안전관리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공공안전관리서비스(보건복지부)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10)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12.), pp. 3-5.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업 규모나 예산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기간, 여건,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신,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금이 탄력적으로 책정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인허가 특례, 사업화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공모지침에는 ‘지역활력타운 주거유형 및 연계지원 가능사업 메뉴판’ 등 사업유형의 예시

를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복합 형태의 사업유형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위 그림 참조).

한편 1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나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등은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2023년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지역활력타운사업은 지역의 자유도가 높은 대신 정책사업에 대한 근거법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표 3-4〉 부처 협업 지역활력타운사업 종합

구분	지역활력타운사업
추진 주체	•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보건부, 해수부, 중소부, 교육부 등 8개 부처 협력
중점사항	•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
근거법	-
추진체계	• 8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유형	-
사업대상	• 7개 도의 기초지자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초지자체 제외)
선정 방식	• 공모
선정 개소	• 18개 사업
재정지원	• 사업면적이나 사업비 규모에 제한 없음 (지역 여건에 따라 예산 산정)
후속조치	-
지원 사업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12.27.)(검색일: 2024.7.24.)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역활력타운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다부처 협력 모델의 선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7개 도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고용, 문화,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은퇴자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외 정책동향 분석

1) 유럽 문화수도

문화도시의 시작은 문화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발견에서 나왔다.⁶²⁾ 즉, 문화와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들의 역할이 단순히 교육적인 것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확장되었다.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의 기능이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화와 경제가 긴밀히 연계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이다. 유럽 문화수도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도시공간과 지역주민의 삶,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전략 중 하나이다.⁶³⁾ 이 프로그램은 1985년 유럽연합(EU)에 의해 도입되어, 유럽공동체설립조약(ECV) 제151조를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유럽문화의 풍요로움과 다양함, 그리고 공통의 특징을 재조명하는 한편 유럽인 상호 간의 심층적인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⁶⁴⁾

〈표 3-5〉 유럽문화수도 개요

구분	내용
근거	유럽공동체설립조약(ECV) 제151조
비전	다양성 속의 통일성
목표	① 유럽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 강조 ② 유럽인이 공유하는 문화적 특징 기념 ③ 유럽 시민의 공통 문화 영역을 통한 소속감 고취 ④ 도시 발전을 위한 문화적 기여 촉진
정책기간	1985년~현재(매년 진행)
정책규모	선정된 도시가 제시한 문화 프로그램을 금액으로 환산·평가한 후 재정 지원

62) 유승호(2014), p. 81.

63) 최일선 외(2023), p. 47.

64) 유승호(2014), p. 83.

구분	내용	
정책 프로그램	유럽적 차원	• 선정도시와 이 외 EU 회원국 간 문화종사자, 예술가, 도시 간의 공동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 유럽에서 문화다양성의 풍부함(Reichtum)을 부각시키는 프로그램 • 유럽 문화의 공통된 시각을 전면에 내세우는 프로그램
	도시와 시민	• 후보도시와 주변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프로그램 • 후보도시의 문화적·사회적 발전을 위해 장기전략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

자료: 최일선 외(2023), p. 48.

이 정책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비전 아래, 선정된 도시들이 유럽적 차원과 도시 및 시민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한다. 유럽문화도시의 선정기준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공동의 유럽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유럽문화의 발전과 사회적 유대를 촉진하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층위와 형태를 충족하고 있는지, 유럽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문화관련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이다.⁶⁵⁾

〈표 3-6〉 유럽문화수도 선정 기준 및 평가 항목

구분	내용	
도시 프로그램 충족요건	유럽차원 (The European Dimension)	• 문화 전 영역에 있어서 관련회원국 도시와 다른 회원국 간의 공동협력을 강화 • 유럽에서 문화 다양성의 풍요로움을 강조 • 유럽문화의 공통점 제시
	도시와 시민 (City and Citizens)	• 도시와 근교에 거주하는 시민의 참여를 촉진 • 해외 거주민의 이익을 가져오며 지속가능한 성격을 함께 가져야 함 • 후보도시의 장기적인 문화적, 사회적 발전의 일부를 구성
사업선정 평가항목	•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를 조직하고 홍보할 능력 • 유럽시민들에게 개최도시의 문화와 역사에 관해 홍보할 능력 • 예술적 혁신을 가능하게 할 특별한 활동과 조직력을 갖출 능력 • 새로운 문화 활동을 창조할 능력	

65) 유승호(2014), p. 83.

구분	내용
	• 젊은 세대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운영 가능성 여부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능력 •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계획을 잘 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운영 가능성 여부

자료: 조광호 외(2016), p. 14.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은 2005년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EU 회원국 간 만장일치로 문화수도를 선정했으나, 이후에는 해당 연도 회원국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선정 과정에는 유럽공동체의 선정심사위원회가 관여하며, 선정 후에는 감시자문위원회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성공은 여러 핵심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두드러진다. 각 도시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독특한 프로젝트들이 개발되었다. 이는 획일화된 접근이 아닌, 각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을 가능케 했다. 둘째, 강력한 지역 파트너십 구축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장기적인 계획하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사전 계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예술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으로써, 프로그램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성을 높였다. 셋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뒷받침했다.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와 목적, 그리고 확실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확정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이는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넷째,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지속적인 영향력을 창출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장기적 이익을 미리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주민 참여 전략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역 주민들이 프로젝트의 일부임을 느끼도록 하고 행사가 지역 공동체의 것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역 내 수용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의 유기적인 결합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이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도시의 장기적 발전과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는 종합적인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중국 전국해양문화발전강요(全国海洋文化发展纲要)

중국이 해양문화 유산 보호와 해양문화산업 육성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국가해양사업발전 '125' 계획>(2013.4. 발표)부터이다. 이후 발표된 <전국해양문화발전강요>(2016)는 해양문화 공공 서비스 개발, 해양문화 산업 발전, 해양문화 유산 보호, 해양문화 보급, 국제 교류 및 협력 촉진, 해양문화 이론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해양문화산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3-7〉 중국 해양문화산업 중점 분야

구분	내용
해양 축제, 컨벤션 및 전시 산업	• '중국해양경제박람회', '샤먼국제해양주간' 등
해양레저문화 산업	• 바다낚시·스쿠버다이빙·서핑·요트 보드·해도 야생존 등 해양스포츠 종목 • 어업관광·레저낚시 등 레저 종목
해양문화관광 산업	• 해양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레저 및 휴가, 스포츠 및 피트니스, 해양 생태학, 해양 과학 대중화, 해양 민속, 섬 문화 관광 등
해양문화 창의와 디자인 산업	• 해양 관련 방송(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예술 파생상품, 미술 공예품 디자인

자료: <全国海洋文化发展纲要>(2016)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동 계획에서는 ‘해양강국 건설’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라는 전략적 목표에 중점을 두고 해양문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문화산업의 핵심 범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① 해양 축제 및 전시 산업 운영 ② 해양레저문화 산업 발전 ③ 해양문화 관광산업 발전 ④ 해양문화 창의·디자인 산업 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해양문화산업의 배치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환발해, 장강 삼각주, 해협 서안, 주강 삼각주, 해남도-베이부만의 5대 해양문화권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3-8>과 같다.

<그림 3-5> 중국의 5대 해양 문화권 위치도



자료: 저자 작성

〈표 3-8〉 중국 해양문화권의 발전 계획

구분	지역	내용
환발해 해양문화권	단둥, 다롄, 잉커우, 판진, 진저우, 후루다오, 친황다오, 당산, 창저우, 천진, 둥잉, 빈저우, 옌타이, 웨이하이, 웨이팡, 칭다오, 르자오 등 환발해 및 황해 일부 연해 도시	• 해양 관광 레저 산업, 해양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 해양 영상 미디어 산업, 해양 소금 문화 및 예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북부 해양 스포츠 레저 벨트와 해양 영상 촬영 기지를 건설
장강 삼각주 해 양문화권	렌원강, 옌청, 난통, 상하이, 자싱, 항저우, 사오싱, 닝보, 저우산, 타이저우, 원저우 등 장강 삼각주 해안 도시	• 디지털 출판, 디지털 비디오, 애니메이션 게임, 다국적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같은 첨단 해양문화 산업, 해양문화 창의 및 디자인 산업, 해양 전시 산업, 해양문화 관광 및 레저 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연안 섬의 보호와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국제 해양문화 산업 투자 및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
해협 서안 해양 문화권	닝더, 푸저우, 푸톈, 취안저우, 샤먼, 장저우 등 지역	• 마조 민속문화 산업, 해양문화 관광 산업, 해양문화 창의 산업 및 축제 전시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킴 • 해상 실크로드 문화교류와 산업개발에 중점을 두고 '천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국제포럼'을 지원
주강 삼각주 해 양문화권	광주, 심천, 혜주, 홍콩, 마카오, 주해, 강문 등 주강 삼각주 연해 도시	• 해양 패션 디자인 산업, 해양 고급 창의 산업, 해양 축제 및 전시 산업, 해양문화관광 및 레저 산업, 요트 및 기타 해양 장비 제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둠
해남도-베이부 완 해양문화권	해남도, 잔장, 베이하이, 친저우, 팡청강 등 임해 도시권	• 해양 휴양 및 양생 산업, 해양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해양문화 섬 관광 산업 및 해양 예술 창의 디자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산업 체인을 확장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양문화 관광 및 레저 브랜드를 구축

자료: 〈全国海洋文化发展纲要〉(2016)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셋째, 해양문화 산업의 신흥 업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상 현실과 같은 현대 첨단 수단을 사용하여 해양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해양 디지털 영상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발전시키며, 이미

지, 텍스트, 영상, 음성, 기타 콘텐츠의 통합을 통해 다층적이고 다양한 첨단 해양문화 체험 제품을 개발한다. 모바일 인터넷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온라인 해양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며 해양문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장한다. '인터넷 +'의 발전 개념을 도입하고 해양문화 산업과 관련 산업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며 해양문화 제품의 영향력과 시장 이익을 향상시킨다.

넷째, 해양문화 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클러스터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건을 갖춘 연해 지역의 성과 도시에서 다수의 특색있는 해양문화 산업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건설하여 지역 해양문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다수의 해양문화 산업벨트와 해양문화 산업 기능지구를 계획하고 형성하여, 시범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해양문화 산업 클러스터 및 핵심 기업, 프로젝트 등은 국가 문화산업 시범 단지, 국가 문화산업 시범 기지, 특성 문화산업 핵심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해양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해양 특색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핵심 문화 기업 및 프로젝트 그룹을 지원한다. 그리고 중화민족 해양 문화 함의를 가진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해외 시장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 중화민족 해양문화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게임, 전자 출판물 및 온라인 출판물과 같은 신흥 디지털 제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시장 수요에 부합한다. 문화 수출의 전체 비율에서 해양문화 상품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인다.

여섯째, 해양문화 소비를 확대하고 시장 질서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국내 해양문화 시장의 요구에 적응하여 해양문화 인기 상품을 육성한다. 그러므로 소비자 시장을 확장하고 대중의 해양문화 소비 수준을 향상시킨다. 해양문화 콘텐츠의 수량, 품질, 유형을 개선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장한다. 국민의 해양문화 소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 및 훈련, 스포츠

및 피트니스, 관광 레저와 같은 해양문화와 밀접하게 통합된 서비스 소비를 확대하고 해양문화 소비환경을 개선한다.

3) 일본 해양문화정책과 문화도시 활성화 정책

일본의 해양문화 정책 기반은 2023년 4월 28일에 발표된 “일본해양기본계획”⁶⁶⁾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계획은 일본의 해양 정책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원 개발, 산업, 문화 등 방향 설정에 있어 주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동 계획에서 직접적으로 해양문화 산업을 언급하거나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본의 해양문화와 관련한 모든 산업 영역은 “해양기본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3부 계획의 추진방안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본 해양문화 정책이 국가와 기관, 그리고 국민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해양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해양문화정책보다는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안을 내놓고 있다. 먼저, 일본 문화청에서 2001년 제정한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7조”는 문화예술창조도시 실현의 기본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화예술진흥기본법〉요강⁶⁷⁾

제7조

1. 정부는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기본적인 방침(이하 기본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기본방침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66) 内閣府(2023), 第4期 海洋基本計画-令和5年4月28日閣議決定(검색일: 2024.7.8.)

3. 문무과학대신은, 문화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기본방침안을 작성해야 한다.(제2조 제3항관계)
4. 문부과학대신은 기본방침이 정해졌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조 4항 관계)
5. 3항 및 4항은 기본 방침의 변경에 대해 준용해야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은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이 가진 창조성을 지역 부흥과 관광을 비롯한 산업 분야 영역에 적극 활용하고, 도시발전과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를 “문화예술창조도시”로 분류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⁶⁸⁾

그리고 창조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를 지원하고, 국내·외에 소재한 창조도시 간의 교류·협력 촉진과 창조도시의 보급·계발 등을 목표로 2013년 “창조도시네트워크일본”을 설립하였다.

“창조도시네트워크일본”은 창조도시에 관한 정보·지식·경험 등의 교환을 실시하거나 실시 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창조도시 네트워크 회의(총회) 개최 등 창조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사업 시행자인 NPO 등의 주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창조도시

67) 第七 基本方針

- 一. 政府は、文化芸術の振興に関する施策の総合的な推進を図るため、文化芸術の振興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以下「基本方針」という。）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第七条第一項関係）
- 二. 基本方針は、文化芸術の振興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に推進するための基本的な事項その他必要な事項について定めるものとする。（第七条第二項関係）
- 三. 文部科学大臣は、文化審議会の意見を聴いて、基本方針の案を作成するものとする。（第七条第三項関係）
- 四. 文部科学大臣は、基本方針が定められ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第七条第四項関係）
- 五. 三及び四は、基本方針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こと。（第七条第五項関係）

68)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검색일: 2024.6.24)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제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창조도시네트워크일본”에서는 기존에 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새롭게 창조도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기본으로 광역자치 단체 및 경제 단체, NPO, 대학·교육기관, 개인 등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해 실적과 탄탄한 재정기반을 갖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단체회의를 구성하고 대표 간사단체의 장이 네트워크의 대표가 2년간 운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설립 초에는 5~7개의 간사단체를 선출한 뒤 사무국을 구성하여 대표 간사 단체인의 산하에 두는 방식을 활용했다. “문화예술국립중기플랜”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가입단체의 수를 약 170개까지 확대하려는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⁶⁹⁾

이처럼 전문적인 “창조도시네트워크일본”의 설립과 맞물려 일본 문화청은 “문화예술창조도시” 사업에 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수집·제공, 연수 실시 등을 꾸준히 시행하며 문화예술창조도시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매년 지원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국가 전체가 문화예술이 가지는 창조성을 기반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⁷⁰⁾

또한 일본 문화청에서는 일찍이 타 국가에 비해 일본의 문화예술 및 문화자원의 GDP가 적음을 인지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국보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보존 수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후쿠야마(福山)에 위치한 즈이류지(瑞龍寺)는 2015년 방문객 247,088명으로 이전에 비해 약 2만 명이 증가하였고, 이즈모오야시로(出雲大社)의 경우 2012년 2,919만 명

69) 최선호(2016), pp. 36-37.

70)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검색일: 2024.6.24)

에서 2013년 3,674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시마네(島根)현에 344억 엔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문화(유산)자원의 보존 및 수리·복원 사업 실시를 통해 관광 효과는 크게 상승하였고,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세토나이(瀬戸内) 국제예술제 및 삿포르(札幌) 국제예술제, 효고(兵庫)현 예술문화센터 개관, 가나자와(金沢) 국제애니메이션예술문화창조사업 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많은 경제효과 및 고용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소결

문화 연계형 도시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식 ② 지역 자생력 강화와 민간 참여 확대 ③ 유연한 사업 구조에 따른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첫째, 정부 정책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보였다. 단순한 주거 공급 또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방발전 측면에서 문화, 복지, 일자리 등 다방면에서의 복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는 단일 분야에만 집중되었던 지난 정책들과는 차별화된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하드웨어만을 지원한 반면, 후속 사업으로 추진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특히 유형2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일자리 마련에까지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한 점이 눈에 띈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활력타운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8개 부처 협업으로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사업대상의 경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항 및 배후지역과 어촌마을 등 마을단위로 지정하는 반면, 문화도시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역활력타운사업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인구 유입 및 정착이 필요한 지방을 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도시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지역활력타운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다.

둘째, 국내 정책사업들은 지역의 자생력 강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2005년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던 다수의 국비사업이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재정 분권화 및 지방자치 강화의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적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점차 민간 참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한 예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재원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3개 사업유형 중 유형1의 경우, 공모사업 추진 시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사업과 연계된 계획서를 제출하길 권장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에서도 지정 전 필수 고려 사항으로 민관협력 재원 조달방식을 제시하면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활력타운사업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업자 구성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최근 정책들은 유연한 사업 구조를 통해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⁷¹⁾ 특히 최근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의 경우, 사업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복합 사업유형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문화도시사업의 5개 유형 중 자유도가 높았던 유형5가 대다수였던 점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활

71) 사업유형을 제시한 사업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문화도시사업이 있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지역규모와 사업비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문화도시사업은 공모 신청을 위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하되, 사업의 특색과 지역규모를 조합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력타운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유형을 제시하지 않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복합 유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메뉴판 형식의 사업 제안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책동향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문화 연계형 도시활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9〉 국내 정책동향 종합

구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문화도시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역활력타운사업
주체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8개 부처 협업
중점 사항	• 어촌 정주여건 개선	• 문화로 도시 활성화	• 문화균형발전 선 도모델 육성	• 정주여건 개선 및 정책 지원
근거법	「어촌·어항법」	「지역문화진흥법」		-
선정 방식	공모 선정	공모 선정 → 예비사업 추진(1년) → 법정 문화도시 지정(본사업 추진)		공모 선정
유형	3개 유형 ① 어촌 경제플랫폼 ② 어촌 생활플랫폼 ③ 어촌 안전인프라	5개 유형 ① 역사전통 중심형 ② 예술 중심형 ③ 문화산업 중심형 ④ 사회문화 중심형 ⑤ 지역자율형	-	-
사업 대상	• 어항 및 배후지역, 어촌마을	• 전국 기초지자체		• 7개도의기초지자체
후속 조치	-	• 각 연도 성과평가 이후 다음 연도 예산 차등 지급 또는 미흡 시 지정취소 검토		-
지원 사업	HW + SW	SW		HW + SW
추진 현황	• 65개소 선정('23) • 35개소 선정 추진 중('24)	• 24곳 지정 완료 • 본사업 추진 중	• 13곳 조성계획 승인('23) • 예비사업 추진 중 ('24)	• 18개 연계사업 추 진 계획('24)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유럽, 중국, 일본의 해양문화정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세 국가 모두 문화와 예술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 중 유럽문화도시 사업의 주요 성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이 사업은 유럽을 하나의 통합된 문화 단위로 인식하며, 다양한 국가에 문화도시를 지정함으로써 문화의 지역적 분산화를 실현했다. 이는 문화도시들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럽 문화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문화정책을 확대하고, 예술가와 학자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유럽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둘째, EU 출범 이전에 유럽인들은 국가 간 결속력 강화와 공동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대규모 연합체 형성에는 공통된 목표, 정신, 그리고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문화도시 프로그램은 각국의 전통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예술인들 간의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장려함으로써, 유럽인들이 지향하는 EU의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했다.

중국의 해양문화 정책은 산업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5대 해양문화권 구축을 통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국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문화산업 육성과 해양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더불어 해양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능력 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접근이 돋보인다.

일본의 경우,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을 통해 문화예술창조도시 실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창조도시네트워크일본을 설립하여 창조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창조도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주도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문화자원의 보존 및 수리·복원 사업을 통해 관광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은 주목할 만하다.

제2절 지역단위 해양문화도시 사업 사례 분석

1. 국내 지역사업 분석

1) 영도 해양문화관광도시

영도는 유·무형의 다양한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과 연계한 도시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도구는 부산항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근대 개항과 한국전쟁 등 역사적 사건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해양문화자원이 형성되었으나,⁷²⁾ 급격한 인구 유입과 도시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근대 조선업의 발달, 한국전쟁, 수리조선업의 호황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회간접자본 부족, 무허가 불량주택 밀집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청년층 감소와 노년층 증가로 인해 영도구의 인구는 점차 역삼각형의 기형적인 구조로 변모하면서,⁷³⁾ 2010년대부터 영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및 정비사업이 시행되었다. 영도의 관광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에는 갯강이에술마을, 흰여울문화마을, 봉산마을, 영도대통전수방프로젝트 등이 있다(<그림 3-6 참조>).⁷⁴⁾

72) 김예림(2024), p. 20.

73) 박봉철 외(2024), p. 42.

74) 김예림·성종상(2023), pp. 121-144.

〈그림 3-6〉 영도의 주요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강강이에솔마을 추진체계



자료: 김예림·성종상(2023), p. 127; 문화예술 플랜비(2023), p. 3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 중 갯강이예술마을은 해양문화를 연계한 연안도시재생을 통해 주민 주도의 관광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는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갯강이예술마을은 영도 대평동을 대상으로 2015년 부산시 예술상상마을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이 다수 진행되면서⁷⁵⁾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명이면서, 이제는 마을 이름이 되었다. 갯강이예술마을사업은 1970년~1980년대 대평동을 수리조선업의 메카로 만든 해양산업을 주요 테마로 하여, 철강 선박의 표면을 망치로 두드리던 ‘갯강이작업’과 이를 수행하던 ‘갯강이아지매’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마을의 역사, 산업, 생활과 관련된 단행본, 수리조선업과 관련된 다수의 영상물과 마을 곳곳에 공공예술작품 등을 제작하였다.

추진 방식은 깡깡이에술마를 사업단이라는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 플랜비, 영도문화원, 대평동마을회 등이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위 그림 참조). 사업추진 과정에

75) 영도 강강이예술마를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시행되었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사업(문체부, 2016),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문체부, 2017), 부산 강강이마를 셰필드 인터시티 아트프로젝트(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문체부, 2018)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영도구청 홈페이지, 검색일: 2024.6.19.;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9, p. 32; 문화예술 플랜비, 2023, p. 48.)

서 주민공동체(대평동마을회) 소유의 토지에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깡깡이생활문화센터 건물을 건립하였고, 1층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다방으로, 2층은 마을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깡깡이예술마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사업을 통해 만든 관광 프로그램 및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부 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까지도 대평동마을회 소속 주민들은 바리스타로 마을다방, 그리고 마을해설사로 활동하면서 매주 주말마다 유료 관광프로그램(깡깡이 해상투어⁷⁶)과 깡깡이마을투어)을 운영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깡깡이생활문화센터 건물의 운영비와 관리비도 대평동마을회가 매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다.⁷⁷⁾

〈그림 3-7〉 깡깡이생활문화센터(마을다방과 마을박물관) 및 깡깡이안내센터(선박체험관)



자료: 김예림(2024), p. 172.

한편 영도는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비전 ‘예술도시 섬, 영도’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5년간 160억 원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⁷⁸⁾ 추진 방식은 2020년 영도문화도시센터라는 전담조직을 설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과와 협력하면서 다양한 문화도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76) 깡깡이 해상투어는 깡깡이안내센터 앞바다에서 승선하며, 승선하는 곳에 있는 선박체험관은 관광객을 위해 예인선을 예술 작품으로 채운 선박체험공간이다.

77) 김예림(2024), p. 89.

78) 부산일보(2019.12.31.) (검색일: 2024.6.18.)

4년간 ① 도시브랜딩 제고, ② 청년문화인 양성, ③ 문화유산 기록(아카이브 영도), ④ 어린이 문화교육 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했고, 그 성과로 영도구는 2024년 최우수 문화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⁷⁹⁾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영도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⁸⁰⁾ 이렇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영도구는 해양문화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해양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2) 목포 문화항구도시

목포는 무역개항 도시로 과거 전국 3대 항이자 8대 도시에 포함되었던 항구도시이다. 그러나 1960년~1970년대 국가 주요산업의 전환과 신도시 개발 등의 큰 변화들로 인해 목포시의 인구와 경제적 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도시쇠퇴가 발생하였다.⁸¹⁾ 다른 축소 및 쇠퇴도시들과 동일하게 특히 주변 신도시(하당신도시, 남악신도시 등)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어 도심의 재활성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목포시는 2010년 중반부터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조성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왔다.

목포시는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콘텐츠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도시재생

79) 국제신문(2024.3.14.)<검색일: 2024.6.18.>

80)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하나로 지정된 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문화·관광시설 확충,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국고보조사업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검색일: 2024.6.18.)

81) 강창우 외(2023), p. 67.

선도지역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꾸준히 참여하였다.⁸²⁾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서는 목원동 일대를 대상으로 조선 인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상권 및 관광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이후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1897 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 두 곳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을 진행하였다. ‘개항문화거리’는 근대 건축자산을 활용해 목포만의 색과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서산동 보리마당’은 주거환경 정비와 바다경관을 이용한 특화공간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였다.⁸³⁾

2022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문화도시조성 사업」의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문화항구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화항구도시는 과거 목포시가 무역 개항을 통해 성장·발전한 것처럼 문화로의 새로운 개항을 통해 도시의 문화 다양성을 확보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를 회복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⁸⁴⁾ 또한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세계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시민 양성과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지역경제의 발전과 글로컬(글로벌+로컬)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다.⁸⁵⁾ 목포시는 근대 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인 배출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문화도시로서 활용도 높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 예술가, 역사자원 등 목포시의 고유한 문화적 자원을 이용한 브랜드 구축을 문화항구도시 구축 전략으로 삼고 있다.

82)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4.7.24)

83)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4.7.24)

84) 목포시(2021),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문화도시 조성계획

85) 목포시(2021),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문화도시 조성계획

〈그림 3-8〉 목포시 문화항구도시 브랜딩 전략

제2의 개항 문화개항의 도시로



자료: 목포시(2021),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항구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을 위해 목포시는 몇 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적용하고 있다. 우선 시민 중심의 도시조성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⁸⁶⁾ 즉, 시민의 문화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문화도시위원회·행정협의체·거버넌스 등 시민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문화항구도시 조성의 주요 추진체제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서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으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독려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시민공모전, 문화다방, 기획단운영, 꿈지락 실험실 등 아이디어 공모·기획부터 실행까지 시민 주도 및 참여형 특성화 사업을 수행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 4대 관광거점사업 등 타 사업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⁸⁷⁾ 문화항구도시라는 슬로건과 제시된 비전에

86) 목포시(2021),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문화도시 조성계획

87) 목포시(2021),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문화도시 조성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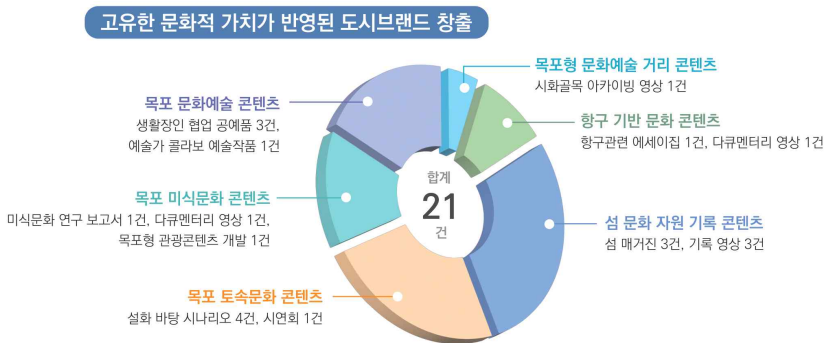
맞춰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 세 번째, 문화항구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목포시 조례 개선 및 행정적 지원이다. 2020년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목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 2023년에는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근거가 마련되었다.⁸⁸⁾ 또한 조례 제정 외에도 2023년 기준 전년도보다 목포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1% 증액되고 ‘목포문화도시센터’가 신설 및 이전되는 등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으로 문화항구도시로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목포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시의 재활성화 및 활력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콘텐츠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이용하고자 했으며, 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목포 시민들과 함께 도시를 꾸려나가는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목포시는 도시의 방향 및 슬로건을 문화항구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항구도시의 개념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연안도시가 가지는 해양 또는 수산과 관련된 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과거 항만이 무역 개항을 통해 번창했던 것처럼 문화 개항을 통해 재도약하겠다는 의미와 항구도시로써의 상징성을 유지하고자 구축한 브랜드이다.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이나 문화도시사업에서 연안·해양 자원을 이용한 세부사업은 ‘서산동 보리마당’ 조성 사업 중 마을환경정비 중 바다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문화항구도시’ 조성 사업 중 항구기반 문화콘텐츠(에세이 1건, 영상 1건), 섬 문화 자원 기록 콘텐츠(매거진 3건, 영상기록 3건) 정도가 직접적인 연안·해양 자원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콘텐츠로 해양문화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문화항구도시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연안도시만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글로벌 도시로

88) 목포시(2023), 2023 목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보고-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표

써 경쟁력 확보와 연안 및 항구도시로서의 특색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문화 자원의 활용과 문화도시조성과의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그림 3-9〉 목포시 문화항구도시 브랜딩을 위한 콘텐츠 제작 현황



자료: 목포시(2023), 목포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보고-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3) 군산 근대역사문화항구도시

과거 제조업 중심 산업·물류·항구도시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군산시는 최근 문화 중심의 문화수출 항구도시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군산시의 변화는 풍부한 근현대 문화자원과 항만·해양자원을 바탕으로 도시의 활성화와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하며, 특히나 곡창지대·물류도시·항만도시 등 일제강점기와 근대화시기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군산은 많은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유산이 남아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⁸⁹⁾

군산시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성장했으나, 중심 산업이었던 자동차업과 조선업의 쇠퇴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소비 위축과 청년인구 유출 등의 위기를 겪었다. 특히 2018년에는 산업위기대응

89) 조선미디어 더나은미래(검색일: 2024.7.28.)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⁹⁰⁾ 이런 배경에서 군산시는 2014년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시작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의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⁹¹⁾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의 개선과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지역의 문화자원을 지속가능한 형태로의 관리·이용을 하고자 노력해왔다. 군산시의 해신동, 신흥동 등의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중심시가지형·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재생의 과정에서 군산시만의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근대문화도시 군산으로 변화를 추구해왔다.

〈표 3-10〉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목록 및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월명동 도시재생선도사업 (근린재생형)	영화동, 월명동 일원 거점개발
산북동 장전·해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적임대주택 공급, 생활환경개선
개·미공동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생활안전인프라 개선, 집수
소규모 재생사업 (영동, 흥남동, 장미동, 월명동)	마을경관개선, 지역축제 등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짜보선창, 구. 수협동부어판장, 한국선급, 폐철도 등 핵심유희부지 거점개발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해산물 융복합 클러스터, 문화파크 조성, 야간경관개선사업 등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생활SOC확충, 어울림센터 조성, 기반시설정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90) SK E&S Mediaroom(검색일: 2024.7.28.)

91) 일요신문(검색일: 2024.7.28.)

사업명	사업내용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인정제도)	건물리모델링, 야외 주차장, 공원 경관개선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도시가스 인입, 집수리 지원, 생활안전인프라 확충, 기반시설 정비 등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도시가스 인입, 집수리 지원, 생활안전인프라 확충, 기반시설 정비 등
삼학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삼학시장 일원 활성화(공유공간리폼, 목로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등)

자료: 군산시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군산시는 ‘근대문화유산’이 모여있는 근대화거리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건물을 복원해 군산의 역사를 교육의 장으로 만든 근대 역사박물관과 구 군산세관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갤러리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장미갤러리 등을 조성하고 있다.⁹²⁾ 또한 항구도시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부잔교와 꾀보선창 등이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⁹³⁾ 부잔교 역시 군산의 많은 자원들과 동일하게 수탈의 역사적 증거 중 하나이다. ‘뜯다리’라고도 불리는데, 바다의 높이에 따라 자연스레 높이가 달라지는 다리로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큰 군산항에서 보다 편하고 빠르게 곡식들을 싣고 옮기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지금도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3기가 보존되어 자리하고 있다. 꾀보선창은 과거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죽성포구’ 또는 꾀보 객주가 일대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꾀보선창’으로 불리게 된 곳으로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어업권 통제를 위해 군산항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어시장·어판장 등 제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오랜 기간 운영되어왔던 곳이다. 매립공사 이후 기능 약화와 노후화로 지역이 방치되었다. 꾀보선창은 소설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문화 작품의 배경이 되었으며,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꾀보선창의 역사적 이야기를 큰 자산

92) 연합뉴스(검색일: 2024.7.28.)

93) SK E&S Mediaroom(검색일: 2024.7.28.)

으로 인식했으며, 꾀보선창 어판장이 있던 공간에 군산항이 개항했던 1899년을 이름에 새기면서 ‘꾀보스토리 1899’를 탄생시켰다. 해당 공간에는 현재 군산시에서 진행한 지자체 특화 사업인 수제맥주 생산 기업들이 자리해 운영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특히나 이러한 항만과 연안에 위치한 근현대문화자원은 군산시청의 해양연안관련 과와 도시재생과의 협업을 통해 조성한 공간이라 그 의미가 크다. 그 외에도 군산시는 조성된 근대 건축물에 대한 소개나 관련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근대역사 AR 투어시스템, AR 및 VR 체험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의 연계 등 스마트 관광 인프라도 조성 중이다.

최근 군산시는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목포시와 동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선정을 위해 법·제도·거버넌스 등을 수립·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비문화도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청 중심의 행정협의체와 대학·기관·단체 등 문화도시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해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⁹⁴⁾ 또한 문체부의 예비문화도시 선정으로 군산시는 1년간 국비지원 없이 이를 추진하고, 평가해 최종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인 군산문화도시 센터에서는 문화도시 군산으로의 발전을 위해 ‘물길로 잇는 시간여행의 관문도시, 군산-전라권 문화 수출항으로서 기능’이라는 슬로건 아래 근대문화거리, 로컬크리에이터, 산업단지, 수변공간, 항구의 자산, 동네문화카페, 섬관광자원, 금강하구와 만경강을 주요 자원으로 제시하고 있다.⁹⁵⁾ 2022년 3월~2023년 8월까지 1년 6개월간 주민 참여를 높이려 문화공유대

94) 전민일보(검색일: 2024.7.28.)

95) 군산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4.7.28.)

학, 동네문화카페, 공감리빙랩, 동네문화추적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⁹⁶⁾

이렇듯 군산시는 목포시와 동일한 항구도시에 해당하나 도시의 문화자원 형태가 근대역사자원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뚜렷한 지역이다. 군산시는 이를 깊게 이해·인지하고 도시재생을 비롯하여 문화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서 역사문화자원을 보전·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도심 곳곳에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2. 국외 지역사업 분석

1) 중국 산둥성 해양문화관광도시

(1) 산둥성 해양문화정책

환발해 해양문화권에 위치한 산둥성 인접 해역의 면적은 158,600km²이며 대륙 해안선의 총 길이는 3,505km에 달한다. 이는 전국의 약 1/6을 차지하는 길이이다. 또한 약 584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도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도시이다. 산둥성은 세계 일류 해양 항구 건설, 완전한 현대 해양 산업 시스템 구축,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 환경 건설을 가속화하고 산둥 해양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둥성 ‘145’ 해양경제발전규획〉을 발표했다. 〈산둥성 ‘145’ 해양경제발전규획〉에는 산둥성의 해양문화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96) 위의 홈페이지

가. 해안관광 벨트 조성

경관 및 관광 시설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해안 경관을 연결하며 관광, 레저, 휴가 요구를 충족하는 일련의 레저 및 휴가 단지를 만든다. 해안도로 관광을 촉진하고 회랑 건설을 가속화하며 해안도로 양쪽의 녹화, 산책로, 야영지, 기타 관광 인프라를 개선한다. 칭다오 평항섬, 평라이, 하이양, 르자오산, 하이텐 등 국가급 관광 휴양지의 차원을 높이고, 룡청운각도(荣成好运角) 휴가지구의 국가급 관광 휴양지 조성을 추진하며, 룡다오 국가 해양 공원을 조성하고, 황허커우 생태 관광의 영향력을 높인다.

나. 해도 생태관광 벨트 조성

'치루아름다운 섬(齐鲁美丽海岛)' 건설을 추진하고 '1섬, 1정책', '1섬, 1상품'을 시행한다. 장도 및 옌타이 군도, 류공도 및 웨이하이 군도, 칭다오 군도, 일조 군도, 빈저우 군도의 5개 군도의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 생태 관광, 레저 및 휴가, 레저 스포츠 및 문화 체험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섬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다. 해양 체험관광 벨트 조성

칭다오 중국 크루즈 관광 개발 실험구를 중심으로 옌타이항, 웨이하이항, 르자오항과 협력하여 모항, 출발항, 기항항의 산둥 크루즈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칭다오의 국가 크루즈 모항 건설을 지원한다. 레크리에이션 어업을 개발 및 확장하고 해양 목장에 의존하며 관광, 낚시, 케이터링, 오락, 쇼핑의 기능을 확장하고 해양 전원 단지를 만든다. 해양 스포츠, 해양 건강 관리, 해양 식품 건강 관리, 캠핑카, 해양 축제 및 기타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전천후 해양 관광의 새로운 형식을 만든다.

라. 해양 특성 문화관광 벨트 조성

라오산, 평라이, 청산터우, 일조 해안 및 기타 문화적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 해양역사 문화, 해양국방 문화, 해양과학기술 문화, 항만문화, 해양문화, 해양민속문화 및 기타 연구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룡청 해양문화 생태 보호 실험구를 국가 문화 생태 보호 실험구로 신청하도록 촉진하고자 한다.

(2) 산둥성 해양문화관광 사업

산둥성의 해양관광을 최상의 궤도에 끌어올리기 위해 산둥성 문화여유청 등 10개 부서는 〈해양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 (2024~2026)〉을 발표했다.

본 계획의 목표는 레저 및 휴가 관광 시스템을 개선하고 황하와 발해 문화 체험 회랑 건설을 통합 추진하며 국내 최장 온대해변 레저 및 휴가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산둥성 연해 7개 도시의 연간 관광객 수는 4억 7천만 명, 관광 수입은 6,700억 위안 초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표 3-11〉 산둥성 고품질 해양관광 촉진 계획

구분	계획	내용
공간 배치 최적화	해안 레저 리조트 벨트 구축	• 칭다오, 르자오 '활력해안' 레저 리조트 구역, 옌타이, 웨이하이 선경산해(仙境山海) 문화 레저 구역, 둥잉, 웨이팡, 빈저우 '허하이 교차' 생태관광 구역 형성
	군도 생태 관광 벨트 육성	• 칭다오 군도, 창다오 군도, 옌타이 군도, 류공 군도, 웨이하이 군도, 르자오 군도, 빈저우 군도의 '5대 도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해상 산둥'의 풍경, '해상 산둥'의 고품질 관광 노선, 중국 군도의 생태관광 모델 육성
	지역 관광 협력 강화	• 주요 해양문화권과의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고 '해상 실크 로드' 브랜드 관광 라인을 통합 • 한일, 유라시아 대륙과 동쪽으로 연결되는 대규모 국제 통로를 건설하고 '일대일로' 연계 국가 및 우호 도시와의 관광 교류를 심화
상품 업태 향상	해양 특색 관광 구역 건설	• 2026년까지 다수의 고품질 해양 관광 지역을 최적화하고 강화하여 15개 이상의 4A급 이상 관광 명소를 추가하고 약

구분	계획	내용
		5개의 성급 관광 리조트 건설
	고품질 관광레저도시 건설	• 옌타이 등의 국가급 관광 레저 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해안 도시를 지도하여 국가 문화 관광 소비 시범 도시를 건설하고 주요 해안 관광 도시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
	군도 특색 관광지 건설	• 영산도, 양마도, 공동도, 계명도, 도화도 등 군도 관광상품 조성
	업태 혁신과 융합	• 크루즈 요트, 해양 스포츠, 해양 목초지, 캠핑, 해양 의료 등 신상품과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을 육성
브랜드 홍보 및 향상	해양관광 특화 브랜드 만들기	• '仙境海岸·蓝色休闲(선경해안 남색여가)' 브랜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 '乐宿山东·滨海假日(평안한 숙박 산둥 해변휴일)'와 같은 해양관광 하위 브랜드의 육성 • '好品山东·海洋礼物(좋은 상품 산둥 해양선물)'을 조성하여 해양관광 쇼핑 패키지 출시
	해양관광 축제 혁신	• 해안 도시에 주요 특색 활동 브랜드를 육성 • 해풍 음악 축제, 해양 기묘한 밤, 황하 하구 조류 관찰 시즌 등 자체 전통축제를 '왕홍 축제'로 혁신적으로 개최 • 천리 해안 관광 회랑을 기반으로 국제 마라톤 대회 및 해안도로 자전거 대회 개최
관광환경 개선	해양관광 숙박 시설 개선	• 산둥성의 '평안한 숙박 산둥(乐宿山东)' 업그레이드 조치에 따라 해안 도시에 국내외 고급 브랜드 체인 호텔 및 리조트 도입 • 해양문화특화테마호텔, 해양특화테마펜션 건설, 10개 이상의 해양관광펜션 클러스터 조성
	온스탑만유 여행	•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일조 및 기타 관광 도로 자원을 연결하여 '천리 해안' 테마 회랑을 조성 • 칭다오 국제 크루즈 모항, 공항, 고속철도역의 직통 연결 촉진 • 근해 해상 관광버스 교통 시스템 구축
	스마트 관광 건설	• 해안에서 선산, 선해, 선도, 선로과 같은 가상현실 체험 프로젝트를 시작 • 애니메이션, e스포츠, 클라우드 관광, 클라우드 전시와 같은 디지털 체험 상품 육성
	시장 주체의 활력 향상	• 주요 해양 관광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26년까지 연안 도시에 30개 이상의 선도 문화관광 기업을 육성하고 50개 이상의 주요 문화관광 프로젝트 실시

자료: 推进海洋旅游高质量发展的实施方案(2024~2026年)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최근 몇 년 동안 산둥성은 해안 벨트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레저 및 휴가 관광 시스템을 개선하여 왔으며 황하와 발해에 걸쳐 문화 체험 회랑 건설계획을 통합함으로써 산둥성의 해양관광 시장을 확장했다. 산둥성 내의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양관광혁신 사업 중 해양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호객산둥' 문화관광시장 브랜드 구축사업과 '무형문화재 카니발' 사업이다.

가. '호객산둥' 문화관광시장 브랜드 구축

레크리에이션 관광소비를 더욱 촉진하고 고품질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산둥성은 '호객산둥' 문화관광시장 선정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난 시(濟南市) 리샤구(历下区)의 '산둥 수제' 문화 창조 시장, 칭다오시 남구 오판 해양문화 관광구 'OH·FUN PARK' 국조 시장, 쑤보시(淄博市) 장톈구 탕구(张店区唐库)문화 창조 시장 등이 첫 번째 문화관광시장으로 선정되었다.⁹⁷⁾

"OH·FUN PARK" 국조시장은 산둥성 칭다오(靑島) 오판(奧帆) 해양문화 관광지구 1번 게이트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약 1,650m²의 면적을 차지하며 올림픽 요트 박물관과 마리나 등이 위치해 있다. 특히 요트를 국가 문화 창작물의 주요 이미지로 설정하였으며, 창의적인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패션 및 레저 분위기,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몰입 체험, 트렌디한 음악 및 예술 전시, 가벼운 식사 및 가벼운 음료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이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OH·FUN PARK' 국조시장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 명을 넘어 칭다오 관광 코스의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었다.

97) 산둥성 문화여유청 홈페이지(검색일: 2024.6.25)

〈그림 3-10〉 OH·FUN PARK 전경



자료: 청도여유그룹(靑島旅遊集團)

나. 무형문화재 카니발

중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도시인 산둥성 룡청(榮成)은 수천 년 동안 거친 바다의 풍랑과 싸우며 생활을 해 온 원주민들이 형성한 특유의 어민 문화를 자랑한다. 현대에 들어서 본연의 어가 문화와 해양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계승시켜 새로운 시대의 문화관광 발전에 문화적 의미와 민속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4월에 해양민속문화의 달 축제 및 어민 전통축제가 성대하게 개막되었다. 1개월 동안 전통민속축제, 민속관광, 무형유산전시, 유산음식 등 대중문화행사와 해양민속문화 학술 교류회 등 학술 행사가 개최되어 전통해양문화를 생활과 관광에 더욱 깊이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⁹⁸⁾

98) 산둥성 문화여유청 홈페이지(검색일: 2024.6.25.)

2008년에 두 번째 국가무형유산보호 목록에 포함된 룡청 어부의 날은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해양민속축제이다. 어민의 날은 북부 해안 어민들의 전통적인 곡우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민들이 바다로 나가는 '장행절'이기도 하다.

〈그림 3-11〉 중국·룡청 해양 민속 문화의 달 및 어민 축제



자료: 룡청문화여유(荣成文旅)

다. 칭다오 서해안 신구 문화관광 프로젝트

산둥성 칭다오 서해안 신구는 문화 관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특히 관광산업의 고도화와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급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였다.

2022년 칭다오 서해안 신구는 '문화, 관광, 서해안의 혜택 있는 삶'을 주제로 문화 및 관광 소비 시즌을 계획하였다. 소비 시즌 발대식, 문화 예술 교육, 가족 독서, 연극 등 200회 이상의 공공복지 및 상업 문화관광 활동을 개최했으며 문화, 관광, 소매, 요식업 및 기타 혜택을 위한 소비 쿠폰이

1,000만 위안 이상 발행되며 총 2억 위안 이상의 소비가 촉진되었다.⁹⁹⁾

2023년 3월, 칭다오 서해안 신구는 세계 최고의 관광 및 휴가 브랜드인 MAHAMAN 그룹과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 총 투자액은 약 70억 위안으로 리조트, 호텔, 낚시전용 부두(漁人码头), 비치 스포츠, 서비스 아파트 등 관광 및 휴양 상품을 공동으로 건설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구의 관광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2단계에서는 세계적인 관광, 휴가, 문화예술, 스포츠 브랜드 운영자와 같은 고품질 자원을 유치하고 서해안 해양문화관광 프로젝트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림 3-12〉 산둥성 칭다오 서해안 신구 금도지안마천륜편구



자료: 칭다오 서해안 신구 문화여유국

99) 산둥성 문화여유청 홈페이지(검색일: 2024.6.25.)

2) 일본 요코하마 문화예술창조도시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을 이끈 문화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또한 단순히 “문화도시”로서의 개념을 넘어 21세기형 도시 모델의 하나로 “창조도시(Creative City)”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요코하마는 “문화예술창조도시”로 새롭게 불리게 되었다. 창조도시란 세계화와 지식 정보 경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21세기에 어울리는 도시 모델의 하나로, 문화예술과 산업경제에 있어 창조성이 풍부한 도시를 의미한다. 산업 공동화와 지역의 쇠퇴로 고민하던 유럽 도시에서 1985년에 시작된 “유럽 문화 수도” 사업 등 예술 문화의 창조성을 살린 도시재생의 시도가 성공을 거둔 이래,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행정, 예술가를 비롯하여 문화 단체, 기업, 대학, 주민 등과의 협력 아래 진행되고 있다.¹⁰⁰⁾

사실상 요코하마는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개항 이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근대 도시에 해당했다. 또한 일본의 거품경제 정점기에 “미나토미라이21”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중공업 도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거품경제의 붕괴와 맞물려, 도심 공동화라 불리는 기업들의 도쿄 본사로의 통합, 도쿄 도심 개발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계속된 침체기를 겪었다. 특히 도심의 기능이 미나토미라이21에만 남고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간나이 지역이 단순 주택지로 전락하고 도시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면서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잃을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장으로 취임한 나카타 시장은 해안 공간과 역사적 건조물 등 요코하마 옛 도심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100) “創造都市 (Creative City) とは、グローバル化と知識情報経済化が急速に進展した21世紀初頭にふさわしい都市のあり方の一つであり、文化芸術と産業経済との創造性に富んだ都市です。産業空洞化と地域の荒廃に悩む欧米の都市では、1985年に始まる「欧州文化首都」事業など「芸術文化の創造性を活かした都市再生の試み」が成功を収めて以来、世界中で多数の都市において行政、芸術家や文化団体、企業、大学、住民などの連携のもとに進められています。” , 創造都市ネットワーク日本(검색일: 2024.6.20.)

활력을 불어넣어 도심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을 통한 “도심부 활성화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의 재생을 중심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1년이 넘는 검토를 통해 “창조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이를 산업과 인재 유치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나카타 시장에게 “문화예술창조도시-창조도시 요코하마의 형성을 위해”라는 제안을 하였다.

검토위원회의 제안을 받은 요코하마시에서는 “문화예술창조도시 요코하마”의 추진을 선언하고, 같은 해 4월 창조환경 실현, 경제 활성화, 매력 있는 지역자원의 활용, 시민 주도의 도시조성이라는 정책목표가 설정된 “창조도시 요코하마(Creative City Yokohama)”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창조도시의 조성이 시작되었다.¹⁰¹⁾

또한 과거 위법적인 풍속업을 행하는 소규모 점포가 250곳이 넘었던 요코하마는 2004년, 가나가와(神奈川)현 경찰의 집중 단속과 지역, 경찰, 행정이 일체화하여 환경 정화를 실시함에 따라 위법 점포들은 폐쇄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소규모 점포들을 정부가 임차를 하여 “예술의 힘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킨다.”라는 지역 재생의 마치즈꾸리¹⁰²⁾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9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치즈꾸리 관련 공로자 표창(내각총리대신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 지역재생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¹⁰³⁾

나아가 문화예술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 중 하나로, 요코하마시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돕는 동시에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101) 최선호(2016), pp. 38-39.

102) 마치즈꾸리(まちづくり)는 일본 고유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생겨난 독특한 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져 왔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도성장기를 거쳐 공공정책에 의해 파괴된 환경문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주민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시민운동으로 성장해 나갔다. (竹内裕二, 2017, p. 66.)

103) ヨコハマ創造都市センター(2014), p. 8.

“창조구역” 형성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이 창조구역 조성의 핵심 사업이 바로 요코하마 창조도시를 대표하는 “BankART 1929”¹⁰⁴⁾이다. 해당 사업의 공모 요강을 보면 사업의 목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시민 또는 NPO의 아이디어, 활동력, 창조성을 살린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구 다이치 은행과 구 후지 은행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¹⁰⁵⁾ 무엇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시의 지원도 있지만, 동시에 운영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향할 수 있도록 BankART 1929 시설을 사용하는 사업 주체에게 일정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BankART 1929는 전시, 콘서트, 임대 등의 코디네이트 사업, 카페, 상점, 학교, 스튜디오 등의 기반 사업 등을 연중무휴로 전개하며 지금까지 공립 문화시설과는 전혀 다른 컨셉의 문화시설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 결과 요코하마 도심부에 문화예술의 새로운 활동거점이 형성되어 문화예술 창조도시 요코하마를 알리게 되었으며,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성공 모델로 향후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가능성을 제공한 점, 창조구역을 형성하고 문화예술의 새로운 마을 만들기로 중심 시가지 활성화에 기여한 점, NPO만의 시설 운영과 경영협력으로 효율적인 시설운동을 실현한 점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¹⁰⁶⁾

104) BankART는 전 은행이었던 건물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한다는 Bank와 ART의 합성어이다. 뒤에 붙은 1929는 당초 운영했던 구 제일은행, 구 후지은행이 준공되었던 해이면서 세계공황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울 때야말로 예술을!” 이라는 염원이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池田 修, 2011, p. 6.)

105) 두 개의 옛 은행 건물을 활용해서 도심부에 위치한 역사적 건축물 전체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도심부의 다른 역사적 건축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시가지인 간나이 지역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横浜市, 2004, pp. 11-12.)

106) 이광국(2013), p. 77.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창조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두 번째 핵심 산업은 “내셔널 아트파크”라 할 수 있다. 포트사이드지구에서 야마시타후토까지의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연계하여 2009년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관광 거점 정비를 실시하고 세계로 향한 요코하마 얼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구역 내 6개 거점지구 중 3곳을 우선 설정하여 정부와 연계 속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폭 넓은 공모, 세계에 자랑할 매력적인 지역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3곳 중 야마시타후토 지구는 국제현대미술전인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를 개최하여 이 지구의 토지이용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야마시타후토 지구는 향후 기존 항만시설을 보존, 활용하여 문화 상업지구로서 토지이용을 전환하는 등 향후 토지이용의 비전까지 검토하고 있다.¹⁰⁷⁾

요코하마의 “창조도시”라는 아이디어를 도입할 당시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가와 지금까지 개별로 상대해 왔던 문화예술진흥과 산업진흥정책(소프트웨어), 마치즈꾸리정책(하드웨어)이 하나의 정책으로 융합되어 매력적인 도심부를 형성시키는 것이었다. “창조도시 요코하마”라는 전체상(像)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 전체를 견인하는 엔진의 역할로 도심의 “문화예술창조활동”을 빼놓을 수 없었다. 그 무렵 입지한 매력적인 요코하마 도심 공간을 무대로, 요코하마형 “특구”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문화예술창조도시” 구축을 구상하였고, 요코하마의 매력을 국내외로 발신하는 역할도 기대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 요코하마의 문화예술창조도시로의 전환은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조구역 형성에서 시작하여 “창조성”과 “예술성”이라는 이미지를 전체 도시로 확대해나간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기말 쇠퇴와 몰락을 겪은 중공업 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최근 젊은

107) 이광국(2013), p. 77.

예술가들의 성지이자, MZ세대가 찾는 인기 관광지로 떠오른 요코하마의 성공은 신진 예술가의 육성과 창조 활동을 최대한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NPO의 기능 강화, 역사 문화의 보존, 지역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는 시의 적극적인 정책과 시민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3)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항만도시재생사업

하펜시티가 위치하는 함부르크는 독일 북부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약 18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함부르크는 유럽의 중요한 경제 및 물류의 중심지로 역사적 건축·구조물과 현대적인 재개발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경관을 갖고 있다. 함부르크에서 진행되는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엘베 강(Elbe river)에 위치한 구 항을 재생/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유럽에서 가장 역사적인 연안도시이자 획기적인 사업으로 꼽힌다.¹⁰⁸⁾ 함부르크는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난 후 중앙 유럽의 경제 및 물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움직였고 해당 과정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진행되었다. 하펜시티는 유럽 최대의 도심 재개발 및 재생 사업 중 하나로, 157헥타르의 항만 유휴지에 면적에 주거, 상업, 문화, 교육, 관광 및 레저가 혼합된 도시구역 조성¹⁰⁹⁾과 높은 수준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⁰⁹⁾

하펜시티의 도시의 물리적 조성 목표를 살펴보면, 우선 도심지역의 40%를 확장하고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비율을 38% 확보할 계획이다(건축 공간 32%, 공공공간 24%, 교통공간 23%, 오픈스페이스 21%). 조성되는 건물의 39%는 업무용으로, 35%는 주거용, 16%는 교육 및 문화·레저 시설로 마지막 10%는 상업시설로 구성된다.¹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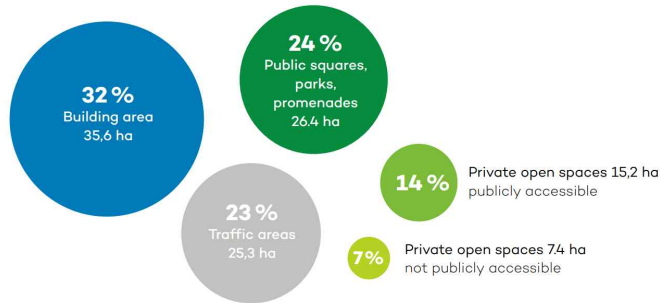
108) FDi intelligence, Hamburg's HafenCity plan finally comes to fruition(검색일: 2024.7.28.)

109) 위의 홈페이지

110) Hamburg, HafenCity 홈페이지(검색일: 2024.7.28.)

〈그림 3-13〉 하펜시티 토지이용 분포현황

Distribution of land areas
(less Oberhafen neighborhood and DB tracks in HafenCity)



자료: Hafencity, HafenCity 홈페이지(검색일: 2024.7.28.)

부둣가를 따라서 10.5km의 산책로를, 엘베강을 따라서는 3.1km의 제방을 조성하고, 16,000명을 위한 약 8,000개의 아파트 조성을 기본으로 담고 있다. 프로젝트에는 약 100억 유로의 민간투자자와 30억 유로의 공공투자가 함께 이루어진 프로젝트로, 92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50개 프로젝트가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다.¹¹¹⁾ 최종적으로 하펜시티에는 2030년까지 최대 12,000명의 주민과 4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¹¹²⁾

하펜시티의 재생 사업은 장기간(30년 이상)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과 대규모의 도시공간 범위를 대상으로 큰 규모의 자산이 투자된 것 외에도 주목할 점들이 있다. 첫 번째로 다목적 도시구역 조성이다. 공간 및 자산규모가 큰 지역으로 앞서 전술한 것과 같이 주거, 상업, 문화, 교육, 관광 및 레저 등의 시설과 기능이 혼합된 구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 및 방향성에 맞춰 세부 프로젝트들이 배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111) Hamburg, HafenCity 홈페이지(검색일: 2024.7.28.)

112) FDi intelligence, Hamburg's HafenCity plan finally comes to fruition(검색일: 2024.7.28.)

두 번째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다. 함부르크에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건설된 스파이셔슈타트(Speicherstadt)라는 세계 최대의 해상 창고 단지가 있으며, 함부르크의 국제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엘베강 및 지류와 운하로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 산업화 시대 항만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¹¹³⁾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모여 있으며, 과거 유럽의 고딕양식 및 아치형 창문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다.¹¹⁴⁾ 또한 하펜시티에서는 스파이셔슈타트를 헐거나 다른 건축물로 대체하지 않고 해양박물관, 갤러리, 카페 및 상점 등으로 외관을 유지한 채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 이벤트와 전시회 등이 자주 열리기도 하는 등 현대적인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한다.¹¹⁵⁾ 하펜시티 재생 및 재개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스파이셔슈타트 지역은 역사적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용도로 재개발되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랜드마크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스파이셔슈타트 외에도 하펜시티에는 랜드마크이자 씨마크(Sea mark)역할을 하는 엘필하모니가 있다. 엘필하모니는 현대적인 콘서트 홀로 기존의 카이저카이(Kaispeicher A) 창고 위에 세워졌다. 1960년대 지어진 산업용 창고로, 엘필하모니는 이 창고를 재사용해 현대 건축물로 조성하였으며, 창고 위에는 유리를 이용해 화려하고 독특한 외관을 구축하였다.¹¹⁶⁾ 해상에 위치한 역사 및 현대를 모두 포함하는 건축물로 2017년 개장 이후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사회 및 문화시설, 상업시설, 주거 옵션을 제공해 지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하펜시티는 공개 입찰을 통해 다

113) UNESCO, Speicherstadt and Kontorhaus District with Chilehaus(검색일: 2024.7.28.)

114) LEE KUAN YEW WORLD CITY PRIZE(검색일: 2024.7.28.)

115) 위의 홈페이지

116) 위의 홈페이지

양한 개발자와 건축가를 고용했으며,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가격 옵션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제공, 공동주택 제공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¹¹⁷⁾ 저렴한 주택의 일부(약 20%)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되며, 그룹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개인 소유 주택의 가격은 제곱미터당 약 3,500유로에서부터 최대 1만 유로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계층 간의 혼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¹¹⁸⁾ 주택을 외에도 하펜시티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과 문화시설 마련에 힘을 쓰고 있다. 공원과 녹지를 바다 인접지역과 도시 곳곳에 설치해 주민들이 여가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해양박물관이나 자동차 박물관, 콘서트홀, 문서센터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교육에서도 현재 대학부터 어린이 집까지 15개의 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7개 정도가 더 확보될 예정이다.¹¹⁹⁾

네 번째로 하펜시티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에는 에너지와 건축기술, 지속가능한 교통 및 친환경적 도시계획이 포함된다. 하펜시티는 지열에너지 및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합해 사용하고자 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설계 기법을 적용하고 모니터링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을 위해 전기버스 등과 같은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전거 및 보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고 있다. 하펜시티는 친환경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 전체 면적의 약 38%를 녹지 및 공원으로 조성해 생태적 균형을 확보하고 열섬현상 저감 등 기후위험에 대응하고자 한다.

117) Newcities(검색일: 2024.7.28.)

118) Hamburg, HafenCity 홈페이지(검색일: 2024.7.28.)

119) 위의 홈페이지

함부르크 하펜시티의 재생 및 재개발은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설정한 도시재생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방향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다.

〈그림 3-14〉 하펜시티 및 엘필하모니 전경



자료: LEE KUAN YWE WORLD CITY PRIZE- HafenCity development

3. 소결

국내 지역사업 분석 결과, 해양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들이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도의 강강이예술마을은 수리조선업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관광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는 '문화항구도시'라는 브랜드를 통해 도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재생 전

락을 펼치고 있다. 군산의 경우 근대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항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지역의 고유한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 및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사업이 단순한 물리적 재생을 넘어 주민 참여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도의 깡깡이에술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목포와 군산에서도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해양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이 단순한 관광지 조성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해양문화자원의 활용이 피상적이거나 표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당 지역의 깊이 있는 해양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사업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 조성 사업 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해양문화를 활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 전략 수립까지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중국 산둥성, 일본 요코하마, 독일 함부르크의 해양문화 관련 도시 재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은 고유의 해양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둥성은 해안관광 벨트, 해도생태관광 벨트, 해양 체험관광 벨트, 해양 특성 문화관광 벨트 등 다양한 벨트를 조성하여 종합적인 해양문화관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는 "창조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and 예술가 지원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전환하였다. 함부르크의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 항만 지역을 다목적 도시 구역으로 재생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해양문화자원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의 균형,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특히 함부르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요코하마의 사례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이미지 혁신과 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양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이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도시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절 종합분석

본 장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성공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 사례에서는 해양문화자원의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국외 사례에서는 해양문화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공적인 모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도시 활성화를 통해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동시에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조적 공간의 조성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

이를 통해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유럽, 중국,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문화자원의 활용은 단순한 관광 상품화를 넘어 도시의 정체성 강화와 경제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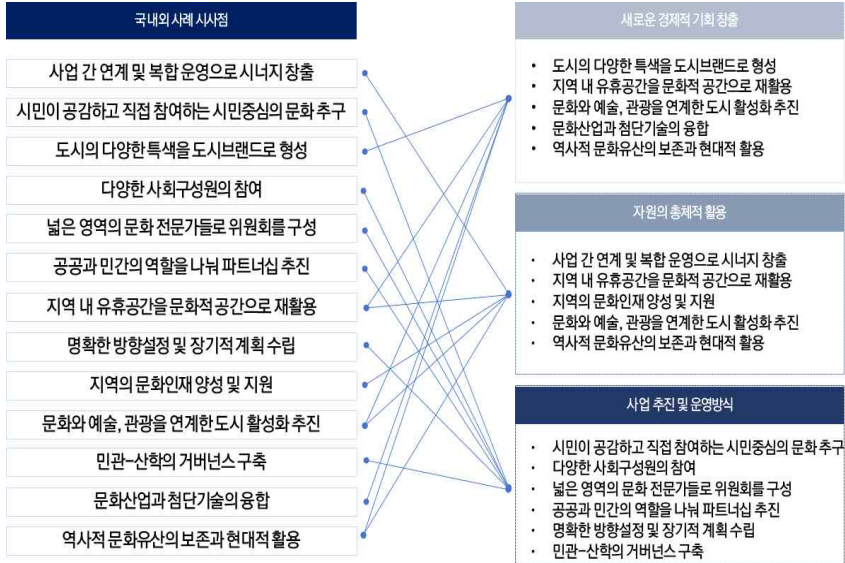
창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함부르크 하펜시티의 사례는 역사적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의 균형을 통해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요코하마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사례는 해양문화와 예술의 융합을 통한 도시 이미지 혁신과 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해양문화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국 산둥성의 사례 또한 해양문화관광 벨트 조성을 통한 종합적인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이는 자원의 총체적 활용을 의미한다.

셋째, 국내 사례인 영도, 목포, 군산의 분석 결과는 해양문화자원의 활용이 아직 표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해양문화도시 사업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해양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도시 조성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해양문화도시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양의 특성을 도시의 모든 측면에 융합시키는 혁신적 접근, 해양문화유산의 현대적 재해석, 첨단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등은 분석된 사례들의 성공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3-15〉 국내외 문화 연계형 사업 종합분석



자료: 저자 작성

04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활력 증진 방안

제1절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활력사업의 개념 및 특성 —

1. 해양문화도시의 개념과 핵심가치

해양문화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선행단계로서 문화도시와 도시활력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¹²⁰⁾ 즉, 문화도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¹²¹⁾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적 가치자산을 탐색하여 도시의 시설, 공간, 생활 속에 총체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의 사회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살기 좋은 도시의 중요한 조건으로 많은 도시계획가들이 강조하는 개념이 있다. 도시활력(urban vitality)이다.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20)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검색일: 2024.7.26.)

121) 조광호 외(2016), p. 87.

는 도시활력의 개념을 도시의 친밀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계획적인 원칙과 실행이 도시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높이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¹²²⁾ 또한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것은 질서 정연한 건축물이나 도로가 아니라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람들의 행위와 관계로 인식하였다.¹²³⁾ Lynch(1981)는 도시활력을 “good city form”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거주지의 형태(도시공간특성, 물리적 환경)가 인간의 필수 기능, 생물학적 필요성, 능력을 지지하는 정도로 정의한 바 있다.¹²⁴⁾ 또한 Montgomery(1995)는 도시활력을 인간의 활동(human activities)을 중심으로 보행자의 흐름, 지속적인 문화 이벤트 및 거리 활동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¹²⁵⁾ 도시활력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을 해석하는 관점과 요인에 따라 개념은 다르게 접근된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도시활력의 특징은 도시민들의 활동과 복잡거림이 한 공간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어나는가이다.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는 지역주민이 지역에 살게 하는 자부심이자 사람들을 지역으로 모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해 왔다. 경상남도는 풍부한 유산자원과 인프라 자원, 공동체 자원을 바탕으로 체험중심의 해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도시로 발전해 왔고, 전라남도는 서남해안 지역(신안, 완도, 진도)의 해양문화유산자원과 어업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섬문화 브랜딩 전략을 추진해 왔다.

“지역의 특화 문화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이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는 전 세계 문화도시 사업의 근본이 되는 주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문화도시 공간을 바다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유기체적

122) Jacobs(1961), p. 3.

123) Jacobs(1961), p. 3.

124) Lynch(1981), p. 20.

125) Montgomery(1995), pp. 101-110.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하나의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해양문화도시에 내재된 다양하고 창조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적 창작과 생산, 소비,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내적 성장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문화도시에서 바다는 단순한 배경이 아닌, 시민의 사색과 즐거움, 일상적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도시는 인류의 문화적, 사회적 활력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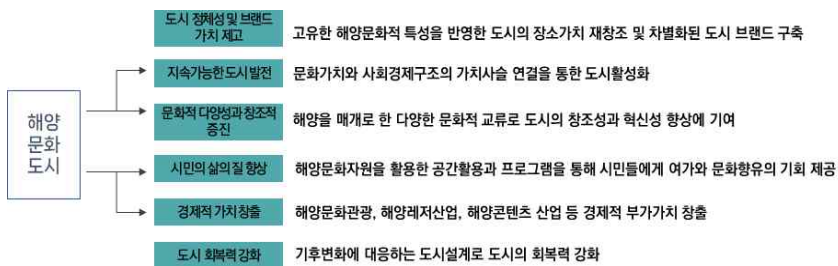
해양문화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더 나은 해양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벤쿠버 그랜빌아일랜드, 함부르크 하펜시티, 일본 요코하마, 영국 런던 도크랜드 모두 역사적인 해양문화재를 랜드마크화하여 글로벌 해양문화도시로 발전시킨 도시이다. 이들은 수변공간과 해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양도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이를 도시 고유의 브랜드로 발전시켜왔다. 해양경관과 유산자원, 인프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들은 해양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적 교류와 창조적 활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변화되어 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74개 연안 시군구 기준으로 평균 27.8개의 해양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표 해양도시는 아직 명확히 부각되지 않는다. 이는 해양문화자원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인식 부족,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활용 전략의 미비, 그리고 통합적인 도시계획의 부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디자인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해양문화도시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로 도시 정체성 및 브랜드 가치제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적 증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가치 창출, 도시 회복력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해양문화도시만의 차별화된 가치로서 바다가 지닌 시간성과 공간성을 활용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 지역성과 세계성의 융합, 해양자원의 보존과 활용의 균형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문화도시는 단순한 연안도시를 넘어 해양이 제공하는 문화적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문화적 실험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역동적 도시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림 4-1〉 해양문화도시의 핵심 가치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유형과 특성

1)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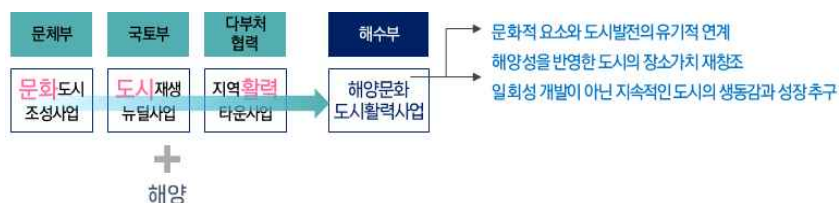
해양문화도시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해양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지부는 국민생활복지증진사업, 그리고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지역활력타운사업 등이 추진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을 도입하였다.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앞서 논의한 해양문화도시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사업을 의미한다. 해양문화와 도시활력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문화와 도시활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결합하여 문화적 요소와 도시발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둘째, 기존의 일반적인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과는 달리 해양문화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활력’이라는 용어를 통해 일회성 개발이 아닌 지속적인 도시의 생동감과 성장을 추구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해양문화 및 해양문화도시의 개념과 세계주요 해양도시의 성공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양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림 4-2〉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유형

다음으로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구체적인 유형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① 어촌경제플랫폼 조성,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③ 어촌 안전인프라 등 3개의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문체부의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이 신청하는 문화브랜드의 유형에 따라 ① 역사전통 중심형, ② 예술 중심형, ③ 문화산업 중심형, ④ 사회문화 중심형, ⑤ 지역자율형 등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실제 공모과정에서는 대부분이 지역자율형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은 사업유형을 구분하지 않는 대신 필수사업 내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은 사업유형의 구분 없이 18개 부처별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 메뉴판과 사업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연안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문화자원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체계를 토대로 유사한 요인들을 그룹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 표본적합도(MSA)가 0.814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x^2=445,565$, $p=0.000$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크게 3개의 주요 요인으로 구조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제1요인은 국가중요어업유산(0.835), 등대시설(0.774), 전시/관람시설(0.615), 해양 무형유산(0.537) 등이 높은 적재량을 보였다. 이 요인은 전통적인 해양문화유산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양문화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대표하는 요소들이 하나의 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요인은 유네스코 등재유산(0.770), 전망대 및 조망시설(0.692), 해양

유형유산(0.559), 해양축제(0.543) 등이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및 문화체험과 연관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3요인에는 교육/해양연구시설(0.751), 스포츠/레저/해양관광시설(0.715), 어시장/수산물시장(0.631) 등이 높은 적재량을 나타냈다. 이 요인은 해양 관련 교육, 연구, 산업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양산업기반' 요인으로 해석된다. 이는 해양문화자원이 교육과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 해양문화자원 분류 체계의 요인분석 결과

항목	공동성	요인		
		1	2	3
국가중요어업유산	0.617	0.835	-0.053	-0.010
등대시설	0.583	0.774	0.092	0.072
전시/관람시설	0.701	0.615	0.324	0.383
해상·해안보호구역	0.689	0.612	0.603	-0.045
해양 자연자원	0.523	0.568	0.492	0.283
해양 무형유산	0.601	0.537	0.437	0.281
유네스코 등재유산	0.560	-0.070	0.770	-0.258
전망대 및 조망시설 등 경승지	0.709	0.258	0.692	0.344
해양 유형유산	0.635	0.378	0.559	0.330
해양축제	0.648	-0.060	0.543	0.510
교육시설/해양연구시설	0.791	0.029	0.008	0.751
스포츠/레저/해상교통 시설	0.668	0.424	0.268	0.715
어시장/수산물시장	0.411	0.046	-0.020	0.631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0.81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 x^2	445.565		
	자유도(df)	105		
	p	.000***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위에서 논의한 유사정책의 유형분석 결과와 해양문화자원의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물론 공모사업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사업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단점도 있으나, 새롭게 시작하는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경우 사업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을 위해 사업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유형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될 경우 지자체의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큰 틀에서의 유형구분을 제시하되 각 유형 내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업의 유형구분은 요인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해양문화자원의 활용으로 창출되는 가치와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해양문화 공동체 활력형(Ocean Culture Community Vitalization)이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고유한 해양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연안지역이 오랜시간 보유하고 있는 해양문화유산자원, 국가중요어업유산, 전통생활양식 등 문화자원의 원형적 가치의 보존 및 활용을 지향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문화자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해양문화유산 에코뮤지엄 조성, 국가중요어업유산과 연계한 문화체험 발굴, 세대 간 해양문화 전승 프로그램 운영, 해양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해양문화 상품 개발 및 브랜딩, 공동체 조직의 해양문화 활동 지원 등이 해당된다. 본 사업 유형의 경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위케이션 및 어촌관광사업, 생애주기별 해양교육사업 등과 연계해 볼 수 있다.

둘째, 해양문화 랜드마크 재생형(Ocean Culture Landmark Regeneration)이다. 지역에서 보유한 항만, 어항, 창고, 조선소 등 해양관련 유휴시설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해양시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해양건축물의 역사성과 특

성을 살린 리노베이션 사업, 워터프론트를 활용한 해양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근대창고를 개조한 현대미술관 및 공연장 건립 사업, 해양산책로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항만 크레인을 활용한 전망대 및 체험시설 설치 사업 등이 해당된다. 본 사업 유형의 경우 어촌뉴딜 300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 볼 수 있다.

셋째, 해양문화 혁신 성장형(Ocean Culture Innovation Growth)이다. 해양문화와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 유형이다. 이 유형은 해양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다각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부가가치 해양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해양문화 기반 첨단기술 산업 육성, 해양분야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해양 MICE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 신산업 육성, 친환경 스마트 요트 개발 및 실증단지 조성, 해양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기획자 양성 등이 해당된다. 본 사업 유형은 해양수산 R&D 사업,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 볼 수 있다.

〈표 4-2〉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유형	개념	주요내용	예시	연계 가능사업
해양문화 공동체 활력형 (Ocean Culture Community Vitalization)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고유한 해양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유형	연안지역이 오랜 시간 보유하고 있는 해양문화유산 자원, 국가중요 어업유산, 전통 생활양식 등 문화 자원의 원형적 가치의 보존 및 활용을 지향	• 해양문화자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위케이션 및 어촌관광 사업, 생애주기별 해양교육사업 등
			• 해양문화유산 에코 뮤지엄 조성	
			• 국가중요어업유산과 연계한 문화체험	
			• 세대 간 해양문화 전승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산물 개발 및 브랜드화	

유형	개념	주요내용	예시	연계 가능사업
			• 공동체 조직의 해양 문화 활동 지원	
해양문화 랜드마크 재생형 (Ocean Culture Landmark Regeneration)	지역의 공공시설 및 유희시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해양문화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랜드마크 조성	지역에서 보유한 항만, 어항, 창고, 조선소 등 해양관련 유희시설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해양시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	• 기존 해양건축물의 역사성과 특성을 살린 리노베이션 사업 • 워터프론트를 활용한 해양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 근대창고를 개조한 현대미술관 및 공연장 건립 사업 • 해양산책로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 항만 크레인을 활용한 전망대 및 체험시설 설치 사업	여촌뉴딜 300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등
해양문화 혁신 성장형 (Ocean Culture Innovation Growth)	해양문화와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유형	해양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다각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지향	• 해양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 해양문화 기반 첨단 기술 산업 육성 • 해양 MICE 산업 클러스터 조성 • 해양치유 신산업 육성 • 친환경 스마트 요트 개발 및 실증단지 조성 • 해양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획자, 비즈니스 전문 인력 양성	해양수산 R&D 사업,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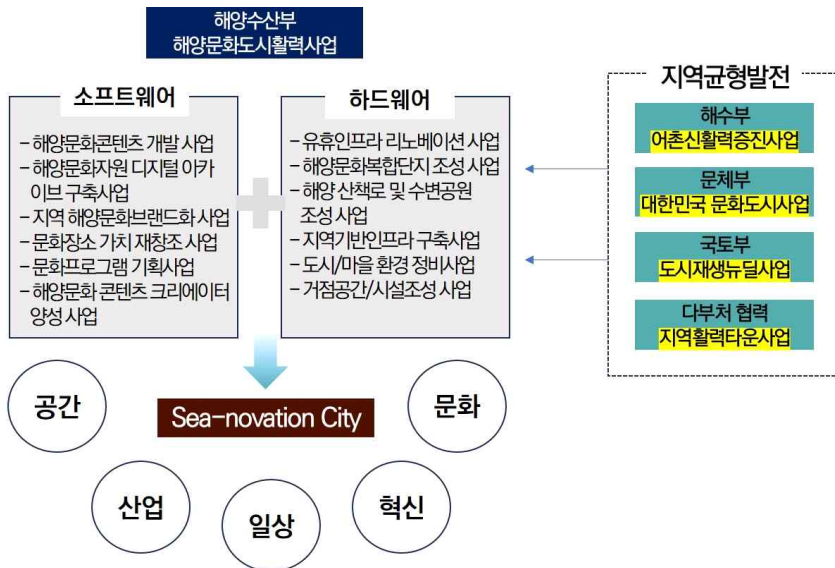
1.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기본방향

연안과 어촌지역은 꾸준한 인구감소로 인프라, 생활서비스, 산업 등이 후퇴하는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되었다. 연안도시가 보유한 해양문화자원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지역의 장소적 가치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해양문화적 정체성을 찾아내고 기존 시설과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사업의 비전을 “Sea-novation City: 해양성이 스며드는 혁신과 문화의 융합도시”로 설정하였다. 이 비전은 해양의 특성을 도시의 모든 측면에 융합시키는 혁신적인 접근을 나타낸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해양적 요소가 도시설계와 건축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바다와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을 창출한다. 이는 단순한 미관상의 개선을 넘어 도시 공간이 해양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측면에서는 해양문화와 레저활동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주민들은 일상에서 해양의 가치를 체감하며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해양자원과 환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시차원에서 실

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에서는 해양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해양문화콘텐츠를 창조하여 문화적 매력이 넘치는 도시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도시는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 및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Sea-novation City”는 해양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과 문화의 융합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그림 4-3〉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기본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추진과제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각 연안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원 및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의 총체적인 문화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해양문화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도시의 경제적 구조를 혁신하고 해양도시만의 고유한 특색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안한다.

1) 기존 정책 및 사업 차별화 방안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기존의 문화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활력타운 사업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연안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해양문화자원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별화의 핵심은 해양문화자원의 광의적 해석과 활용에서 시작된다. 기존 사업들이 문화자원을 주로 도시의 정체성 확보와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이를 확장하여 연안도시가 직면한 복합적 과제들, 즉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연안재해, 지속가능성, 인구소멸 등을 해결하는 광범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블루 이코노미와의 연계 강화로 이어진다.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단순한 문화 진흥을 넘어, 해양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인 블루 이코노미와 긴밀히 연계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제·사회체제를 뜻한다.¹²⁶⁾ 기존의 문화도시 정책에서 생태계 보호, 기후변화 대응, 산업의

126) ESG이코노미(검색일: 2024.9.16.)

지속가능성 등의 화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해양문화산업, 해양생태관광,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건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몇 가지 예시로는 전통적인 어업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전통 어업 지식과 현대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해양문화와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해상풍력, 조류발전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해양문화적 특색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문화적 가치를 함께 창출한다. 전통적인 해양관광을 넘어 해양문화유산과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모델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해양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에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와 관광수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식량 생산 시스템과 지역의 음식문화와 연계 가능하다. 전통 해산물 요리의 현대화, 해양 식물성 단백질 개발 등을 통해 식량 안보 강화와 문화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블루이코노미의 핵심 가치인 해양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지역 사회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해양 환경의 보존과 지역 문화의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연안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연안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재해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수립한다. 이는 전통적인 해안 마을 구조를 활용한 자연재해 완충 지대 조성이나 해양문화 교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도시의 경제적 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 또한 이 사업의 중요한 특징이다. '도시활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자원의 활용 밀도를 높이고 다양한 섹터 간 교류와 관계성을 강화하여 도시의 경제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편한다. 이는 해양문화 기반의 창업 생태계 조성, 해양문화 관련 신산업 육성, 해양문화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도시 발전 비전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도시계획, 경제 발전, 환경 보존, 문화 진흥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기존 정책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안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연안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4〉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차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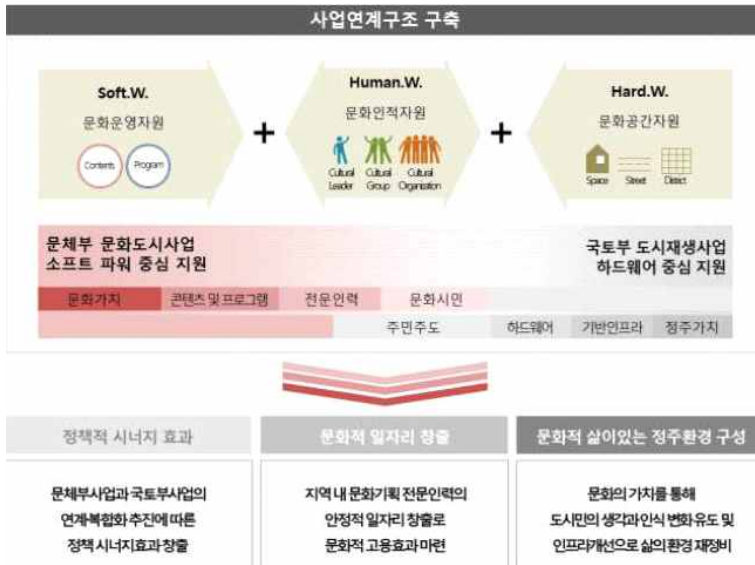
주관부처	문화재생 (문체부)	도시재생 (국토교통부)	연안재생 (해양수산부)
추진방향	문화계획 (Culture Planning)	도시계획 (Urban Planning)	해양문화도시계획 (Marine Culture City Planning)
추진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핵심가치	문화적 정체성과 창조성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해양성 기반의 도시 혁신과 발전
추진초점	소프트웨어 중심 (휴먼+콘텐츠+프로그래밍 중심)	하드웨어 중심 (휴먼+인프라 중심)	블루이코노미 중심 (해양산업과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경제모델 구축)

자료: 저자 작성

2) 사업간 연계 및 효과 극대화 방안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차별성 확보와 함께 타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연계를 넘어, 해양수산부의 고유한 정체성과 정책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타부처 정책 및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도시사업과 지역활력타운사업의 경우 사업 공모 시 연계 가능한 부처별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연계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문화도시사업의 경우 문화인력 및 콘텐츠 활성화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과 토지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 사업 지원을 상호 연계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효과적 연계·복합을 통해 정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활성화를 달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림 4-5〉 문화도시와 도시재생뉴딜의 사업 연계 구조 주요 내용



자료: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2021), p. 48.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사업,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태권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연안, 어촌, 도시,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이러한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도 해양문화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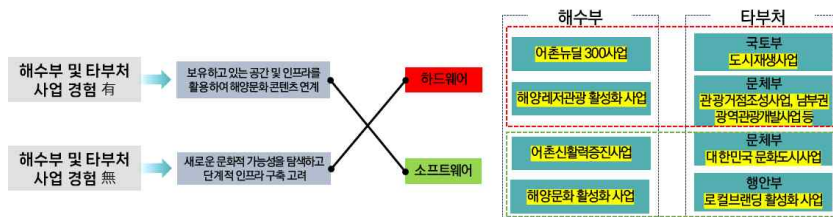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연안도시가 보유한 문화자원 현황과 기존 사업 추진 이력을 고려하여 부처 내·외 사업을 연계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사업을 통해 이미 공간과 인프라 등 하드웨어가 조성되어 있는 도시들이다. 이러한 도시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면서 해양문화적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내 정책사업과 연계 방안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개선된 인프라에 해양문화 콘텐츠를 접목하여 해양문화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타부처 정책사업인 문화도시사업, 지역활력타운사업, 행정안전부의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조성된 도시 공간에 해양문화 콘텐츠를 연결시킴으로써 연안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사업 추진의 부재로 재개발된 공간이나 하드웨어는 부족하지만 풍부한 해양문화자원과 콘텐츠가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과 함께 단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연계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레저관광활성화사업,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인 공간 정비와 함께 도시의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탐색하여 사업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내 사업 간 연결이 해양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질과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전개된다면, 타부처

사업 연결은 각 분야별 기반 여건 및 기초 인프라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연안도시가 가진 정체성을 극대화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개별 부처의 사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도시 발전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정책 정체성을 강화하면서도 타부처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연안도시의 균형 발전과 해양문화 강국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6〉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에서의 정책사업 간 연계 방안 모델



자료: 저자 작성

3) 해양문화 가치 자산의 총체적 활용 방안

우리나라의 연안도시들은 독특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각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적 가치 자산을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인적 자원 및 공간 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도시가 보유한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자원 목록화를 넘어 도시의 문화적 DNA를 해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양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 '자원',

'공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도시의 근본적 가치 체계와 문화적 정체성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문화자원의 네트워크화 및 연계 활용은 개별 도시의 자원을 넘어 광역적이고 통합적인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자원의 연계 활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해양문화회랑(Cultural Corridor)조성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연안도시들의 해양문화자원을 연결하는 테마별 문화회랑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남해안 해양문화유산 벨트', '서해안 갯벌 생태문화 벨트', '해양치유 벨트', '해양명상 벨트', 그리고 이순신을 테마로 하는 벨트 등을 조성하여 개별 도시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해양문화자원과 타산업 분야를 연계한 융합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해양문화와 의료-웰니스 산업을 연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해양문화와 IT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해양문화 체험 플랫폼 구축 등이 가능하다. 셋째, 도시 내 다양한 해양문화자원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는 해양박물관, 전통어시장, 해양레저시설, 해양생태공원, 해양관련 연구기관 등을 하나의 구역에 집적시키거나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문화마일(Marine Cultural Mile)'과 같은 개념으로 도시 내 주요 해양문화 자원을 보행자 중심의 문화거리로 연결하여 통합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관광 코스 제공이 아니라 도시의 해양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해양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도시 발전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국내 연안도시들 간의 연계를 넘어 인접국가인 해양도시들과의 문화적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중-일 해양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나 동아시아 해양 실�크로드 문화유산 네트워크 등의 구축을 통해 국제적 차원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형 접근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연계를 넘어,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융합,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통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단순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아닌,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회-경제-문화 통합 발전 모델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05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및 요약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Every city is unique).’ 이는 전 세계 문화와 도시재생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우리나라도 2004년 참여정부 이래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지속해 왔으며, 현 정부의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국정과제에 따라 향후 3년간 2,6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정부가 추진한 문화도시, 도시재생 사업의 구조적 한계점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 공모 방식의 대상지 선정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과도한 경쟁 유발과 외부 용역 의존도 증가로 인한 계획의 획일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는 문화도시 사업의 본질인 도시별 고유성 확보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안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해양문화 가치 자산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을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많은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현실에서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도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사업 방식을 넘어서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예산을 주면서 평가를 통해 서열화하는 패턴을 벗어나 지방자치의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사업 설계를 추진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연안도시가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위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성공 비결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은 단기적인 도시 활성화를 넘어 도시의 해양적 DNA를 재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이다. 이러한 전략들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등 세부 실행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후속 절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제2절 정책제언

1. 법·제도 개선

연안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문화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요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수부 소관의 「어촌·어항법」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어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증대시키는 데 기

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과 이전 문화도시 사업은 문체부의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표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은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의 별도 장을 마련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문화도시의 지정 및 취소, 문화도시 지원,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에 근거하여 문화도시를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및 기타 등의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으며, 문화도시 조성계획서 작성과 구체적인 계획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문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 해양문화와 관련해서도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교육문화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법은 해양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해양문화와 관련된 지원사항은 제한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양교육문화법」은 총 2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 해양문화와 관련된 조문은 3개에 불과하며 해양문화 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 발전을 지원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문화 자원의 체계적 활용과 이를 통한 연안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하여 해양문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표 5-1〉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법안 비교·분석

법률	해양교육문화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해수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문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해양교육문화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해수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문체부)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 관련 사항	연안도시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은 없으며, 해양문화와 관련해서는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번역·출판·정보화 등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실질적인 해양문화 관련 정부 지원 정책 사업은 제한적임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 ⑧ 생략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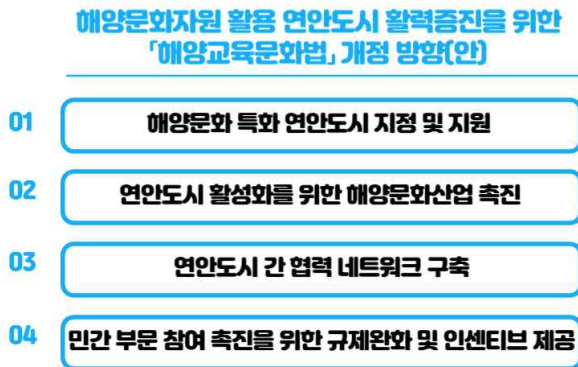
법률	해양교육문화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해수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문체부)
		취소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자료: 각 법률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결과적으로 해양문화 자원의 체계적 활용 및 연안도시 활력증진을 위해서는 해양교육문화법 제3장 해양문화에 해양문화활력도시 지정 제도 도입 조문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해양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별 해양문화 특성을 반영한 도시발전을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해양문화활력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여,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양교육문화법의 현행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에서는 해양문화 자원을 발굴·보존하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를 연안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연결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부족하다. 따라서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해양문화 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 마련으로 해양문화 자원의 공동 활용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 5-1〉 「해양교육문화법」 개정방향(안)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법 개정 방안을 통해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연안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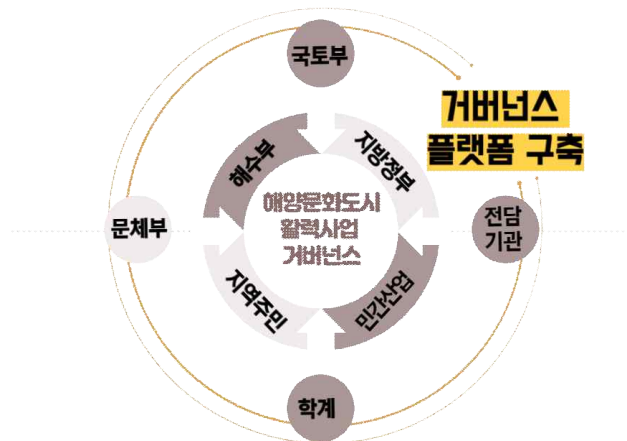
2. 거버넌스 구축

해양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연안도시의 경제적·문화적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학계, 산업계,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거버넌스 체계는 해양문화 활성화와 연안도시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며, 각 부문 간의 명확한 역할을 규명하여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앞서 정책동향 분석과 같이 해수부, 문체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도시 및 지역발전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

협력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부처 간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문체부의 문화도시 사업으로 기 선정된 해양·연안지역의 경우 해수부와 협력하여 공동체 강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랜드마크 구축 등의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과 연계한 해양문화 특화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문체부 문화도시 사업은 소프트웨어가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과 연계하여 해양 문화콘텐츠 융복합산업 육성, 해양문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워터 프론트 개발 등 특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부처합동으로 추진 중인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해수부의 경우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어업인 정착지원 등 어촌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어 부처협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을 통하여 어촌에 국한되지 않고 연안·해양도시로 공간의 범위를 확장하고,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타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그림 5-2〉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거버넌스 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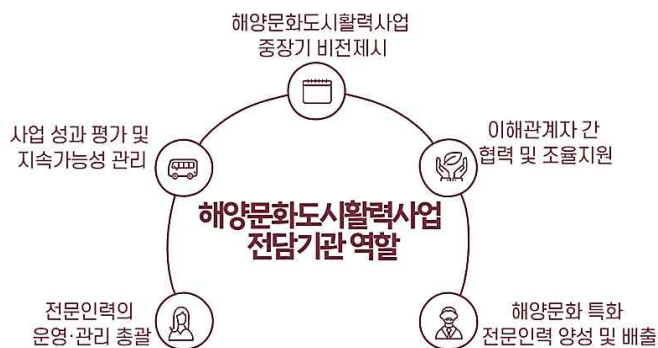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만 중앙정부는 각 부처 간 정책조율을 통해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각 부처의 사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해양문화도시사업의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중장기적 성과 평가를 통하여 사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거버넌스 플랫폼은 전담기관이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전담기관은 해양문화활력도시 사업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각 부처 및 지방정부, 민간기업,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협력과 조율을 지원한다. 또한 앞서 제안한 해양문화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에서 전문인력의 운영·관리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며,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의 배출과 활용을 전담한다. 결과적으로 전담기관은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그림 5-3〉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 전담기관 역할(안)



자료: 저자 작성

3. 비즈니스 수익모델의 지속 개발과 확장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적 재정 지원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비즈니스 수익모델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재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한편, 문화 관련 비즈니스 수익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기간 중에는 지자체의 매칭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확충이 이루어지는 반면, 국비 지원 종료 이후에는 재정적 한계를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1기 문화도시 지정에서 최우수 평가를 획득한 부산 영도구가 재정적 제약을 이유로 문화도시사업의 종료를 결정한 사례는,¹²⁷⁾ 현행 문화도시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국고보조사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문화도시 지정 및 운영 체계는 일률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 인력 운용과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한시적 사업으로 인식되어 장기적 비전 수립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사무의 지방이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역 문화·관광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¹²⁸⁾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도 초기에는 이러한 공적재원을 통해 기초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모사업 또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예산이 지원될 테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127) 국제신문(검색일: 2024. 10. 2.)

128) CC투데이(검색일: 2024. 10. 2.)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요코하마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한 ‘사단법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을 중심으로 민간 및 공공토지소유자가 협력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개발 이후에도 민간사업자가 유지관리하면서 해당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 금융지원 등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도시재생뉴딜이나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대부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관리계획 및 수익모델 마련,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¹²⁹⁾

따라서 비즈니스 수익모델 개발 측면에서는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 중심의 접근보다는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화된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민간기업이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 완화,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ESG 경영 추세에 맞추어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공헌도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공동출자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주체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코하마 사례와 같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전문적인 운영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해양문화자원의 발굴부터 관리, 활용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29) 이로운넷(검색일: 2024. 10. 2.)

셋째,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대기업은 자금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지역 중소기업은 이와 연계된 특화 콘텐츠 개발이나 운영 프로그램 공급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민간기업의 투자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정부 보증, 최소운영수익 보장, 장기 임대 계약 체결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민간투자 심의 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익성이 있는 핵심시설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시설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익시설의 운영수익으로 공공시설의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 전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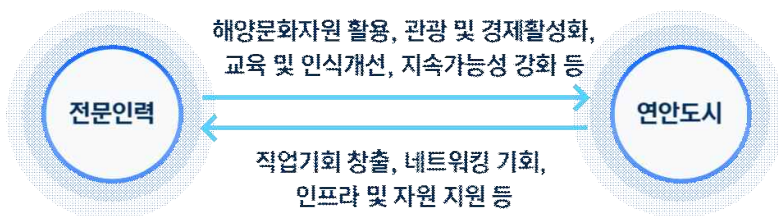
이러한 민간참여 확대 방안과 함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단계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공공 주도로 기반을 조성하고, 점차 민간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자립적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혜택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전문인력 양성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연안도시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적이다. 전문인력은 각 연안도시의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특색있는 해양문화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문화도시활력사업의 전문인력은 각 도시의 해양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관광과 문화산업 등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연안도시 고유의 해양문화를 반영한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해양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한다.

한편 연안도시시는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내 타 분야 및 산업과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내 전문인력을 위한 시설 및 자원제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5〉 해양문화 전문인력과 연안도시의 관계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이와 함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해양문화 관련 스타트업 및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내 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문화 관련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역 내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창우 외(2023), 연안도시의 쇠퇴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관계부처합동(2018.6.),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
- 관계부처합동(2023.12.),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 권기영 외(2021), 바다를 등진 해양도시, 인천대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 국립해양조사원(2024). 국가해양지도집.
- 김성귀(2013), 항만도시와 해양관광, 항만과 도시, 블루앤노트.
- 김홍섭(2010), 우리나라 새로운 해양문화의 도입과 확장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 경제학회지, 27(4), pp. 269-288.
- 김예림(2024),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변용에 대한 해석: 부산 영도를 중심으로(박사학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예림·성종상(2023), SNS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부산 영도의 관광객 핫플레이스 도출 및 유형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5(1), pp. 121-141.
- 나승만 외(2007),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경인문화사.
- 노수경·김수경(202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라도삼(2013), 새로운 패러다임, 문화도시의 가능성, 문화도시·문화마을 포럼 전주포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목포시(2021),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문화도시 조성계획.
- 목포시(2023), 2023 목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보고-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
- 문화체육관광부(2021),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 문화예술 플랜비(2023), 도시를 움직이는 상상력: 도시재생,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바라본 <깡깡이예술마을> 5년, 부산: 문화예술 플랜비.
- 문화체육관광부(2018.5.),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2023.6.),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
진전략 및 지정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n.d.), 2023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 기준 변경 계획.
- 민말순(2007), 남해안시대의 해양문화정책과 협력방안, 경남발전, (85), pp. 39-51.
- 박봉철 외(2024),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대응을 위한 인구활력 제고방안 연구, 부산연
구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2019), 깡깡이예술마을 성과보고서, 부산: 플랜비문화예술협동
조합-깡깡이예술마을사업단.
- 심승구 외(2006),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연구, 문화재청.
- 양혜원(2024.7.2.), 법정 문화도시 관점에서 본 문화도시 영도의 성과와 과제, 2024
문화도시 영도 출구전략 오픈 포럼 발표자료.
- 유승호(2014), 지역발전의 창조적 패러다임 문화도시, GASSE 아카데미.
- 이경엽(2008), 한국 도서·해양민속 연구의 시각과 쟁점, 도서문화, 32, pp. 41-88.
- 이광국(2013),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도시재생정책을 통한 부산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연구 제11집 2호.
- 이동근 외(2003), 역사와 해양의식(해양의식의 체계적 함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 이순자·유희연·김민지(2023),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역 연
계·협력형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정지은 외(2020), 문화적 도시재생을 활용한 문화관광지 사례 연구: 일본 야네단 마을
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제20권 제3호.
- 주강현(2015), 해양문화자원의 발굴 계승 및 활용방안, 해양수산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최일선 외(2023),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

- 양수산개발원.
- 최선호(2016), 한국과 일본의 문화도시 조성정책 비교연구- 광주광역시와 요코하마시를 중심으로(석사학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 홍석준(2007), 종교담론의 문화적 특성과 그 의미: 전남 완도군 생일도의 사례, 도서문화 제29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pp. 403-439.
- 홍장원 외(2017)a, 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장원 외(2017)b, 해양문화자원의 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순일(2009), 한반도 도서지역 문화자원의 등재적 접근: 구비전승물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34집,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해양수산부(2022.9.),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 해양수산부(2018.7.). 해양관광자원 현황조사.

국외 문헌

- Jacobs, J.(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 Lynch, K.(1981), A Theory of Good City Form.
- Montgomery, J.(1995), Editorial: Urban vitality and the culture of cities.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10(2), pp. 101.-110.
- UNESCO, 「수중문화유산보호조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国家海洋局(2016), 全国海洋文化发展纲要.
- 国家发改委·国土资源部·国家海洋局(2012), 国家海洋事业发展十二五规划.
- 国家发展改革委·国家海洋局(2017), 全国海洋经济发展十三五规划.
- 山东省人民政府(2021), 山东省十四五海洋经济发展规划.
- 山东省文化和旅游厅(2023), 推进海洋旅游高质量发展的实施方案(2024-2026年)
- 曲金良(2015), 中国海洋文化发展报告(2014年卷), 社会科学文献出版社.

夏立平(2022), 中国特色海洋文化建设与软实力提升, 学术前沿.

池田 修(2011), BankARTはどこにいく, 新都市.

岩淵聡文(2016), 日本の海洋政策はどうあるべきかー海洋文化資源の視点からー, 一般社団法人平和政策研究所/ 政策オピニオン, 50.

竹内裕二(2017), まちづくりの系譜から“次のまちづくり”を考察する, 筑波学院大学紀要第12集, 筑波学院大学図書館運営委員会.

文化庁(2016), 文化芸術資源を活用した経済活性化(文化GDPの拡大) 資料2.

_____, 文化芸術資源を活用した経済活性化(文化GDPの拡大) 資料2.

横浜市(2004), 創造都市クリエイティブシティ・ヨコハマの形成を向けて提言, 横浜市文化観光局: 横浜市.

ヨコハマ創造都市センター(2014), 創造都市横浜.

文化芸術・観光振興による都心部活性化検討委員会(2004), 文化芸術創造都市ークリエイティブシティ・ヨコハマの形成にむけた提言.

인터넷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검색일: 2024.4.1.)

국제신문(2024.3.14.), 영도구, 최우수 문화도시 됐다,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240314.99099003855>(검색일: 2024.6.18.)

국제신문, 최우수 평가 받은 국가사업 영도문화도시 지속방안 없나,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240924.22003006467>(검색일: 2024. 10.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2.10.),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활력 타운 공모,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7&id=95087895(검색일: 2024.7.24.)

군산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 https://www.kunsan.ac.kr/gunsanccc/board/list.kunnsan?boardId=BBS_0000993&menuCd=DOM_000012210003001000&co

- ntentsSid=5973&cpath=%2Fgunsanccc (검색일: 2024.7.28.)
- 군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gunsan.go.kr/>(검색일:2024.7.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12.27.), 8개 부처 협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활력 타운' 확대 추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174#policyNews>(검색일: 2024.7.24.)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s://www.city.go.kr/portal/business/cityAct/intro01/link.do>(검색일: 2024.7.25.)
- 모두의나라살림(2024.3.20.),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동향, <https://narasallim.net/project/1387>(검색일: 2024.6.18.)
-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로드맵, http://www.mokpour.or.kr/bbs/content.php?co_id=a0001(검색일: 2024. 7.24)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4.3.12.), '2023년 한 해 24곳의 문화도시에서 253만 명 문화향유'(검색일: 2024.7.22.)
- 부산일보(2019.12.31.), 영도구, 문체부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3111365305680>(검색일: 2024.6.18.)
- 산둥성 문화여유청 기사(2024.3.15.), http://whhly.shandong.gov.cn/art/2024/3/15/art_68375_10335968.html(검색일: 2024.6.25.)
- 산둥성 문화와 여유청 기사(2024.04.23.), http://whhly.shandong.gov.cn/art/2023/4/23/art_68380_10320611.html(검색일: 2024.06.25)
- 산둥성 문화여유청 기사(2024.04.27.), http://whhly.shandong.gov.cn/art/2023/4/27/art_68375_10320931.html(검색일: 2024.06.25)
- 산둥성인민정부 홈페이지. http://www.shandong.gov.cn/art/2024/4/3/art_97904_633922.html(검색일: 2024.06.25.)
- 산둥성체육국 기사(2023.12.08.), http://ty.shandong.gov.cn/wap/xwzx/202312/t20231208_4576207.html(검색일: 2024.06.25.)
- 세계로컬타임즈(2024.1.2.),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조성계획 승인. <https://www.segyelocalnews.com/news/newsvew.php?ncode=1065579597979390>(검색일: 2024.7.25.)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naraport.mof.go.kr/newdeal300/newBsnsIntrd.do>(검색일: 2024.7.24.)

연안포털, <https://coast.mof.go.kr/coastKnowledge/lowInfo.do>(검색일: 2024.4.1.)

연합뉴스(2024.3.7.), 근대문화도시 군산 ① 건축물로 만나는 거리,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6131400542>(검색일: 2024.7.28.)

영도구청 홈페이지, <https://www.yeongdo.go.kr/00672/02632/02633.web>(검색일: 2024.6.19.)

이로UNET,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0398>(검색일: 2024. 10. 2.)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8.cao.go.jp/ocean/policies/plan/plan04/plan04.html/>(검색일:2024.7.8.)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http://www.bunka.go.jp/>(검색일: 2024.6.24.)

일요신문(2014.12.16.),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본격착수,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04924(검색일: 2024.7.28.)

전민일보(2021.12.2.), 군산시, 예비 문화도시 선정... 문화공유도시 추진 기대,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393>(검색일: 2024.7.28.)

조선미디어 더 나은미래(2019.1.29.), [도시재생, 길을 묻다] 지역민을 1순위로 둔 군산... ‘찾기 좋은 곳’ 이전에, ‘살기 좋은 곳’ 만들었다,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38590>(검색일: 2024.7.28.)

창조도시 네트워크 일본(創造都市ネットワーク日本) 홈페이지, <https://ccn-j.net/w/hat/>(검색일: 2024.06.20.)

한국어촌어항공단, <https://www.fipa.or.kr/fipa/index.do/>(검색일: 2024.4.1.)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체험휴양마을 현황, <https://www.fipa.or.kr/fipa/cntnts/i-163/web.do>(검색일: 2024.4.1.)

해양교육포털, <https://www.ilovesea.or.kr/main.do>(검색일: 2024.4.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0.2.28.), 어촌뉴딜300사업의 법적 추진체계를 갖추다(검색일: 2024.7.24.)

해양수산통계시스템, <https://www.mof.go.kr/statPortal/main/portalMain.do>(검

- 색일: 2024.4.1.)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12.19.), 잘사는 어촌 시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본격 추진(검색일: 2024.7.24.)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검색일: 2024.6.18.)
- CC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585>(검색일: 2024.10.2.)
- ESG이코노미,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검색일: 2024.9.16.)
- FDi intelligence, Hamburg's HafenCity plan finally comes to fruition, <https://www.fdiintelligence.com/content/Interview/hamburgs-hafencity-plan-finally-comes-to-fruition-73238>(검색일: 2024.7.28.)
- Hamburg, HafenCity 홈페이지, Facts and figures. <https://www.hafencity.com/en/overview/facts-figures>(검색일: 2024.7.28.)
- LEE KUAN YEW WORLD CITY PRIZE, <https://www.leekuananyewworldcityprize.gov.sg/resources/case-studies/hafencity/>(검색일: 2024.7.28.)
- Newcities, Welcome to Europe's Largest Inner-City Project, <https://newcities.org/cityquest-hafencity-hamburg-germany/>(검색일: 2024.7.28.)
- SK E&S Mediaroom, (2022.6.30.). 지역(Local)을 재생(Rise) 하다, '로컬라이즈 군산'의 도전 스토리, <https://media.skens.com/1405>(검색일: 2024.7.28.)
- UNESCO, Speicherstadt and Kontorhaus District with Chilehaus, <https://whc.unesco.org/en/list/1467>(검색일: 2024.7.28.)

법률

-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8780호, 2022.1.18.).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10.31.).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9145호, 2023. 3. 28.).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4

01	섬·바다·강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최일선
02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	좌미라
03	시민친화적 바닷가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정지호
04	연안이용 관리 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석문
05	특별관리해역 관리제도 재편 방안 연구	최수빈
06	해양관할구역 과세권한의 체계적 배분방안 연구	이혜영
07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오서연
08	수산물 무역(수출입) 단기 전망모형 구축 연구	한기욱
09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이상규
10	어촌다움에 기반한 어촌공간관리 방안 연구	이승혜
11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운선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운임선도거래(FFA)를 중심으로 -	김한나
12	내항상선 해양사고 경감방안 연구	허성례
13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김세원
14	해외 항만터미널 확보 전략 연구	김근섭
15	항만 하역능력의 서비스 수준 개선 연구	이화섭
16	국내 무역항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연구	김근섭
17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혜리
18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나영환
19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효과 분석 모형 개발 연구	강무홍
20	한-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	이성우

2023년

01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해상교통관제 대응방안 연구	박상원
02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역규범의 해양수산분야 영향 분석 연구	임병호
0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항만의 대응방안 연구	이나영
04	연안재해 정보 활용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5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최석우
06	마을어장 이용·관리 개선방안 연구	마창모
07	해양생태계 복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사회·생태복원 중심으로 -	최석문
08	주민행태기반 해양정책 수용성 제고 설계 방안 연구	이슬기
09	항만연관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김세원
10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해운선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조아현
11	물류 연계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방안 연구 - 항만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	서정용
12	어업분야 종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연구	고동훈
13	수산물의 디지털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건
14	항만개발사업의 정책영향평가 연구	이수영
15	해운산업의 미래 변화 예측과 국내 대응 전략 연구	이호춘
16	어선현대화 촉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17	연안도시의 쇠퇴와 대응방안 연구	강창우
18	해양범죄 실태 진단을 통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민영훈
19	민간기업의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김지윤
20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연구	허수진
21	지방분권시대의 수산업·어촌분야 대응전략 연구	이호림
22	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김한나
2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물류망 최적화 방안 연구 : 한국-북미 물류공급망 중심	이성우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4년

01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연구	이채령
03	해양안보 MDA 체계 협력적 운용 방안 연구	민영훈
04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안	한장협
05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이슬기
06	부산항 물동량 유치방안 연구	김은우
0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채수란
08	국내 연안여객선 관광·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아
09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순
10	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심성현
11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황수진
12	연안 중소선사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지원방안	류희영
13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김보경
14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한기원
15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장원근
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윤미경
17	국가관리연안항 발전전략 수립체계 연구	신정훈
18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발전방안 연구	권보배
19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전혜은

Ⅰ 2023년

01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이정필
0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일선
03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안승현
04	블루푸드테크 전문기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동림
05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 요인 연구	이혜영
06	양식장 내 어류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오서연
07	해양플라스틱 재활용산업 공급사슬 기반 조성 연구	이윤정
08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ESG경영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	이재호
09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보경
10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정아
11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박수진
12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지원
13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전환방안 연구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4년

01	한-북극권 청색경제 협력사업 추진 방안	김엄지
02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대응력 강화 연구	박수진
03	해양 지속가능성 시범 평가 연구	최희정
04	Scope 3 기준 원양산업 탄소배출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 원양저연승어업을 중심으로	조현주
05	수산물 공급망 관리 개선 방안 연구(한·태 무역을 중심으로)	한기욱
06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박혜진
07	탄소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 선대 교체 수요 추정연구	최건우
08	연안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	김성아
09	한국과 미동부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방안 연구	김가현
10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Ⅲ) -철광석, 화학공업생산물, 기타광석, 잡화를 중심으로	이나영
11	접안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탄소집약도지수(CII) 변화 분석	김보람

Ⅰ 2023년

01	해양수산업 조기경보지수 개발 - 컨테이너 해운시장을 중심으로	권장한
02	AIS 기반 글로벌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분석 연구(Ⅱ) - 우리나라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강무홍
03	우리나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한기욱
04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Ⅱ) - 유류, 철재, 모래, 목재, 양곡을 중심으로	이화섭
05	대기행렬모형을 활용한 선박대기비용 절감 편익 산정 연구	조아현
06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세부항목별 효과산정 방법 연구	이종필
07	해양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연구	최희정
08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방안 연구	황진희
09	해운 경기순환 분석 및 예측 연구	황수진
10	수산물 공급 안정을 위한 수입수산물 전락품목 관리 방안 연구	박혜진
11	항만산업 여성인력 확대방안 연구	이지원
12	선사공동행위의 규제 및 행동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류희영

수시연구 2024-05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인쇄 2024년 12월 29일

발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인 김 종 덕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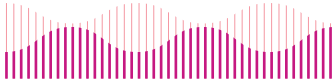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캡스앤디 컴퍼니 (051-911-9890)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Coastal Cities
Utilizing Marine Cultural Resource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9 791168 662018

ISBN 979-11-6866-201-8

93300

값 15,000원